

# 제주지역 귀농 · 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강승진 · 고상환

2011. 11.



# 발 간 사

최근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2의 여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9년 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고 준비와 실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귀농·귀촌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연 이들의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가 씨앗이 되어 앞으로 제주지역 농업·농촌 발전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자료 협조를 해주신 한라일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 연구요약

- 최근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임.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행태의 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9년 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고 준비·실천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귀농·귀촌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현실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연 이들의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실태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자와 현재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함.
- 귀농·귀촌 관련 주요 실태조사 내용은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 향후계획 등을 조사·분석함.
- 조사·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정책개발 부문, △지원체계 구축 부문,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정책개발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수요예측과 정책 투입의 균형,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귀촌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단위 귀농·귀촌 연구지원 확대, △도 차원의 귀농·귀촌 창업 프로그램 공모 등을 제시함.
- 지원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프로그램 특성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행정조직과 독립된 민간주도 전담기구 구성, △시 지자체와 도 간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전담창구 개설 등을 제안함.
-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실행(안정적인 소득, 토지 확보, 운영자금, 영농기술 등), △귀촌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귀농·귀촌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지역 내에서 실천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와 같은 선도적 귀농·귀촌 프로젝트 실행, △귀농 단계별 지원 방안 세분화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사안들이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부문 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바탕에는 귀농·귀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 지역농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함. 즉, 귀농·귀촌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농업 인력의 수급방법이면서 새로운 인적 자원의 유입을 통한 다각적인 농촌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긴요한 농촌발전 정책수단이라 하겠음.
- 인구 유입 및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 귀농·귀촌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큼. 하지만 귀농·귀촌은 귀농 초기 연착륙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겪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은 귀촌자의 준비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귀농·귀촌의 지역 내 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지원이 미흡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귀농·귀촌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 이외에 주목할 만한 사안들을 살펴봄.

## 1. 폐교 등을 귀농·귀촌마을 및 연수원으로 조성

-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가장인 30~50대의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재에 직면함. 폐교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이 이들을 위한 조기정착 및 노동력 문제 해소를 도울 수 있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 마을에 거주하면서 품앗이가 가능하고, 고가의 농기계도 공동구입함으로써 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원-원’ 할 수 있음. 영농 초보자인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시행착오와 해결방법을 정보교환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임. 또한, 낯선 땅에 정착하려는 데서 오는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음.
- 귀농 반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여성들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자녀 교육과 양육문제를 비롯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해결, 귀농 초기 문화적 이질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폐교 자체에서 EM교육, 천연염색,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제조업 등을 여성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음.
- 이처럼 폐교를 이용한 귀농·귀촌마을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명분도 갖추게 되며, 이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폐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습형과 숙박형을 혼합한 ‘귀농·귀촌 연수원’ 설립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2. 멘토(mentor)와 멘티(mentee)를 연계한 육성 방안

-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힘든 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문제이며, 평생 쌓아온 농사 노하우를 초보자에게 전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제주의 언어가 타 지역 출신들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그 중심에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가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인간적 친밀감은 곧 정착과 직결되며, 토지 구매와 대여 등도 도울 수 있음.

- 이들 대학졸업자들이 현장에서의 풍토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의 농사 특성에 따른 노하우 등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귀농·귀촌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현지의 농부들의 현장 점검과 지도가 뒤따라야 함.
- 또한, 귀농·귀촌 성공자들을 활용한 유급제 귀농·귀촌 길라잡이제도의 도입과 귀농·귀촌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이나 일정 기간 농사를 배울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이주민 귀농교육과 원주민 귀농교육 분리 및 give & take 마인드

-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귀농·귀촌 유형, 농업 초보자, 출신지역별 문화나 관습 등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원주민 귀농교육이 서로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마을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해 마을 소일거리나 경조사 등에 먼저 참여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이나 특기를 마을에 먼저 제공 또는 기부하는 give & take 마인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멘토링제도나 마을주민과의 결연 안내 등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공론화

- 제주출신이어서 오히려 당하는 역차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함.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도시화된 신제주나 노형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였을 때 귀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 반면에 서울 강남에서 살던 이가 이들 지역으로 이사 와서 귀농인으로 인정해 달라 요구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 할 근거 없음. 이 같은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귀농 희망자들이 제도적 지원 하에서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민에 적합한 조례개정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 방법 .....	3
II. 귀농·귀촌 개요와 지원정책 .....	4
1. 귀농·귀촌 개요 .....	4
2. 귀농·귀촌 지원정책 .....	14
III. 귀농·귀촌 사례 및 실태 분석 .....	20
1. 귀농·귀촌 국내외 사례 .....	20
2. 귀농·귀촌 성공사례 .....	56
IV. 제주지역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	74
1. 귀농·귀촌 실태 분석 .....	74
2. 귀농·귀촌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	121
V. 요약 및 정책 제언 .....	135
참고문헌 .....	143
부록 1 : 설문지 .....	145
부록 2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	158
영문초록 .....	163



## <표 목차>

<표 II- 1> 귀농 경로 .....	6
<표 II- 2> 귀농 관련 자치법규의 귀농인 정의 .....	7
<표 II- 3>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 .....	12
<표 II- 4>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	13
<표 II- 5>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	15
<표 II- 6> 주요 귀농 교육프로그램 .....	16
<표 II- 7> 귀농·귀촌 정착지원 개요 .....	17
<표 II- 8> 귀농·귀촌 지원 예산집행실적 .....	18
<표 II- 9> 농어촌지역 지정현황 .....	19
<표 III- 1> 취농자에 대한 금융지원 .....	22
<표 III- 2> 나가노현의 농업기술연수사업 .....	25
<표 III- 3> 미국 연방정부 농장지원부서(FSA)의 농업자금 지원 유형 ..	35
<표 III- 4> 외생적 개발과 내생적 개발 비교 .....	46
<표 III- 5> 진안군의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	54
<표 IV- 1> 조사자 일반현황 .....	77
<표 IV- 2> 귀농 동기별 분포 .....	78
<표 IV- 3> 제주지역 선택 이유별 분포 .....	78
<표 IV- 4> 귀농·귀촌 준비 연한별 분포 .....	79
<표 IV- 5> 귀농·귀촌 정보의 습득 경로 .....	80
<표 IV- 6>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 .....	81
<표 IV- 7> 영농계획 유형별 분포 .....	82
<표 IV- 8> 영농계획 품목의 선택 이유 .....	82
<표 IV- 9> 응답자 속성별 투자 규모 .....	84
<표 IV-10> 연령별 각 분야별 준비정도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 .....	86
<표 IV-11> 귀농·귀촌 유형별 준비정도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 .....	87

<표 IV-12>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별 분포 .....	88
<표 IV-13> 응답자 속성별 만족도 차이 .....	90
<표 IV-14> 분야별 요구개선 내용 분포 .....	91
<표 IV-15> 교육 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	92
<표 IV-16> 교육 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	93
<표 IV-17> 인구통계적 특성 .....	98
<표 IV-18> 출생지역 .....	99
<표 IV-19>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 .....	99
<표 IV-20> 귀농·귀촌 예정지역 .....	100
<표 IV-21> 귀농·귀촌 결정의 가장 큰 이유 .....	100
<표 IV-22> 제주지역을 귀농·귀촌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 .....	101
<표 IV-23> 귀농·귀촌 유형 .....	101
<표 IV-24>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 .....	102
<표 IV-25> 귀농·귀촌 관련정보 수집 경로 .....	102
<표 IV-26> 귀농·귀촌 교육 받은 경험 .....	103
<표 IV-27>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 .....	103
<표 IV-28> 귀농교육의 영농정착에 도움 정도 .....	103
<표 IV-29>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노지작물) ...	104
<표 IV-30>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노지작물) ...	104
<표 IV-31>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시설작물) ...	105
<표 IV-32>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시설작물) ...	105
<표 IV-33> 귀농·귀촌을 위한 투자자금의 규모 .....	106
<표 IV-34> 귀농·귀촌생활 관련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 .....	106
<표 IV-35> 귀농·귀촌 준비정도 .....	107
<표 IV-36>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 .....	109
<표 IV-37>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1순위) .....	112
<표 IV-38>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2순위) .....	113
<표 IV-39>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3순위) .....	114
<표 IV-40>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1순위) .....	115
<표 IV-41>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2순위) .....	116

<표 IV-42>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3순위) .....	117
<표 IV-43> 귀농·귀촌 활동 결과, 영농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	118
<표 IV-44> 향후 농촌거주 계획 .....	118
<표 IV-45>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이유 .....	119
<표 IV-46> 귀농·귀촌 전 농사 경험 .....	119
<표 IV-47>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대책 유형 .....	133

## <그림 목차>

<그림 II- 1>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	14
<그림 III- 1> 카고시마현의 취농상담 지원 체계 .....	28
<그림 III-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	31
<그림 III- 3> Friesland와 에밀리아 Romagna 지역 비교 .....	42
<그림 III- 4> 농촌개발활동 형태들 간의 연계 .....	43
<그림 III- 5> 농촌지역 경제 흐름의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 기회 .....	50
<그림 III- 6> 진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 .....	53
<그림 IV- 1> 귀농·귀촌 단계별 분포 .....	79
<그림 IV- 2> 농외활동 여부 및 이유 .....	83
<그림 IV- 3> 귀농·귀촌 자금의 출처 및 용도별 사용처 .....	84
<그림 IV- 4> 분야별 준비 정도 .....	85
<그림 IV- 5> 만족수준의 분포 .....	89
<그림 IV- 6> 귀농·귀촌 준비정도 .....	107
<그림 IV- 7>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 .....	110
<그림 IV- 8>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	121
<그림 IV- 9> 귀농·귀촌 전담기구(예시) .....	127
<그림 IV-10>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 대책 유형 .....	132
<그림 IV-11> 귀농단계별 귀농지원 방안 .....	134

## I.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임.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 자리를 찾거나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행태의 변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9년 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고 준비와 실천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귀농·귀촌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현실임
-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과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농업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105,103명, 2007년 105,004명, 2008년 102,192명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04,802명, 2010년에는 114,752명<sup>1)</sup>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은 농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인구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농촌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

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농축산현황, 각 년도.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귀농·귀촌을 위해 교육 참여자와 현재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준비, 귀농·귀촌 정보수집 방법, 귀농·귀촌 활동계획, 귀농·귀촌 애로사항과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공하는 귀농·귀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음.

##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의 제 현상 가운데 하나로,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함.
-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귀농·귀촌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귀농·귀촌 의미와 현황,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을 고찰함.
- 3장에서는 귀농·귀촌의 국내외 선진사례와 귀농·귀촌 추진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교육 참여자와 실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분석함.
- 이 과정에서 도출된 귀농·귀촌 실태를 토대로 4장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조사·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정책개발 부문, △지원체계 구축 부문,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제언을 통해 제주지역에 귀농·귀촌 활성화하는 데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추진사항들을 제안함.

### 3. 연구 방법

#### 가. 제1단계 : 문헌고찰

-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대책 관련된 자료를 입수, 고찰
- 귀농·귀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귀농·귀촌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고찰

#### 나. 제2단계 : 설문조사 및 현지 인터뷰 조사

##### ①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

- 실시시기 : 2011년 3월 ~ 5월(교육기간)
- 실시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교육 참여자
- 조사대상 및 규모 :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102명
- 조사내용 : 귀농·귀촌자들의 실태파악 등

##### ② 귀농·귀촌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

- 실시시기 : 2011년 10월 11일 ~ 10월 15일
- 실시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조사대상 및 규모 : 귀농·귀촌자 51명
- 조사내용 : 귀농·귀촌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

##### ③ 귀농·귀촌자 간담회

- 실시시기 : 2011년 11월 11일
- 실시지역 : 서귀포시청
- 조사대상 및 규모 : 귀농·귀촌자 34명
- 조사내용 : 귀농·귀촌 정착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 조사방법 : 의견 수렴

## Ⅱ. 귀농·귀촌 개요와 지원정책

### 1. 귀농·귀촌 개요

#### 가. 귀농·귀촌의 의미 분석<sup>2)</sup>

- ‘귀농’, ‘귀촌’의 개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학자들마다 분석하는 맥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지자체마다 귀농 정책의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함.
- ‘귀농’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입안하는 문제, 귀농과 관련한 농촌 발전을 전망하는 문제가 함께 얹혀 있기 때문임. 먼저 학자들이 내린 다양한 귀농 정의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는 자치법규에서 귀농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며, 귀농과 귀촌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것이 농촌 발전을 전망하는 데 적합한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임.

#### 1) 귀농·귀촌에 대한 기존 논의

- 귀농의 사전적 정의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함.(두산동아, 동아 새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krdic.php>) 여기서 귀농자를 과거 ‘농촌’에서 생활하였고, 돌아온 이후 ‘농사’를 짓는다고 전제하고 있음. 이는 귀농을 가장 협소하게 정의한 것으로 위의 정의로부터 몇 가지 파생되는 논의들이 있음.
- 먼저 ‘귀농’의 의미를 ‘직업’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박영일(1998)은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

---

2) 농림수산물식품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연구, 2011.



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 출신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취농자”로 분류하였음. 이정관(1998)이나 김주현(1999)은 직업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귀농인이 반드시 농촌 출신일 필요가 없으며 농촌출신 이외에서 농촌으로 들어와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까지 귀농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런데 이 직업 범주를 확대 해석한 경우도 있음. 1998년 농촌진흥청에서는 귀농의 이동경로와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이동 없음’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이동 없음’은 농촌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을 중단했던 사람이 농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로 볼 수 있음. 즉, 귀농을 ‘농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까지’ 확대한 것임.(강대구, 2005). 여기서는 귀농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의 문제가 사라지며 오직 ‘직업’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정의는 귀농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두 번째로 ‘공간’을 중심으로 귀농인을 정의한 경우로, 남정덕(2000)은 노인이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귀농형 실버타운’이라고 명명하였음.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에서 지내던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을 귀농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서규선과 변재면(2000)은 귀농을 직업으로 농사짓는 것을 전제로 공간을 세분화하여 유형화하였음. 고향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 농촌으로 되돌아온 U턴 귀농자,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한 J턴 귀농자,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I턴 귀농자로 분류하였음.

<표 II-1> 귀농 경로

분 류	정 의
U-turn 귀농인	- 고향인 농촌에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향 농촌으로 되돌아온 귀농인
계획적 U-turn	- 부모와 뜻이 맞지 않거나 농촌 총각의 결혼 곤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시취업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농업은 퇴 또는 결혼에 성공한 후 농촌에 귀농
추출된 U-turn	- 오랫동안 고향 농촌을 떠나 도시생활에 정착한 후에 실직하거나 조기퇴직,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또는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고향 농촌으로 귀농
J-turn 귀농인	-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인
I-turn 귀농인	-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자료 : 서규선·박병덕(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재정리

- 이병철(1999)은 귀농을 반자연적인 도시의 삶으로 멀어져버린 땅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정의. 자연을 파괴하고 반인간적인 현대문명을 치유하고 생계와 건강과 삶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귀농을 보며, 이는 1996년 귀농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며 한국사회에서 귀농을 생태적인 농촌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여기서 귀농의 의미가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미와 함께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까지 포함한 것임.

## 2) 지방자치 법규에 나타난 귀농인 정의

-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나타난 귀농인의 정의로, 자치법규의 공통점은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임. 타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지만 그 앞에 붙는 '조건부'가 있음. 그 조건부는 '가족'의 유무를 포함하는 것과 '연령'을 제한하는 측면이며, '가족'의 유무를 포함시킨 것은 단독 귀농자의 경우 거주가 불안정하여 이주할 가능성이 더 높기에 붙인 단서이며, '연령'은 이미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젊은 층의 유입만을 귀농으로 간주하며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임.

- 자치법규에서 나타난 귀농인을 각 지자체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그 지자체의 농촌·농업 발전방안과 연관되어,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의 귀농인은 위에서 언급한 귀농인의 정의보다 협소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음.

<표 II-2> 귀농 관련 자치법규의 귀농인 정의

시 군	귀농인의 정의
익산시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정읍시	만 50세 미만, 3년 이상 도시 생활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읍면 농촌 동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남원시	농업 외 직종으로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완주군	만 61세 미만,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무주군	만 20~55세 이하,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장수군	55세 미만, 가족(세대원 2인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임실군	가족(세대원 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순창군	가족(세대원 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고창군	만 50세 미만, 3년 이상 도시 생활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부안군	만 40세 미만, 2년 이상 도시생활 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자료 : 장동헌,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2009, 22p.

### 3) 귀농·귀촌 정의를 위한 관점 정립과 귀농·귀촌 정의

- 귀농을 정의하는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음.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거주자의 속성을 고려해야 함. (서용만·구자인, 2005:150). 농촌으로 왔지만, 도회지에 출퇴근하며 도시에 의존하는 경우에 귀농 혹은 귀촌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단지 거주유형이 변했을 뿐,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농촌·농민적 생활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농업 종사도 성격에 따라 식량을 자급하는 수준이 있고 농업이 주소득원인 경우도 있음. 두 경우 모두 귀농이지만 정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최소 영농규모, 영농목적, 영농의 지속성 등의 분류기준 구체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실제 귀농자가 정착한 지역 속성임(서용만·구자인.2005:150~151). 귀농과 귀촌은 흡입지역과 배출지역이 있고, 두 지역의 상호 개념이 구분되어야 함. 현실적으로 도시화 및 교외화가 진전되고 정보화로 통신망이 전국을 연결하며 도시 주변부와 시골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행정구역상으로 귀농·귀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그러기에 흡입 지역은 농촌·농민적 생활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어야 함.
- 마지막으로 ‘농(農)’의 의미를 고려해야 함. 지금까지 ‘농’을 산업으로서 ‘농업’, 혹은 직업으로서 ‘농사짓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음. 그러나 과거와 현재 모두 다양한 일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그 의미에서 농(農)의 의미를 주소득이 농업과 연결된 직업·산업적 의미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농생활’ 전반과 지역민들이 구성하는 농촌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강대구(2006)는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귀농자’와 구분하여 ‘귀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음. 다만 현재 농업인의 정의는 종사 일수와 경지규모,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촌자들의 상당 부분은 귀농자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귀농자로 넓게 규정하여도 무난할 것임. 고성준 역시 거주를 목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업을 부업 수준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촌으로 보고, 귀촌이기는 하나 일정 정도의 농업 영위를 전제로 한다면 귀농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음(고성준, 2007:39).

- 이에 비해 유정규(1998)는 귀촌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는 귀농을 농업의 테두리 안에 한정시키는 정부의 산업적 차원의 귀농정책과 귀농운동본부의 생태추구형 귀농운동을 모두 비판하며, 산업적 차원과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귀농 개념을 정립하고 있음. 즉,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귀촌하는 것까지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시자(2010:6~7)는 귀촌을 귀농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귀촌은 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모든 2·3차 산업을 포함한다고 했으며, 이 논의를 정리하면 귀농과 귀촌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① 귀농과 귀촌은 각각 독립되었지만 교집합이 있는 경우(강대구, 고성준)
  - ② 귀농이 귀촌 안에 포함되는 경우(유정규)
  - ③ 귀촌이 귀농 안에 포함되는 경우(이시자)
- 귀농과 귀촌을 정의하는 데, 이론·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귀농과 귀촌 개념을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다의성 이전에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귀농과 귀촌을 정의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립해야 함. 먼저 귀농·귀촌을 도시민 실업대책을 위한 도구적 측면으로 보는 관점이 있음. IMF사태 이후 실업 급증과 연결하여 각종 실업대책 중 하나로 ‘귀농’이 정책적으로 강조된 상황이었고, 이는 동일하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선택될 수 있는 관점임. 그러나 귀농을 실업대책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실업자의 농업취업’으로 파악한다면 귀농·귀촌의 흐름과 그 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촌과 농업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없음.
- 둘째, 귀농·귀촌을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임. 이 관점에 설 때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동시에 해소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농업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 충원으로 보는 것임.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대안적 관점으로 조망하는 것으로 자립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중사할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얻고, '농'의 가치를 현재의 생태·경제·문화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임.

## 나. 귀농·귀촌의 정의<sup>3)</sup>

- 귀농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함.
- 과거와 달리 도시에서 낙오된 사람이 아닌, 자연과 살기를 원하는 전원생활형 귀농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30~50대의 고학력자로 도시에서 사회적 경력을 가졌던 이들이며 농업·농촌을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고 경제력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석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을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전업귀농,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귀농,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이 있다고 정의하였고, 귀촌은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거나, 농촌에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귀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도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농촌생활을 시작하여 성과와 전망이 좋으면 겸업귀농이나 전업귀농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의한 귀농과 귀촌의 유형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3) 경남발전연구원, 귀농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정책방향, 2010.

① 전업귀농

-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밭농사, 논농사, 원예(채소, 과수, 화훼), 축산(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버섯재배, 임산물 생산업 등 1차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귀농형태

② 겸업귀농

- 농수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족 중 농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소득을 얻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 체험농장, 농가민박, 식당운영 등을 겸하는 유형

③ 농업파생귀농

-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농수축산분야와 관련된 파생사업이 중심인 귀농형태로 식품제조업, 펜션업, 공방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가공업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농사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에 터전을 잡고,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창업을 하거나 도시로 출퇴근 또는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는 등 농촌의 삶을 영위하는 형태
  - 농촌체험농원형 : 도시인들이 직접 농촌을 경험해 보고 농산물도 얻을 수 있도록 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 최근에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음.
  - 농촌창업형 :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제조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
  - 자아실현형 : 자신의 전문분야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형태. 자연 속에서 염색,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전원생활형 :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 창업한 형태. 주말 전원생활형이나 노후생활형도 범주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에서는 ‘귀농인’을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다. 귀농·귀촌 현황

- '9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누적 귀농농가 수는 총 38,446호이며,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8,789호(22.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6,046호(15.7%), 전라남도 5,960(15.5%), 전라북도 5,210호(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926호로(2.4%)로 나타났음.

<표 II-3>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

구분	계	'9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38,446	17,713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부 산	16	15	-	-	-	-	-	-	1	-	-	-	-
대 구	52	52	-	-	-	-	-	-	-	-	-	-	-
인 천	189	95	1	-	1	-	16	28	2	-	-	26	20
광 주	68	53	3	-	-	5	6	-	1	-	-	-	-
대 전	4	2	-	1	-	-	-	-	1	-	-	-	-
울 산	31	24	-	-	-	-	-	7	-	-	-	-	-
경 기	2,095	1,432	54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강 원	3,126	1,373	151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충 북	2,604	1,184	3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충 남	3,330	1,470	111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전 북	5,210	1,847	166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전 남	5,960	3,297	230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경 북	8,789	3,621	191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경 남	6,046	2,787	11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제 주	926	461	93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합 계	38,446	17,713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4.14



- 연도별 귀농 추이('90~'10)는 외환위기 직후 2년간('98~'99년) 귀농농가가 급증하였으나, '00년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서 귀농농가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6 이후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및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귀농농가가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까지 2천 호 이하 수준이던 귀농은 2009년 4천 호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귀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귀농추세는 '90~'99년 사이에 총 461호가 귀농하였으며, '00년 93호로 가장 많이 귀농한 해였으며, 그 후 '05년 7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06년 58호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40~50호 사이의 가구가 귀농을 하고 있는 추세임.

<표 II-4>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구 분	계(%)	'90~'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38,446 (100%)	17,713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29이하	2,850 (7.4)	1,643	65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30~39	12,759 (33.2)	8,135	515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40~49	11,104 (28.9)	4,574	39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50~59	7,885 (20.5)	2,426	155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60이상	3,848 (10.0)	935	28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4.14

- 전국의 귀농·귀촌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의 귀농가구가 12,759호로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11,104호로 28.9%, 50대가 7,885호로 20.5% 순이었음. 외환위기 직후 2년간 30대 및 40대 귀농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귀농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 귀농·귀촌 지원정책

### 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sup>4)</sup>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후계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임.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2009.4.1

<그림 II-1>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 귀농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대학,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수십여 개가 있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2011.

<표 II-5>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담당 부서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국	농산업 인턴제	- 농업분야 창업 준비과정에서 선도농가 농장실습지원 - 귀농교육 과정 이수 후 귀농 희망자 대상
	컨설팅 및 멘토링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선도농가 등이 귀농 초기 단계의 농업인에게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귀농인의 집 조성	-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준비
	농업 창업자금 지원	- 귀농교육 과정 이수자가 농지, 시설 및 설비, 농기계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융자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구입 시 자금 융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비 실비 지원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농촌 지자체가 시설 설치가 수반되는 ‘하드웨어’지원을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도시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연성적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 - 지역 홍보,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교육훈련,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 50호,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 농업 및 농산업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원마을 조성	- 20호 이상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 신규 전입자에게 분양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2009.4.1

- 그 가운데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주 또는 100시간 이상의 18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 관련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그 밖에도 농촌진흥청이 별도로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수년 사이에 예비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양이 민간부문의 각종 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 속에서 증가한 것은, 도시민이 귀농을 결심하고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 경험하는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이 농업경영 기술 및 정보의 습득 문제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임.

<표 II-6> 주요 귀농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	비 고	지원기관
전국귀농운동본부	- 생태귀농학교 운영	2~3개월(이론, 실습)	
	- 귀농전문학교	3개월(장기 합숙, 실습)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도시민 웰빙농사 교육	4주(이론, 실습)	
천안연암대학	- 온라인 귀농교육	1개월(이론)	농식품부
	- 오프라인 귀농교육	1~3주(이론, 실습) 여러 기관·단체 위탁	
	- 합숙형 귀농교육	2~4개월(장기합숙, 실습) 여러 기관·단체 위탁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경기 귀농귀촌학교	7개월(이론, 실습)	경기농림진흥재단
한국농수산대학	- 귀농·귀촌 교육	2개월(이론, 실습)	농식품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엘리트 귀농대학	4개월(이론, 실습)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7개월(이론, 실습)	농촌진흥청

- 한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인 또는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도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함.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건수는 2009년 들어 특히 크게 늘었음.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귀농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확산된 귀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귀농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표명, 심화되고 있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추세에 대한 위기의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2010년 말을 기준으로, 62개 시·군과 5개 도에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 ‘귀농인 지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교육훈련 경비 보조, 귀농인 대상 보조 및 용자 지원사업, 빈집 수리비 지원, 의료비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농지구입 자금 지원, 영농정착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귀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곳도 상당수 있음.

## 나.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정책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는 총 4개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0년 11월 현재 총 219호를 대상으로 총 5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표 II-7> 귀농·귀촌 정착지원 개요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농업창업 (용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li> <li>◦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li> <li>* 1천호; 세대당 2억 원까지 용자</li> </ul>
주택구입·신축 (용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li> <li>-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li> <li>-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li> <li>-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li> <li>*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용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li> <li>-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li> <li>-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li> <li>*200호; 세대당 4천만 원 한도</li> </ul>
주택수리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li> <li>*빈집 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li> <li>-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li> <li>*3천호; 세대당 5백만 원 한도</li> </ul>
귀농 농업인턴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 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 시 인건비 보조</li> <li>*750명; 1인당 월 120만 원, 6개월(국고 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li> </ul>

<표 II-8> 귀농·귀촌 지원 예산집행실적

(단위 : 호,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실적		잔액
		계	국비	도비	용자	자담	사업량	사업비	
계	219	5,602	239	109	5,240	14	53	1,538	
농업창업 지원(용자)	74	3,700	-	-	3,700	-	15	1,221	59/ 2,479
주택구입 지원(용자)	77	1,540	-	-	1,540	-	5	130	72/ 1,410
빈집수리비 지원(보조)	58	290	203	87	-	-	23	115	35/ 175
농업인턴사업(보조)	10	72	36	22	-	14	10	72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10년 귀농·귀촌 정책수립을 위한 워크숍, 2010.11

- 귀농인 교육실적으로는 1차 '09년 7~11월까지 40명이 교육·수료하였고, 2차 '10년 3~6월까지 132명이 수료하였음. 그리고 귀농인 지원센터는 총 8개로 농업기술원 5개소, 제주농협지원본부, 제주시지부, 서귀포지지부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음.

#### 다.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현황

- 읍·면지역과 동의 녹지·관리·농림지역에 한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특례조항에 의해 동의 주거지역 중 일정기준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03조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 제3조 (농어촌 지역의 지정)

○ 지정기준

- 지정범위 : 법정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
- 지정기준 : 농어업인 수 또는 농지면적(목장·임야 포함) 기준
  - 농어업인 수 :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25%를 초과하는 지역
  - 경지면적 :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인 지역

○ 조사 제외 :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농어촌지역 지정)

- 제주시(12개동) : 삼양3동, 회천동, 용강동, 월평동, 영평동, 오등동, 오라3동, 해안동, 내도동, 도평동, 이호1동, 도두2동
- 서귀포시(1개동) : 영남동

<표 II-9> 농어촌지역 지정현황

구 분	법정동수	조사제외	조사결과(동지역)			일부지역 (통지역)
			계	지 정	비 지 정	
계	62	13	49	39	10	3
제 주 시	40	12	28	19	9	3
서귀포시	22	1	21	20	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10년 귀농·귀촌 정책수립을 위한 워크숍, 2010.11.

### Ⅲ. 귀농·귀촌 사례 및 실태분석

#### 1. 귀농·귀촌 국내외 사례

##### 가. 외국의 귀농 정책

###### 1) 일 본<sup>5)</sup>

- 일본의 귀농지원정책은 취농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음. 취농 정책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이 귀농지원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서는 각 지방단위의 취농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가) 신규 인력의 확보에 관련된 정책

- 일본은 농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인하려는 몇 가지 정책을 펴고 있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농업분야로의 유인책은 신규 취농 사업과 영농후계자 육성 사업이 있음.

###### ㉠ 신규 영농취업사업

- 신규 취농사업은 전국 농업 회의소 내에 있는 전국 취농 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취농 세미나, 취농 상담, 농업법인의 회사 설명회 등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임. 이는 각 현단위의 농업회의소가 있고, 현 단위로 재단법인 형태로 농림어업육성공사, 농업후계자 육성기금협회, 농업육성기구, 또는 현의 일부 부서에서 신규 취농자들을 지원할 연수자금, 연수기관의 프로그램 안내, 취농상담, 취농체험과 실습을 도와줄 프로그램이 있음.

---

5) 농림수산식품부,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2005, pp.42~61.



- 이들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업회의소와 신규 취농상담 센터 등이 있고, 취농준비학교가 있으며, 현단위에서는 신규취농자의 유치를 위하여 외부 취농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도 함. 신규 영농취업사업이 시작된 1980년 중반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어 국제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후 총결산'이라는 형태로 전후 일본을 지탱해 왔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 시기였으며, 신규 영농취업사업의 발상은 극히 단순함. 농촌에서는 농지의 유희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농업·농촌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양측의 요구를 결합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한 것임(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 신규 취농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매력 있게 하고, 청년이 영농취업을 하기 쉽도록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집적과 생산기반 정비 등 구조정책의 추진, 생활환경의 정비, 연수교육 실시 등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원내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기술습득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음.
  - 청년농업자의 영농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합의 도출, 선진 농가 현지연수
  -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현 농업대학교에서의 단기 연수
  - 개량보급원을 통한 기술·경영 방법의 지도 강화
  - 농업대학교에서의 실천적 연수 교육
  - 국내외 선진농가에서의 파견 연수에 대한 지원
  - 농업개량자금 중 연수교육자금의 지원
- 농지확보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음.
  - ① 신규 영농취업 가이드센터 농지정보 제공 및 영농취업 상담
  - ② 신규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해 농지 구입
  - ③ 축산부문에 있어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한 이농지 정비

- 자금확보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음.
  - ① 농업개량자금조성법 개정을 통한 청년 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의 신설(경영개시에 필요한 무이자 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 농업 취업자에게도 확대)
  - ② 농림어업금융공고의 농지구입자금에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 ③ 농업근대화자금에 있어서 신규 영농취업 원활화자금(운전자금)제도의 신설
  - ④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조치(농기계의 할증상각제도)
- 신규 취농자를 비롯한 농업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등에 대해 실천적인 연수에 의한 기술의 습득, 그 외 취농의 준비, 경영 시작시의 시설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취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농 계획을 작성하여 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인정 취농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인정 취농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시 18~55세 미만으로 청년층의 취농과 중노년층의 취농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사의 허가가 있다면 65세까지도 인정 취농자가 될 수 있음.

<표 III-1> 취농자에 대한 금융지원

용 도		융자한도액	이율 및 융자대상	반환기간
취 농 지 원 자 금	취농농업연수	농업대학교 등 : 5만 엔 선진농가 : 월 15만 엔 지도연수(청년) : 200만 엔	무이자 농업기술·경영수법 습득을 위한 실천적인 연수의 경비	• 청년 평장 : 12년이내, 거치 4년 조건불리 : 20년, 거치 9년
	취농준비	200만 엔	무이자 취농처의 조사, 취농에 수반 하는 주거의 이전, 자격의 취득 등 취농에 해당하는 사 전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	• 중노년의 경우 평장 : 7년, 거치 2년 조건불리 : 12년, 거치 5년

용 도		용자한도액	이율 및 용자대상	반환기간
	취농시설자금	청년의 경우 경영개시초년도 : 2,800만 엔 경영개시차년도(5년까지) : 900만 엔	무이자 농업 경영을 개시할 때의 시설의 설치,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청년 평장 : 12년, 거치 5년
		중노년의 경우 경영개시초년도 : 1,800만 엔 경영개시차년도(5년까지) : 900만 엔		중노년 평장 : 12년, 거치 5년
농업근대화자금	신규취농 원활화자금	축산시설원예 : 400만 엔 그 외 경영 : 200만 엔	1.6% 취농 후 3년간 경영자금 인정 농업자는 취농 후 5년간	7년 이내, 거치 3년
	특정 농가 주택자금	1,800만 엔	1.6% 농가 주택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 자금	15년 이내, 거치 3년
농지취득자금 (개인의 경우)		500~7,000만 엔	실효금리 1.6% 농지 등의 구입	25년 이내
토지이용형 경영체 육성강화자금 (개인의 경우)		1억 5천만 엔 혹은 농업 사업비 80%	실효금리 1.6% 토지 이용형 농업 부문에서 경영면적의 확대에 필요한 자금	25년 이내
농업경영기반 강화 자금(개인의 경우)		1억 5천만 엔	실효금리 대부기간에 따르고 1.05~1.6% 농지 취득이나 기계 시설 투자 등에 충당하는 장기자금	25년 이내 중 거치 10년
농업경영개선 촉진 자금(개인의 경우)		채권최고액 500~2,000만 엔	1.4%(변동금리) 단가의 운용자금	상황기간 1년 이내

- 주1) 청년 등 취농촉진법에 근거하는 인정취농자가 대부 대상, 청년의 경우(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 중노년의 경우(40세 이상 55세 미만, 지사 특인으로 65세까지 가능).
- 주2) 경영 개시 차년도 이후(2~5년도까지)는 자금 수요의 2분의 1 이내.
- 주3)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자금 및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은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이 기초를 두는 인정취농자가 대부 대상
- 주4) 이율은 평정13년 5월 18일 현재. 이율은 공정보합의 개정 등에 의해 변동

자료 : 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01). 新規就農ガイド事業. [On-line].  
<http://www.nca.or.jp/guide/howto.htm>

#### ㉔ 농업후계자 육성 사업

- 일본에서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56년의 농업개량보조금조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1964년부터 후계자 육성기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음. 이 법은 농업개량자금제도에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을 설치하여 자금 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케 하고, 정부 및 도도부현이 주관이 되어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음(최현주, 1994).
-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미래의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를 육성하고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대책을 학교교육단계에서의 후계자 대책, 농업후계자 연수교육, 농촌청소년 조직 활동 조장, 농업사제도, 자금지원제도 등이 있음.
-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시책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음.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졸업 예정자에 대한 푸른 학원 개최사업, 고교 졸업 후에는 강좌제 연수사업을 통해 취업 중 농업기술 습득에 대한 단계적 연수를 실시
  - 둘째,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제도를 통해 자금지원과 동시에 농업사의 인정으로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높여주고 생산실습,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시설 이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셋째, 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촌청소년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정부 및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설치도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시책상의 특징 하에 사회교육의 형태로 추진되는 농업후계자사업 체계화한 형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

#### 나) 연수교육

- 연수교육은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 현 농업자대학교, 농촌청년강좌제도, 농촌청소년 해외연수의 4가지 유형이 있음. 이들 기관에서의 연

수비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연수가 있음.

-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는 장래 농업을 짊어질 농업자상을 전망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농업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농업자를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1968년에 설립되었음. 입학정원은 각 년도 총 50명이며 교육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하는 마음자세를 고취

둘째, 3년의 교육기간을 통해 집합교육,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교육효과 증대

셋째, 소수정예교육에 의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계발하고 적성을 살리기 위해 전공교육 지도관을 배치하는 동시에 교육·연구 및 지도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실시

넷째, 집합교육기간 중에는 전원 기숙사에 입학시켜 기숙생활을 통해 자기 확립과 집단 활동의 의의를 터득시켜 지역사회에 있어 중핵자로서의 인격형성을 도모

<표 Ⅲ-2> 나가노현의 농업기술연수사업

사업명	대상자	사 업 개 요
농업자대학교 영농학부	입학자	영농학과 : 작물(원예 작물 포함)의 재배, 가축의 사육 및 농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농업경영자 양성 *연구·실과 : 농업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습득시켜 농업 경영자를 양성
선진적 농업경영체 연수사업	30세 미만	현 내외의 선진적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 및 농업 생산 법인 등으로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농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
농업 연수생 해외파견사업	18~30세	국제적 시야와 뛰어난 경영 능력을 기르기 위해, 미국 및 유럽에서의 1~2년간의 장기 연수 실시 실시 주체(회사) : 국제농업자교류협회
청년 농업자 연수 사업	30세 미만 농업취업 청년	*기초 강좌 : 농업 경영 및 농가 생활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파머 육성 강좌(NF강좌) : 작 농별의 전문 기술, 지식

사업명	대상자	사 업 개 요
		의 습득과 경영관리 능력 및 실천 능력을 기른다. *종합 강좌 : 지역 농업의 담당자 및 경영체의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도의 이론을 학습
숙련 농업자 강좌개설사업	40~65세까지 농외산업 이직취농자	전문 기술의 시찰이나 작목별 전문 기술의 습득, 동료 만들기 등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좌제 연수를 실시
여성농업자 세미나 개최사업	40세 미만 여성농업 종사자	농촌을 담당하는 농촌 여성으로서 필요한 농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기초적 지식 기술을 습득
	40세 이상 여성농업 종사자	작목별의 농업 경영·생산기술, 생활 기술급농촌의 당면하는 과제해결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지역 리더를 양성
	강좌제 연수 수료생	농촌 생활개선 실천 집단의 조직화,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선진지예의 시찰 연수 등을 실시해, 지역의 톱 리더를 양성
농업기계 이용 기능연수	실시 요령에 정한 자격 구비자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구조·기능·조작의 기본, 안전 사용 등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다. 대형 특수(농경차), 견인 면허의 취득 가능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nagano/shien.html>.

- 이들 외에도 취농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일본 전역에 35개 교가 있으며, 이들은 현립농업자대학교도 있고, 현 취농지원센터도 있으며, 농업전문학교나 농업공사, 농업학원, 연수센터 등으로 구성

#### 다) 농업후계자의 자주적 집단 활동조장

- 농업후계자에 대해 농촌사회인으로서의 협동정신을 증진하고 자질을 개발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집단활동임. 이러한 활동으로는 농촌청년이 실천을 통해 습득한 사업 활동의 결과를 교환하는 농촌청소년기술교환대회, 농업경영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법 및 발전방향을 현 또는 전국단계에서 연구·검토하는 청년농업자회의, 농촌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단체운영방법 등을 주로 현 단계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농촌청소년지도자 연수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후계자의 집단생활을 조장하고 있음.

#### 라) 청년농업사제도

- 농업사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하여 전업적 열등감을 없애고 엘리트 농가를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1967년 나가노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업사제도는 청년농업사 육성사업과 지도농업사 활동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농업사 육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봄.
- 청년농업사제도는 농업자로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대감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농업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외에 현단계 또는 보급소단계에서 수시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년 1회 선진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청년농업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청년농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자 교육실시에서 고교졸업과정 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강좌제 연수를 이수한 자
  - ② 일정한 영농경험을 갖고 장래에도 영농경험을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추진자가 될 35세 미만의 자
  - ③ 농촌청년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 ④ 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

#### 마) 일본의 취농사업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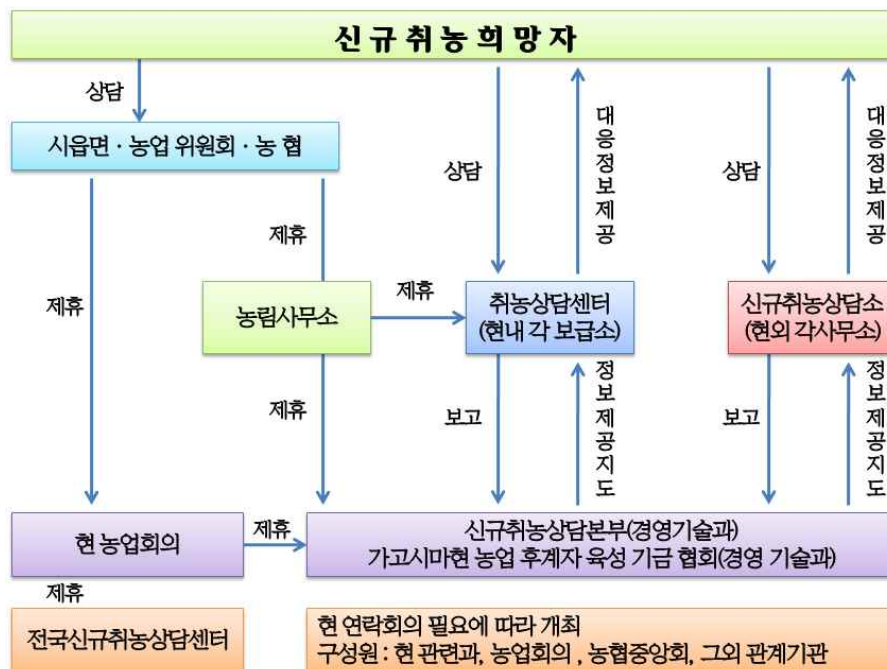
- 지금까지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과 취농자 유치 사업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농업체험학교를 개최·운영하고, 고교졸업 예정자에 대한 푸른학원 개최사업을, 고교 졸업 후 취농 중인 자에게는 강좌제 연수사업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후계자를 교육·지도하고 있음.

둘째, 지도력이 있고 영농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른 농촌청년에게 청년농업사제도를 통해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주고 있음.

셋째, 각 도도부현은 다양한 취농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Homepage와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지정하여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고, 각 도도부현의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취농사례, 교육기관,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자금 지원, 취농상담센터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안내하며, 상담센터는 청년농업자육성센터, 농업회의, 농촌청소년 육성재단 등의 귀농인력 육성이나 확보와 관련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행정 부서를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의 협력을 통하여 취농에 대한 상담,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 및 연수 기관 안내, 자금대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넷째, 이들은 여러 관련부서들이 협력하여, 취농자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이들은 각 지역에 있는 취농준비학교나 프로그램과도 관련을 맺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은 조직은 전국적인 연계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kagosima/ippo.html>.

<그림 III-1> 카고시마현의 취농상담 지원 체계



- 이와 같이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착실히 정착되고 있으며, 이는 자질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본적으로 농업을 매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 환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신규취농자의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진흥의 중간적인 담당자로서 의욕과 능력을 갖춘 농업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시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 2) 미 국<sup>6)</sup>

- 미국은 귀농자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은 농업분야 자금 지원과 각종 재해에 대한 자금 지원, 신규 창업자들에 대한 자금들이 이에 해당할 것임. 농업분야의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사업들로 구분되며, 미국은 도시지역의 확대에 인하여 농촌과 도시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농촌지역은 대개 인구가 적은 town 지역을 말하고, 도시와 도시간의 주변부 지역으로서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으로 농촌지역 학생 수의 비율은 농촌을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나, 25,000명 이하의 인구가 핵심도시가 없는 주변부의 인구가 분산된 형태로 되어있는 지역을 농촌으로 파악하는데, 전체 학생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7%정도임.
- 미국의 귀농인에 관련된 정책은 일차적으로 농업정책에서 파악해야 할 것임.

### 가) 농업정책

- 미국의 농업정책은 1996년 농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식부면적의 적절한 통제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함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지나친 가격 지지는 농산물 공급의 과잉 문제를 초래하여 재정적자 누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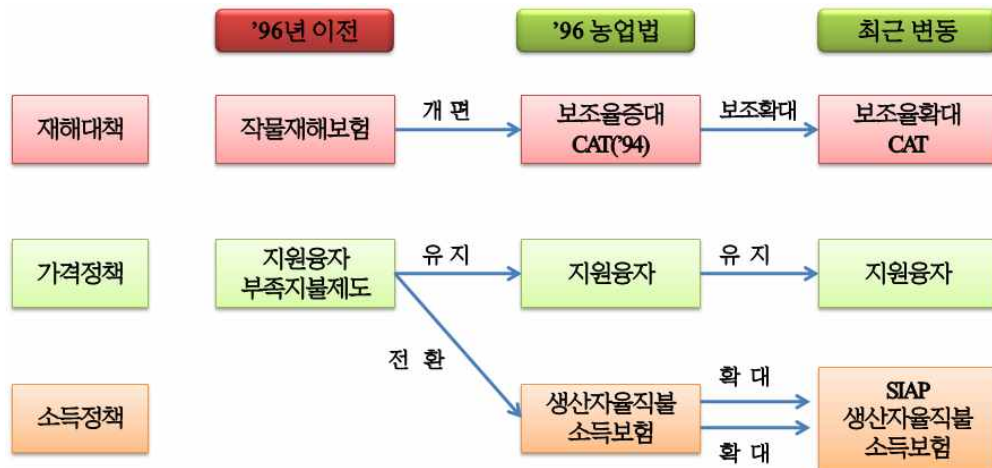
---

6) 농림수산물식품부,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 방안 연구, 2005, pp.62~79

주요 원인이 되었음. 특히 1980년대 이후 재고 누증과 수출 보조로 인한 세계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출 침체로 농산물협상이 시작되었음. 따라서 미국은 UR 협상결과를 이행하던 1996년에 농업법을 제정하여 과거와는 달리 소득보상과 지원을 생산이나 가격에 연계시키지 않고(decoupled income support)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골격을 전환하였고, 예기치 못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안정 장치로 다양한 작물재해보험 정책을 도입하였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미국의 농업정책은 크게 재해 대책, 가격 정책, 소득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및 소득 불안정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보험, 수입보험제도의 확충과 다양한 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재해대책임. '96년 이전에 있었던 작물재해보험은 '96년 농업법 제정을 통하여 보조율이 증대되었고, 특히 '94년에 CAT (Catastrophic Insurance)를 제정하여 최저한도의 보험으로 작물별로 연간 \$60을 내면 50%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보조율 확대되고 있음.
- 둘째, 국내 및 세계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농민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융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마케팅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와 융자부족지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통해 가격대책을 수행하게 되었음
- 셋째, 이전에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었던 부족지불제도(1973년 농업법)와 생산조정제도(1933년 농업조정법)를 폐지하고, 식부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생산자율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2000~2002년 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한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들 외에도 농림부 농장 서비스부는 재해지원, 농장자금, 생태계보

전, 가격지지, 상품, 환경, 상품신용회사, 원조계획, 담배정보 등의 부분을 담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농림부 농장 서비스부(FSA)는 농장 생산물과 보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상적인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자금을 만들어주며, 원조계획프로그램 담당자는(The Outreach Programs Staff) 농장서비스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하여 농업인과 축산인에게 알려주며, 불리한 농부들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이나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을 비롯한 FSA프로그램에서 덜 지원되었던 참여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임.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

<그림 III-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 이들은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의 농부나 목부, 제한된 자원의 토지소유자나 경영자, 소수민족집단(아메리카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알류산 사람들), 여성, 물리적으로 도전받는 집단이나 FSA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한된 이익을 받은 사람, 종교적 소수와 구성원, 소규모 특수작물 재배자, 유기농 재배자, 그 지역의 대다수 농부와는 다른 생산실제를 가진 농부들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들 외에 농림부 농촌개발부서는 주택구입에 대한 안내와 법인 사업에 대한 안내, 농기계와 장비판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이는 정부

소유재산으로서 단일가족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사업법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며, 이들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농장자금 프로그램으로서 농장서비스부서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나) 농업인력 현황

- 미국의 농업·농촌은 산업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으로 인해 정체위기(crisis of identity)를 맞이하여 '90년대 말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인구가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러나 지난 '90년대의 농민의 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량문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등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농 인구의 감소 및 농촌 귀환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 거주주민의 수는 증가하였음.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도시가 변두리지역까지 확장되면서 농촌인구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농촌인구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농가인구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약 24.1%에 해당하는 150만명 정도가 감소하였음(최민호, 1993).
- 1910년에는 농장에 거주하는 농민이 전체 국민의 34.8%에 달하였으나 1930년에는 25%수준으로 떨어졌고, 1960년에는 10%, 1970년 이후에는 전체의 5% 수준으로 떨어졌고, 1999년 기준으로 632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 인력의 부족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임.
- 이러한 추세는 농촌과 도시의 인구 교체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 인력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였는데, 중서부에는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사스, 아이오아,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다, 위스컨신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농업 인력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농업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전업농, 제일종 겸업농, 제이종 겸업농을 포함하는 '영농직'이고, 둘째, 목동직, 농기계 운전직, 농장관리직, 노임 노동직

으로 포함하는 '영농 노동직'이며, 셋째, 유통시장업체, 가공공장, 농기계공장, 농화학 공장직을 포함하는 '농업 산업직(agri-business)'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농업 공무원직, 농업 관계 협동 조합직, 공공 및 사설 농업 단체직을 포함하는 '농업전문직'임.

#### 다)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시책

##### ① 연방정부의 영농후계자육성법

- 영농신용법 : 영농신용법의 발의는 농업과 농촌지역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농민들에게 신용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영농재정기반을 건실하게 하고 영농기술이 향상을 꾀하여 미래에 자립영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으며, 특히 미래의 영농후계자와 농장주(rancher)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영농후계자들에게 금융대출을 신용만으로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임.
- 영농신용법의 핵심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농후계자(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신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영농후계자와 목장주에게 영농설비의 대여 혹은 손쉬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지원 행정기구(Farmers Home Administration)의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의 진행
  - 영농후계자들의 신규 농지구입에 대한 지가대여지원 및 대출에 대한 새로운 관리 프로그램 수립
  - 영농후계자의 대여 신청 시 신속한 처리절차 수립
  - 농민의 부채지원을 법규에 수립된 필요수준으로 수정
  - 공인된 대출 프로그램 수립
  - 영농후계자의 지원을 위한 연방과 주간 협력체계(제휴) 수립
  - 농가지원행정기구에 의해 보증된 재정지원자에게 대부 차용의 촉진
  - 10년까지 FHA 직접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 제한
  - 총 15년까지 직접적 또는 보증된 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 제한
  - 50만 달러 혹은 그 이하의 보증대부에 대한 간소화된 신청서 필요

- 농가지원행정기구는 성별로 신청자를 분류
- 특히, 이 법안은 미래의 성공적인 자립농가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대출과 함께 농민들이 일정한 영농기술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대출지원 이전의 5년간 농가가 성공적인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것을 기본조건으로 영농교육 프로그램은 대출 후 대출금 사용관리, 재정평가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정부의 농무장관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영농에 대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있음.
- 창업자나 가족 규모 농가를 위한 농업자금 지원 : 미국 농무성은 농장지원부서(Farm Service Agency)를 통해 농장 상품과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얻을 수 없는 농업인에게 자금 대출 및 보증을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농장의 생산과 관리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자와 협력하여, 재상환이나 연기, 이자율 감소, 부채 감소를 위해 환경에 민감한 토지 보존을 위한 수용, 부채를 현재 시장가치로 삭감하는 것 등을 하며 이 부서는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을 시작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농장 구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또는 운영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농장소유권 확보 자금, 운영자금, 청소년자금, 창업자금, 사회적으로 불리한 농부 대출자금, 긴급자금대출(emergency loan), 분할자금에 대한 직접 대출이 있고, 대출자금 보증이 있음.
- 이들 외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2004년 10월 24일 현재 1,032개 종류에서 6억 5천 7백만 불 자금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금은 주별로도 다양한 농업자금이 존재하고 있음.

<표 III-3> 미국 연방정부 농장지원부서(FSA)의 농업자금 지원 유형

프로그램유형	최대한도	이자율과 조건	용 도
직접농장 구입자금 대출	\$200,000	-최대 40년까지 대출 가능 -기관의 대출비용에 따른 이자 -정상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들은 임시적으로 제한된 이자 가능 -총 대출액의 50%가 타 대출자에 의해 제공되면 이자율 5%, 4.875%(2005년 11.1이자율)	-토지구입 -건물건축, 개량 -토양과 수질보전
창업농 최초분할자금 대출 (농장구입자금)	구입가격 평가분 40%이하 구입자금과 운영자금 \$200,000 보 증: \$852,000	-기간: 15년, 이자율: 4%이하 -잔액을 사설금융으로 얻는다면 95%보증. 보증비 면제 -구입액/평가액은 \$250,000이하 -구입가격이나 평가액 중 낮은 것 을 기준으로 함 조인트 자금부담 계획 있음	-농장과 목장 구입 (FSA가 구입한 농장을 창업 농이, 구입 후 135일 이내에 평가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우선권부여. 단 2인 이 상의 창업농이 있을 때는 우 선으로 선택)
창업자금 (농장구입자금)	\$200,000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창업자금(운영 자금) 대출	\$200,000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직접운영자금 대출	\$200,000	-1~7년 기관의 대출비용에 따른 이자율 변화 정상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제한이자 가능 4.5%	-가축, 가금, 장비, 사료, 종자, 농약, 기타 농업자재 구입 -토양과 수질보전 -제한적 부채 보충 -비농장 기업 사용불가
직접긴급자금	실 제 손 실 액 100%나 최대 \$500,000 (목적, 상환 능력, 담보물 에 따름)	-부동산 목적이 아닌 경우 1~7년 -실물손실은 40년까지 -이자율: 3.75%	-필수재산의 복구나 대체비 지원 -재해년도 생산비의 일부나 전부 지불 -필수 가족생계비 지불 -농장운영의 재조직 -제한적 부채 상환 가능
운영자금 보증	\$852,000 (매년 인플레이 반영 조정)	1~7년, 대개 금액 90%까지 가능 (단, 위험률에 따르며, 대출목적이 직접 FSA농장신용프로그램 부채 의 보충이나 창업농의 분할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95% 보증가능) -대여자가 평균적 농장고객에게 부과된 이자 이내. -정상이자가 어려운 사람은 4%의 이자율 보조	부채 보충에 사용가능함 을 제외하곤 직접운영자 금과 동일

프로그램유형	최대한도	이자율과 조건	용 도
농장구입자금 보증	\$852,000 (매년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40년까지 대여자가 평균적 농장고 객에게 부과한 이자 이내	부채보충에 사용가능함을 제외하곤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청소년자금	최대 \$5,000 상환에 대한 서명 (본인, 보호자)	중간정도의 프로젝트(물리적 크 기, 자본요구, 전반적 목표에서)에 만 자금 지원가능 자금담보는 판매용 작물, 가축, 장 비, 기타 자금으로 구입한 항목 상환기간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다름. 상환계획은 FSA와 수립함. 농촌청년에게 4-H나 FFA, 기타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중규모 생산과제의 성립과 운영을 지원함. 각 과제는 지도실습프로그램의 부 분이며, 조직 지도자의 도움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자금 을 상환할만한 소득을 산출하고, 청소년에게 실제적 사업적, 교육 적 경험을 제공함.	가축, 장비, 자재의 구입비 필 요한 장비의 구입, 대여, 수리 비과제 진행을 위한 운영비
사회적 불리 농업인 자금	농장구입 자금  농장운영 자금	직접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7 년이나 담보보장에 따르며, 이자 율은 정부대출율에 따름. 직접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은 40년 까지 자금보증의 이자는 대여자에 의하여 결정되나 평균농업대출이 율을 초과하지 못 한다. -직접자금(운영, 구입자금) 모두 FSA가 지원 -보증농장자금은 연방이나 주의 감독을 받는 대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FSA의 보증을 받음. 일부주는 FSA보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장자금을 운영. 전형 적으로 FSA는 자금이 실패하였 을 때 발생할 손실의 90~95%를 보증	-농장구입자금은 농장구입과 확대, 농장운영에 필요한 도 로나 지역권의 구입, 건물의 신축이나 개량, 토양과 물보 전과 개량 촉진, 폐지비의 지 불에 사용. -제한된 직접농장구입자금은 농장구입에만 사용됨 -농장구입보증자금은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 -농장운영자금은 가축, 가금, 농장장비, 사료, 종자, 연료, 비료, 농약, 우박과, 기타 작 물보험, 식품, 옷, 의료보호, 고용인력을 구입에 사용가능 -부채상환, 가정용 용수 시스 템 설치와 개선, 가축이나 관 개, 기타 개선에 사용 가능.

자료 : 미국 USDA, Farm Service Agency, Retrieved 2006,1.3.

<http://www.fsa.usda.gov/pas/publication/facts/html/farmloaninfo04.htm>.



-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 :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은 법인보다는 영농이나 농장운영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자는 첫째,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계를 맺은 소유주와 구성원 모두, 둘째,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장소유주와 그 구성원들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지속적인 영농이나 농장경영을 위해 해당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이 항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최초 지원을 받은 농장 및 농민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5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장운영방식
  - 농장운영에 의해 나타난 농산물의 양과 유형
  -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될 생산방법과 실제
  -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된 생산방법과 실제
  - 농장운영의 유지수단
  - 농장운영에 필요한 장비 (개인이 소유한 장비, 임대장비, 타목적에 의해 구입한 장비 일체)
  - 농장의 기대수입과 운영비
  - 농장운영에 필요한 신용
  - 농장운영에 필요한 부지

#### 라) 미국의 농업분야 교육사업 시사점

- 미국의 귀농에 대한 지원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국의 농업분야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미국의 농업 인력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이는 학교 단계에서 영농학생회 활동을 하며, 이들에게 과제수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과제를 통하여 실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며, 학교 교육이 직업으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의 정책은 School-To-Work법으로 지원되고 있음. 이는 학교에서의 수업과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과제와 자

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인정할 기회를 주는 Career Development Event행사, 고교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닌 대학 단계의 PAS모임까지 청소년들의 직업 탐색과 준비, 학습능력의 개발과 이들의 공로에 대한 시상과 State Fair 단위에서의 자신들의 기능 평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농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농업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적어도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단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우리나라의 FFK행사는 2년제 대학이나 대학까지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함.

- 둘째, 청소년층의 농업종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단계에서와 각주의 농무성을 중심으로 연계되고 있었음. 청소년층의 과제 자금의 지원이 \$5,000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들 과제의 이수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취농에 필요한 실제적 능력을 습득한다는 점임. 4-H모임은 대체로 도시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나, 이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바른 지도 방법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음.
- 셋째, 농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재해보험제도와 자금 지원 제도가 정립되어 있고, 이자를 지불하기 곤란한 집단들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3) 유 럽7)

#### 가) 개 요

- 농촌이주(역도시화: counter urbanization)와 관련된 외국 연구들은 주로 농촌이주자에 의한 농촌거주지와 농촌주민의 생활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 선진 외국(유럽,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도시화가 우리나라에 비해 50년 이상 이루어지고, 도시화의 진행과정도 50~1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귀농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도시화의 진행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이와 반대로 소득증대와 어메니티

---

7) 전북발전연구원, 도시민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 방안, 2009, pp.28~41.

(amenity) 수요의 증대로 농촌을 주거지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U-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나) 유럽의 농촌인구 변동과 농업의 역할 변화

- 유럽의 농촌인구변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1997; Saraceno, 2005),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내외를 차지하며, 1980년 이래로 이들 농촌지역의 절반 정도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약 40% 정도는 인구가 감소하였음. 주요 유럽농촌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 (57.4%)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3분의 1정도(33.9%)는 인구가 감소하였고 일부지역(8.7%)은 인구가 정체되어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유럽 농촌의 인구변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몇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음. 첫째, 유럽의 농촌지역의 약 절반이상은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농촌유입인구의 대부분(75% 이상)은 농촌이 가지는 우수한 환경, 즉 흡입(attraction)요인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음. 즉, 농촌이주자의 대부분은 농촌이 가지는 우수한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하며 이 같은 현상은 지역과 나라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위의 두 가지 현상은 모든 농촌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임.
- 많은 경우 인구를 유인하는 농촌지역의 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의 경우 이촌 현상(rural exodus)은 더 이상 농촌지역 인구변동방향이 아니며, 이 같은 현상은 농업부문과 농가구조, 농업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가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농가의 평균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중해 지역에는 소규모 농가가 다수 재생산되고 있으며, 북유럽국가에서는 중간규모 농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
- 이처럼 가족 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럽의 농가는 예상과 달리 농가들이 대규모화된 농가 규모로 수렴되지는 않고 있음. 이와는 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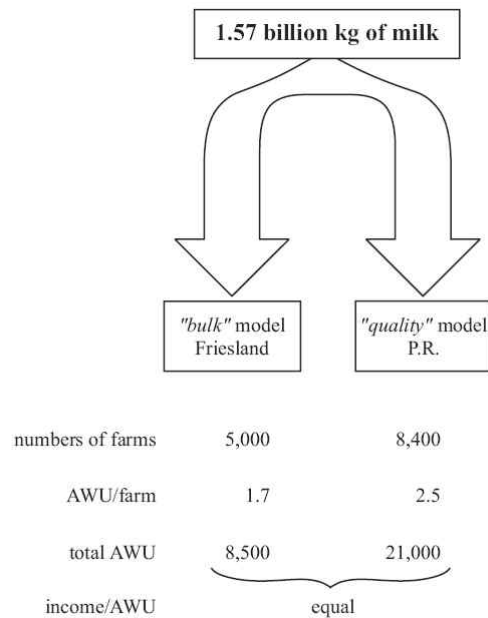
다양한 규모의 농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규모화된 농기계와 설비를 갖춘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계약농업의 확산은 대규모 농가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소농들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농가의 복합취업(farm pluriactivity)은 농가 구조의 진화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농업 외 취업기회 증대는 비효율적으로 간주된 소농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고용은 모든 농촌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1965년부터 1985년 동안 농업고용은 절반이상 감소했으며, 1985년부터 1996년까지는 3분의 1이 또다시 감소하였음.
- 지속적인 농업고용인구의 감소로 2000년대 중반에는 전체 고용의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농업이 현저하게 중요한 산업인 지역은 12%), 이 같은 현상으로 부터 3개의 중요한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농업 현대화 지원과 소득지원 대책은 농업고용 감소 속도를 늦추게는 했지만, 고용의 원천으로서 농업 비중 감소와 농가의 감소를 막아내지는 못했음.
- 둘째, 농가구조의 진화에서 규모의 경제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었음. 복합취업 농가가 그와 같은 진화에 영향을 주었음. 셋째, 많은 경우 농촌지역에서 관찰된 인구성장은 농업으로부터의 흡인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비농업부문의 흡인요인 때문이었음.
- OECD에 의하면, 최근 유럽지역의 고용추세를 보면 새로운 고용기회는 일반적으로 1980년 이후로는 농촌성(rurality)이나 도시화(urbanization)의 정도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OECD, 1996), 중간지대 농촌지역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산업고용에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EU의 경우 1980년에서 1993년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0.8% 증가하였으며, 놀랄 만한 점은 고용 증가율은 도시지

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음(Terluinida, 2001).

- 따라서 농촌지역의 인구성장은 농업부문에서의 고용추세는 감소한 반면에 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되며, 이런 현상은 고용과 인구유지 측면에서 농업으로 특화하는 대신에 농촌지역을 농업 외 부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경제지역으로 육성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서비스(호텔, 식당 등)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이 더 이상 고용기회를 농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며, 탈농 농가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지역을 떠날 필요 없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들 농가는 지역 내에서 새로운 농업 이외의 직업을 찾을 수 있고, 도시지역의 고용기회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고용과 유사하게 농업은 이제 농촌에서 타 부문에 비해 더 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이기 때문임. 도시지역은 항상 농촌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흡입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은 수정되어야 함(Saraceno, 2005).
- 도시와 농촌간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흡입/유출 요인이 도시민 유치와 지역 인구 유출을 저지하는 기회로 사용되어야하며, 도시지역 제조업의 위축, 고비용과 낮은 삶의 질은 농촌지역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내생적 기업 활동, 양질의 노동력 존재, 고품질 적소상품과 서비스 등은 새로운 시장과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이 같은 접근은 기존의 대량생산의 상업화된 농업과 비교하여 농촌이 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유럽의 농촌개발 접근법에 의한 농업개발은 상업화된 농업에 비해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이탈리아 에밀리아 지방의 'Parmigiano Reggiano 치즈' 사례에 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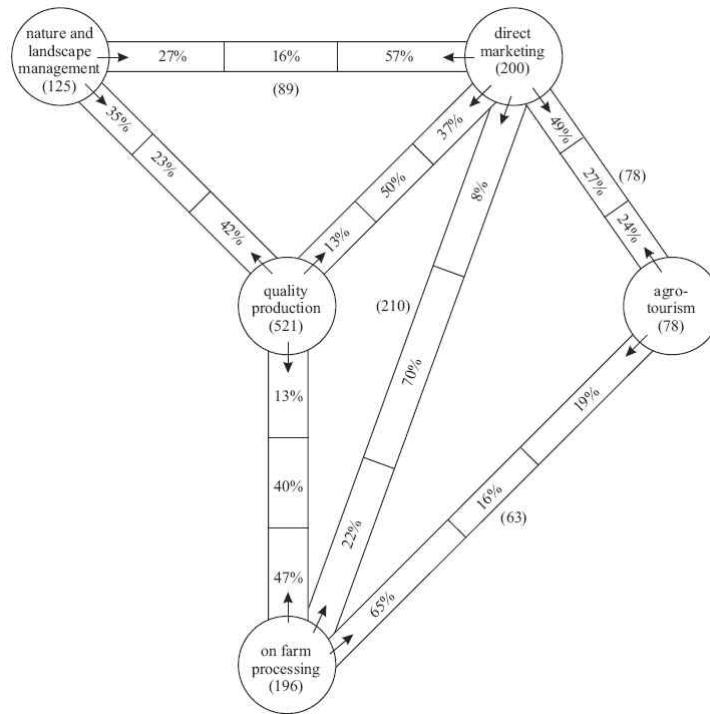
면 Parmigiano Reggiano 치즈에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는 동일한 소득을 얻으면서도 일반 낙농가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De Roest, 2000; De Roest & Menghi, 2000, p.445).



자료 : Van der Ploeg et al., 2002, p.208

### <그림 III-3> Friesland와 에밀리아 Romagna 지역 비교

- 이탈리아의 Parmigiano Reggiano 지역과 네덜란드의 Friesland 지역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그림 III-3> 참조), 동일한 우유를 생산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기존의 대량 생산방식인 네덜란드보다 우유 생산농가 단위에서 2.5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노동력 1단위당 동일한 소득을 획득하고 있음.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의 고품질 농업은 지역 내에서 농촌개발의 타 영역과 연결되어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즉 고품질 농업 접근은 직접 판매, 농업관광, 농가단위 가공 등과 연결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함 (Vander Ploeg et al., 2002).



자료 : Oostindie et al., 2002

<그림 III-4> 농촌개발활동 형태들 간의 연계

- 유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 영역에서 개발된 농촌개발 접근은 타 영역의 농촌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Oostindie, Van der Ploeg & Renting, 2002).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관관리 농가의 42%는 고품질 농업으로 촉발되었으며, 경관관리 농가의 35%는 고품질 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23%는 상호 영향을 받아 동시에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 도시이주자와 농촌중소사업체 성장

##### ① 개 요

- 농촌중소사업체(rural entrepreneurship)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농촌지역사회의 구성과 경제변화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적인 1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생산했고, 농촌지

역의 저고용을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토지에 기반을 둔 활동을 탈피해 농촌 경제의 다양화와 통합적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음. 예를 들면, 영국의 농촌백서(UK rural white paper)는 영국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음(DETR White Paper, 2000).

- 농촌경제의 다양화, 양질의 공공서비스, 양질의 안정적인 고용이 농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백서에서 농업은 다양화된 경제의 한 부문으로 남고, 자연환경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의 매우 낮은 비중으로 고려되었음. 농촌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조변화는 역도시화(counter urbanization) 현상임.
- 농촌이주자의 긍정적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첫째는 이주자에 의한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경제적 기여 측면(Bosworth, 2006; Phillipson et al., 2002; Stockdale & Findlay, 2004), 둘째는 무형적인 효과로 새로운 네트워크의 확산과 전문기술과 지식의 유입에 따른 효과임(Jack & Anderson, 2002; Kalantaridis & Bika, 2006; Philip & Shucksmith, 2003).
- Slee(2005)에 의하면 새로운 농촌이주자에 의한 소득과 부의 이전은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기존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이 같은 긍정적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경제개발 추동력으로 이주자의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의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Countryside Agency, 2003). Stockdale (2006)에 의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적자본의 생성이 필요하며, 이주자는 양질의 인적자본인 기업가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 Stockdale(2006)은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외부와도 외부이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는 도시이주자에 의한 농촌중소사업체의 성장과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신내생적 개발



(Neo-Endogenous Development) 이론 측면에서 설명하였음.

## ② 신내생적 개발 모형

- 우선 외생적 접근법과 내생적 접근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 내생적 개발 모형을 간단히 살펴보겠음. 외생적 이론으로부터 내생적 접근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도시 중심적 시각에서 주변지역으로서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농촌지역 자체의 잠재력에 더 큰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서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추구하면서 지역주도 및 지역중소사업체를 통한 지역자원 활용의 가치가 재조명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농촌지역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지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음.
- 내생적 모델은 외생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농촌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었음. 먼저 외생적 모델에 의한 전형적인 농촌개발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산물 가격지지
  - 근대적 농업기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연구와 지도사업
  - 진취적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젊은 후계농 훈련 및 기술적 지원
  - 경지정리, 관개 등 영농인프라 정비
  - 소농, 고령 농가 퇴출 유도
  - 농촌지역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한 거주지 집중화
  - 선진화된 공장 건설 및 기업유치
  -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지역에 관광설비 및 인프라 개발 등
- 위와 같은 외생적 모델에 의한 농촌개발 정책은 새로운 농촌문제를 심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냈음. 즉, 외생적 모델에 의한 개발은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반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음.
  - 농업부문 고용의 지속적 감소
  - 전통적인 농촌산업(식품, 목재, 직물 등)의 쇠퇴
  - 지역 내 서비스 부분 감소(학교, 병원 등)

- 젊고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계층의 유출
  - 농촌마을 공동화(외지 산간마을, 섬 등)
- 위와 같은 문제점과 더불어 외생적 개발은 첫째, 보조금에 의존한 개발과 외부에 의한 정책결정의 문제점, 둘째, 농촌생활의 비경제적 특성을 무시한 특정 분야와 특정 계층 위주의 왜곡된 개발(대규모 농가 위주 개발), 셋째, 농촌지역의 문화·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파괴적 개발, 넷째, 외부전문가와 계획가들에 의한 일방적 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 같은 외생적 개발에 대한 비판과 이전의 정책실패를 극복하고 외부자본에 덜 의존적인 지역개발 방식을 추구하는 지역주의 운동과 정부기관의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으로 내생적 개발 모델이 대두되었음.

<표 III-4> 외생적 개발과 내생적 개발 비교

구 분	외생적 개발	내생적 개발
핵심원리	규모의 경제, 집중	지역 내 자연·인적·문화자원
핵심 추동력	도시성장 축, 외부자원 투입	지역역량, 소규모 사업체
농촌지역의 역할	도시지역에 식품공급	다양성을 가진 서비스 경제
농촌개발 문제	낮은 생산성, 주변성	지역의 역량부족
농촌개발의 초점	농업의 현대화, 전문화	역량 강화, 차별 극복

- 1970~1980년대 경제구조 재편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쇠퇴를 겪는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유럽 해안지역 농촌지역이 내부 역동성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내생적 개발 모델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음.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내생적 모델에 의한 농촌개발은 유럽 농촌개발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농촌개발에 대한 외생적 모델과 내생적 모델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신 내생적 모형에서는 외부자원의 활용을 위해 외부와의 연결망을 중요시하며, 이와 함께 외부자원의 활용은 지역 내의 인적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지역 내 핵심 행위자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배

태(embedded)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신 내생적 모형은 개발과정에서의 지역 내 통제력과 지역과 외부 힘 사이의 상호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Ray & Ray(2001, p.4)는 신 내생적 개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신 내생적 개발은 외부요소를 개발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잠재력이라는 신념을 유지하는 내생 기반 개발 이론임.’
- Terluin(2003)에 의하면, 농촌개발은 복잡한 네트워크의 그물망으로 자원들은 이 네트워크 속에서 활용되고 이 속에서 개발과정의 통제는 지역과 지역외부 사이의 상호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며, 지역 행위자들은 지역개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며,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속성이 요구됨을 말하고 있음.
- 첫째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지역의 능력. 이는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능력으로 외부의 재정적, 정보적 자원이 중요함.
- 둘째는 지역적으로 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 수단을 축적하는 지역의 능력으로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네트워크와 지역외부 연결망의 중요성은 ‘이주자 가치를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음.
- 이주자들은 외부와의 새로운 연결망을 손쉽게 형성하도록 돕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지역내부에 가져오며, 지역경제 내부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을 소유한 이주민은 지역주민과 지식과 정보의 공유, 상업 활동의 수행에 개입과 이주민과 지역내부 비즈니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들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농촌이주자에 의한 창업과 이로 인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Bosworth, 2006; Phillipson et al., 2002; Raley & Moxey, 2000; Stockdale & Findlay, 2004). 이주민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내부에서 소비를 하고, 내생적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지역경제 다양화와 사회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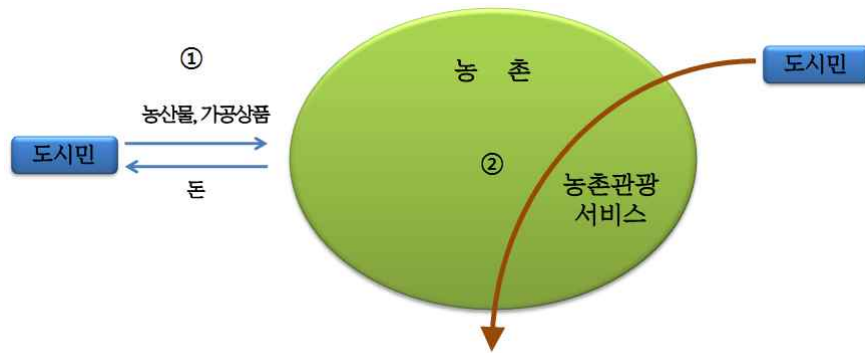
### ③ 농촌이주자의 중소기업 창업활동의 효과

- 농촌이주자는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감소된 농가수입과 농업관련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Stockdale & Findlay(2004)의 영국 내 자가 고용 농촌이주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농촌이주자는 평균 2.4명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농촌이주자의 약 4분의 1은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고용상황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이 이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나타났음.
- Halfacree(1994)의 연구에서도 고용 관련 요인이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aley & Moxey(2000)의 연구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체를 보유한 농촌이주민의 40%는 새로운 사업 시작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Keeble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농촌 비즈니스 창업자의 66%는 이주민에 의해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Smallbone et al.(2002)의 유럽사례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가족단위 소규모 사업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유럽 농업 구조 개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동안 농촌지역의 중소규모 기업은 도시지역의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과 성장을 하였고, 특히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나 외부시장을 개척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Raley & Moxey(2000)는 북동부 영국지역의 초소규모 사업체(10명 이하 고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초소규모 사업체는 평균적으로 1.9개의 전일제의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하고 있었으며, 이주자는 전체 고용의 6.9%를 창출하였고 그들은 이 같은 현황을 분석하면서 이주자에 의한 고용창출의 비중이 7% 이하로 크지는 않지만, 초소규모 사업체의 정의와 이들 사업체의 87%가 1인 고용인 자가 고용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용효과를 가진다고 결론지었음.

마) 유럽의 귀농·귀촌자 창업사례 시사점

- 유럽사례에 의하면 농촌의 가족단위 소규모 사업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유럽 농업 구조 개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기간 동안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은 도시지역의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과 성장을 하였음(Smallbone et al., 2002).
- 특히,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나 외부시장을 개척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귀촌인은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경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귀촌인에 의한 소규모 창업활동은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감소된 농업관련 일자리를 보전하였음.
- <그림 III-4>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농업 또는 농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는 크게 ①과 ②의 두 가지 장소라 할 수 있음. 하나는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영역임.



<그림 III-5> 농촌지역 경제 흐름의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 기회

- 앞에서 논의했듯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귀농·귀촌인은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사례를 통해 본 귀농·귀촌인의 창업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귀농·귀촌인은 도시지역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귀농·귀촌인은 적소시장(niche market)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농촌지역 소규모 기업으로 시장개척에 매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 둘째, 귀농·귀촌인은 지역주민에 비해 더 높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국내의 농촌지역은 양질의 인적 자원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며, 현재 대학이상 학력소유자의 분포를 보면, 한국은 9.4%로 덴마크(30.0%), 프랑스(23.0%), 미국(20.0%)에 비해 매우 낮음(이동필 등, 2008). 따라서 양질의 귀촌자의 유입은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 셋째, 귀농·귀촌자는 혁신성이 높음. 특히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성은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개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귀농·귀촌자의 혁신성은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 식당, 지역식품, 전통공예품 등을 새롭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이 같은 유럽사례 시사점을 통해 볼 때 귀농·귀촌 지원 체계구축에서도 귀농·귀촌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임. 즉, 귀농·귀촌인에 의해 다양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 귀농인 유치 및 선도적인 창업프로젝트 실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 소규모 창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직, 지식경영인 종사자의 창업 귀농인(CEO) 유치사업 실시가 필요함.

- 이와 함께 농촌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선도 창업프로젝트 지원이 필요함.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귀농인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농산물 가공, 유통분야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았으며, 따라서 향후 귀농자의 창업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으며, 체험·교육과 관련된 분야이면서, 창업으로 인해 귀농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선도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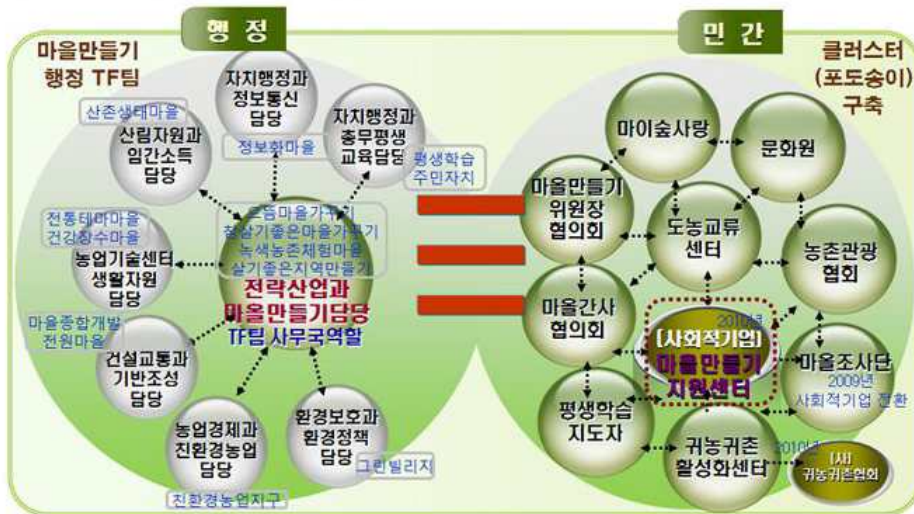
#### 나. 국내의 귀농 정책 : 전라북도 진안군 귀농귀촌 정책<sup>8)</sup>

- 진안군은 농촌 살리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귀농·귀촌정책을 시작하였음.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이라는 오지와 가난의 대명사였던 진안군은 과거 행정안전부의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 전국 231위(총 234시군 중)를 차지할 만큼 뒤쳐진 군이었음.
- 그러나 2001년 군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읍면 지역 개발계획 추진 사업을 도입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기존의 ‘읍면 지역 개발계획’을 ‘으뜸마을가꾸기’로 개칭하였음.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 기본 모델이었음.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을 간사제도를 2006년부터 시작하여, 제도 운영의 경험을 확장하고 도시민 인재의 농촌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말부터 ‘귀농 1번지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음.

8) 농림수산물식품부, 귀농귀촌인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발전 방안 연구, 2011.

- 이와 더불어 행자부 혁신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지원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3년)으로 각종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했고, '귀농 1번지 프로젝트'는 더 구체화되었음. 귀농1번지 프로젝트는 5대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이후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고 확장되고 있음.
- 진안군에서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핵심주체는 '귀농1번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귀농·귀촌활성화센터'로, 초기 담당하는 주체는 행정의 기간 근로자가 담당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읍면별 소모임을 병행해서 만들어 왔으며, 이후 2년간의 준비 및 훈련과정을 거쳐 2009년 12월에는 민간전문그룹으로서 '뿌리협회'가 창립되었음.
- 2006년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이의 근간이 되는 5가지 원칙 즉, △정착귀농인 우선, △도시민 전문성 존중, △현금지원 배제, △주민과의 화합중시, △도시민 환영시스템을 정하였음.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의 특징은 먼저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진안군의 전체 농촌 발전정책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있으며, 진안군은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행정과 민간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음. 농촌 내부의 발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존중하지만, 마을 자체만으로 모든 발전을 완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문그룹들을 조직하고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임.





<그림 III-6> 진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

- 행정과 민간이 각각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강조하며, 행정의 지원시스템은 마을만들기 전담팀 구성과 행정협조회의 개최(2007. 2), 마을 사업간 5단계 확립, 지원조례 제정(2010.5)을 만들었으며, 기존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을 단순히 인구 늘리기, 농업 후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에 귀농·귀촌 정책이 군의 농촌 발전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진안군은 ‘마을 만들기 사업’ 아래 귀농·귀촌 정책이 자리매김해 있음.
- 진안은 농사를 전문으로 지으러 오는 사람보다 다른 일을 하러 오는 귀촌자를 더 우대하고 있음.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은 농촌의 외연을 확대할 인력이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정책 과제가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임.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는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위적 일자리로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말하고 있음(김재현, 2006:112).

<표 III-5> 진안군의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사 업	수행주체	사업참여자		주요활동	재원
마을 간사	지자체	귀농·귀촌인	비 취 약 계 층	마을개발사업 실무담당	국비
마을 사무장	중앙정부	귀농·귀촌인		마을개발사업 실무담당	국비
평생학습 지도사	지자체	고졸이상 여성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군비
마을 조사단	비영리 조직	문화활동가		마을 문화 및 자연자원 조사 발굴	기업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비영리 조직	빈곤층	취약 계층	간병, 청소, 보육지원, 집수리, 급식지원, 약초재배, 농산물 판매	국비+군비+ 기업

자료 : 김정원, 2008.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일자리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자리도 있고 진안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도 있으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 간사제도와 마을 사무장 제도임. 귀농인을 중심으로 농촌형 외부인재를 영입, 부족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매개로 마을개발 및 마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새로운 마을발전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있음(곽동원, 2008:55).
- 마을 간사는 장기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젊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을 이해하고 배우며 다른 삶의 길을 찾는 ‘완충지대’임. 또한 2006년 시작된 마을조사단 활동도 마을 간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으로 마을문화조사단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사단 구성의 일차적 배경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었으나, 조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마을의 문화 및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코자 함이었음.
- 처음 진안으로 귀농·귀촌 희망자 2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활동은 국비와 기업,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확장되어 2011년에 용담댐 수몰지역 4개 면까지 조사하면 전체 11개 읍면의 295개 마을 조사가 완료되었고, 마을조사에서 출발한 활동은 2008년부터 ‘마실길 프로젝트’로 확장되

어 2010년 초에는 생태관광 10대 모델로 선정되었음. 이후 백운면 손내옹기와 마령면 공동체박물관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정과 마을숲, 당산나무 등의 자원을 연계하면서 진안군 전체를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생각하는 에코뮤지엄 구상도 계속 진행 중임.

- 어느 마을도 이야기와 역사가 없는 곳이 없으며, 우리들에게 잊혀 가는 그 마을의 이야기와 문화를 끄집어내고 거기서 그 마을이 다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 진안군은 2008년 5월경 이와 비슷한 사업 하나를 새로 추진했으며, '귀농·귀촌인의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이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 소득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음(진양명숙. 2009:110-111)4).
- 진안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동시에 농촌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에 있음. 우선 이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이 원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아야 하며, 이는 '뿌리협화'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배경이며, 마을만들기 팀장인 구자인 박사는 "귀농·귀촌이란 것은 권리도 자격도 아니고, 너무 두드러지게 내세워서는 '돌 맞기 십상'이라 본다"며, "무엇보다 이 땅의 뿌리를 지켜온 토박이 주민을 존중하고 새롭게 뿌리를 내리려는 귀농·귀촌인이 힘을 합쳐 모두의 고향(뿌리)이 되는 농촌 마을을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음(구자인. 2010).
- 일반적인 귀농·귀촌에 관한 정책이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마을과 지자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동시에 그 역의 경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또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표적 사례가 마을축제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마을’을 테마로 2008년 전국 처음으로 ‘마을축제’가 시작되었고, 30개 마을의 소박한 마을잔치와 회혼례, 시골학교 동창회, 미니 FM방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연 3만 명 정도가 다녀감.

-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나, 마을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연성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 2. 귀농·귀촌 성공사례

### 가. 전북 무주 조동희(도시의 경영노하우 농업에 접목하다)<sup>9)</sup>

#### 1) 20년 일하던 직장과 맞바꾼 ‘와인과의 사랑’

- 귀농 전 23년 동안 쌍방울에서 근무하다 2002년 퇴사하기 전까지, 상품기획 및 영업담당 이사 및 무주리조트에서 근무하였음. 안정된 직장 and 연봉 그러나 뭔가 모를 ‘갈증’이 있었음.
- 퇴직 후 사업을 구상하여 일본산 와인을 생산하는 홋카이도의 후라노와 도카치에 다녀왔음. 위도 54°인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와 비슷한 홋카이도에서 추운 날씨 때문에 산도가 리커버리 되는, 와인 생산의 좋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음. 그는 홋카이도를 다녀온 뒤 직접 국내산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됨.
-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무주 지역의 특산물과 지리적 환경조건에 관심을 가졌고, 해발 800~900m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무풍면을 찾아냈으며, 국내산 와인 원재료가 될 머루농사가 가능했음.

---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 2009, pp.20~29.

## 2) 귀농전 주경야독으로 사업 아이템과 친해짐

- 오랜 회사생활과 기업체 임원으로 근무했던 터라 여윌돈이 있었음. 2003년 귀농한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무주 리조트보다 위치가 더 높은 해발 900m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비탈에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공장부근 농지 29,700㎡(9,000평)에 머루를 심었음.
- 꼼꼼함 조동희 씨의 첫 번째 성공 포인트는 '철저한 준비'로 정보의 힘과 준비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음. 귀농을 시작하기 몇 해 전부터 그는 와인에 대한 끈기 있는 공부와 귀농사업 아이템을 눈으로 익히며 친숙해졌으며, 원재료인 머루농사도 직접 지었음.



- 귀농 당시 10억 원을 머루와인 공장과 농장에 투자하였고, 운영자금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 돈은 사업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음. 꼼꼼함과 철저함으로 농장과 공장을 짓는 시기 선택에서부터 엿볼 수 있음. 머루는 심고 나서 3년쯤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음. 그래서 공장을 짓기 전에 농장을 시작했으며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공장에 대한 구상을 하였음. 그의 자신감은 준비된 공부와 실전에서 나왔다 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이론과 실전의 겹치는 실패 확률을 최소로 만드는 비결임.

## 3) 이전 동료와 지인들에게 절대 기대지 마라

- 샤토 무주(Chateau Muju). 회사 이름이자 그의 국내산 머루와인 브랜

드로 한해 머루 30톤으로 만든 와인 21톤 분량임. 우체국 쇼핑몰 등 택배로 팔리는 건 1병당 2만 5천 원,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2만 원에 판매됨. 대량판매일 경우 할인율이 적용돼 매출은 3억 원 정도로 순수익은 1억 원 정도임.

- 이전 직장에서 상품기획과 영업담당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함. 업종은 달랐지만 물건을 만들고 파는 데 이골이 난 사람인 그는 판매하는 데는 전문가였으며, 그의 두 번째 성공포인트는 ‘자립’이라고 할 수 있음. 아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생각은 도전정신이라 하겠음.

#### 4)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 셋째도 품질

- 그의 좌우명은 ‘장수’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 그건 그가 현재 벌이는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그러기 위해 긴 안목, 긴 호흡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음.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네댓 평 남짓한 방에는 빈 술병이 가득함. 그는 하루에 와인 반병을 꼬박 마신다. 수학교사인 딸과 대학생인 아들에게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권하기도 함.
- 그는 와인공장 대표이기 이전에 와인마니아임. 그는 명함에도 ‘샤또 무즈 대표’가 아닌 ‘와인마스터’라고 자신을 소개함.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임. 이 또한 성공 비결의 하나임.



- 퇴직 몇 년 전부터 와인 공부를 했던 조동희 씨는 사업 초기부터 세계로 뻗어나갈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그리고 그 도전을 하나씩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임. 2009년 10만 병의 머루와인을 생산한 것이 그렇고, 또한 5천 병의 한정 판매의 고급와인과 중저가 와인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임.

#### 5) 농사에는 박사도 없고 왕도도 없다.

- 조동희 씨는 머루와인의 세계 진출 말고도, 다각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음. 생강와인, 벌꿀와인은 물론, 와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 농사에는 박사도 왕도가 없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방법 밖에 없고, 다만 꾸준한 공부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상생과 윈윈', 그것은 그가 귀농 사업가로 장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임.

### 나. 전남 하동 권영신(구체적인 귀농계획표, 성공계획표 되다)<sup>10)</sup>

#### 1)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표

- 도시에서 나고 도시에서 자랐지만 유난히 자연을 좋아했으며, 나이 들면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고 생각함. 차곡차곡 꿈의 지도를 그렸고 귀농계획표를 짰고, 귀농학교 등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정보도 모음. 어디에 터전을 잡을 것인지 농지를 보러 1년 동안 전국을 다녔으며,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도 미리 정해둠. 블루베리가 아직 우리 땅에 자리 잡지 않은 조심스러운 작물이지만 많은 정보를 통해 확신을 키우며, 3년 정도는 소득이 없어도 먹고 살 자본도 알뜰히 준비함.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 2009, pp.62~71.

- 하동 산새농원의 권영신(47세) 씨의 귀농은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 평생을 꿈꾸고 귀농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귀농 계획표는 성공 계획표가 된 셈임. 그의 오랜 도시 생활은 판로 면에서 그의 자산이 되었음. 도시의 지인들이 그를 믿고 그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임.

## 2) 하나하나 계획으로 만든 보물산, 산새농원

- 그는 자연을 벗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동 지리산 칠성봉 끝자락을 지키는 산새농원을 ‘보물산’이라 자랑함. 황토방에서 보이는 만여 평의 산속에는 블루베리와 매실, 자연고사리와 둥굴레 그리고 온갖 산나물들이 자생하고 있음. 2006년 노령목인 밤나무를 벌목하여 블루베리와 녹차 밭을 조성하였고 추가로 매실나무도 심으며 42,900m<sup>2</sup> (13,000평)의 농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음. 그의 산새농원이라는 ‘보물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귀농을 결심하며 공부를 하고 자산을 모으고 농지를 선정하는 다년간의 살뜰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하겠음.

## 3) 구체적인 특별한 귀농계획표

- 귀농 3년차 초보 농사꾼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구체적인 계획표 덕분임. 그는 귀농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해 온 일등 모범생임. 직장생활 20년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임. 부산에서 보험회사 영업과장 일을 하면서부터 그는 귀농을 차근차근 준비했음.
- 우선 3년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될 만큼의 자산을 모았음. 그래서 그는 3억이라는 적지 않는 자금을 가지고 귀농했음. 둘째, 농사꾼이 되기 위한 준비도 했음. 부산귀농학교를 마치고 천안연암대학도 다니면서 귀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높였음. 또한 자연의 소중함과 건강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음. 농림부 주관 도시민 귀농교육을 수료하면서 귀농하여서도 건강한 삶과 여유와 함께 자립적 직업으로서 농부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음을 알았음.



- 셋째, 터전을 잡을 농지를 여기저기 거의 1년 동안 보러 다님. 기대가 높았던 탓이지 마땅한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그러던 중 귀농 장터에 온라인으로 지금 이 하동 동촌마을이 올라왔을 때 그는 소위 말하는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함.

#### 4) 황토방을 짓고 산새농원의 그림을 그리다

- 농지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2006년 귀농하여 동촌마을에 빈집을 구해 수리하여 입주함. 무엇이랴도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에 무조건 숙이고 배웠으며, 하물며 동네 사람들을 모두 스승이라고 생각함. 그러기를 얼마 후부터 마을사람들 중 아버지 어머니라고 따르는 멘토도 생겨 농사꾼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줌. 아직도 그 스승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함.
- “처음에 시골 정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죠. 사생활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그러니까 맘이 불편하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말이 많아지는 이유를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사람만 보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촌사람 다 됐습니다.”
- 그는 산새농장을 일구는 데 온 힘을 쏟았음. 우선 지리산 실상사에서 흙집 짓기 과정을 이수하고 한옥 공부를 해서 직접 설계해 한 황토방을 짓기 시작했음. 동네 사람들의 걱정도 많았지만 황토방은 자연친화적이고 운치 있다는 그의 생각대로 밀어붙였음. 이 황토방도 이미 그의 계획표에 포함되어 있었음. 밤나무를 엔진 톱으로 베고 동네 형님 포클레인을 불러 작업에 들어갔음. 지금의 황토방 집이 완성된 것임. 지대가 높아 산속 신선이 따로 없다고 그는 생각하며, 농장에 손님이 오면 손수 농장과 집을 안내함.

#### 5) 하동 최초로 블루베리 역사를 쓰다

- 산새농원에서 생산되는 주요 종목은 블루베리, 매실, 매실효소, 햇밤,

고사리. 특히 블루베리와 매실이 효자종목임. 하동이 주산지인 매실을 선택한 것은 쉽고 당연한 선택이었음.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 그는 귀농을 염두하고 준비하던 중 TV에서 우연히 블루베리를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으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블루베리는 비싼 과일이지만 3만 달러 소득의 시장이었고 미래성이 있을 거란 판단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초보 농사꾼이 키우기에 쉽죠. 물 주고 풀만 뽑아주면 되니까요. 묘목이 비싸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게 흠이죠.”
- 귀농하면서 계획한 블루베리를 심기 위해 밤나무를 벌목하고 장비로 작업 그리고 어렵게 구한 블루베리 3년생 삼목묘를 심음. 처음 시작할 때는 농민들이 두려움 때문에 말렸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며, 결과는 성공이었음. 블루베리로 초보 농사꾼이 성공하니 마을사람도 블루베리를 따라 심고 있으며 블루베리 연구회도 2개나 생김. 그는 블루베리 연구회 총무로 일을 하며 하동 동촌마을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었음.
- 지금 산새농원의 블루베리 나무는 1,300주로 6,600㎡(2,000평)이 넘음. 하동군에서도 최근 블루베리 농사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좋은 바람이 불고 있음. 또한 산새농원의 모든 상품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인데, 잘 모르니까 농약을 뿌리지 않았고 단지 세심하게 정성으로 돌보는 데만 힘을 씀. 내년에는 무농약을 넘어 유기농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6) 불어라, 블루베리 바람아!

- 산새농원의 작년 생산량은 매실 3톤, 블루베리 50kg, 고사리 50kg에 조수입은 작년 2천만 원. 산새농원에서 나오는 친환경 무농약 블루베리와 매실은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다음 카페와 귀농사이트의 귀농 사랑방 카페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팔고 있음. 특히 그에게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오랜 직장생활이 큰 자산이 되었음. 도시의 아는 친구, 친지, 직장동료들이 발 벗고 사주니 없어서 못 팔 정도임. 이제 점점 매실과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임.
- “사실 농사라는 것이 한철 장사라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블루베리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판로까지 개척해야 하니까 걱정이죠.”
- 전자상거래는 잘 안 팔리는 편이라 농협 수매, 백화점 특판 등 조금 더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며, 판로가 개척되어 동네의 모든 블루베리가 바닥나는 것이 그의 소망임.

## 7) 농산물 가공, 민박체험농장의 꿈을 향한 또 다른 계획

- “지금은 아직 준비단계나 다름없어요. 저는 경제적인 안정이 될 때까지는 아직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겸손하면서도 야심찬 포부. 그는 단순히 블루베리와 매실을 파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또 준비하고 있음. 매실과 블루베리를 가공하여 가공품을 팔고 싶어 함. 2007년 취득한 농업후계인 자금을 활용하여 농사용 창고 및 가공작업장을 준비하는 등 이미 계획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음. 그리고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 바로 민박 체험 농장을 만드는 것임.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뿐 아니라 산새농원의 자연 그리고 웰빙 주거공간인 황토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것임.

- “자연을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되는 분에게는 청정 자연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더 나아가 마을관광경영도 해보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음. 5년 안에는 마음속 그림들이 현실에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의 성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임. 성실과 계획과 준비는 배반하는 법이 없다는 생각, 계획하고 준비하는 유전자를 가진 그에게 성공행진곡은 계속 될 것임.
- 그의 사례를 보면 귀농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귀농을 생각한다면 상상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표를 세세하게 짜야 함. 자금의 계획표를 짜고 판로의 계획표를 짜면 그것은 성공 계획표가 되어 줄 것임.

#### 다. 경남 하동 박찬열(가장 자연답게 사는 생활방식, 유기농 농업의 비법이 되다)<sup>11)</sup>

- 지리산에 3년, 설악산에 8년을 살면서 스스로 산이 되었던 남자는 설악산에서 산을 닮은 여자를 만나게 됨. 1998년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하동 지리산자락에 씨앗을 뿌린 이들은 산울농원의 박찬열(49세) 조성미(47세) 부부. 돈을 벌기 위해 내려온 것만은 아니었음. 그들은 생활비 한 푼 없이 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좋았음. 산에서 살던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으로 유기농 농업을 실현했음. 자신의 가치를 뿌리고 따는 것, 그것이 언제나 즐거울 수밖에 없으며, 그 즐거움은 힘이 있음. ‘좋아하는 산에서 좋아하는 열매를 딸 수 있다’는 즐거움이 그들의 성공 비결임.

##### 1) 막막하고 눈물겨운 덩불 투성이 산 일구기

- 박찬열 씨는 중학교 졸업 후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했으며, 1988년까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 2009, pp.186~175.

지 먹고 사는 데 문제없었음. 하지만 그 일이 항상 스트레스와 도시  
염증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산에 파묻혀 별도의 생활비 없이 산과 더  
불어 살았음.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후 그가 좋아하는 자연  
을 벗어나며 살고 싶어 자연스레 귀농함. 손에 쥐고 있던 돈은 단돈 3  
천만 원.



- 단지 지리산이 좋아 하동에 터를 잡았으며, 아무런 연고도 농사기술  
도 아는 바가 없는, 막막한 시작이었음. 이들이 귀향할 당시인 1998년  
에는 귀농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더 막막했음. 그 막막함을 바지런  
함으로 메웠음. 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던 생활방식으로 빈집에서 3  
년 이상을 살면서 산의 칙과 밤을 잘라내고 매실과 돌배를 심으며 하  
나하나 일구었음. 돌배나무는 씨를 파종해서 1~2년을 키운 후 접목  
을 해서 손수 일군 농원이라 묘목시장도 바지런히 드나들었음. 경상  
도 특유의 무뚝뚝함에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
- “정말 눈물 났죠. 새벽 4시에 일어나 후레쉬 들고 산에 올라와 고사  
리 꺾어서 내려가 10시까지 삶고 다음날까지 말려서 시장에 내가면  
저울에 올려놓고 그냥 돈만 주고 말아요. 요즘 고사리 시세가 얼마고  
이건 고사리 품질이 어떻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때 참 말 붙이기  
가 힘들었죠.”
- 넓은 농원을 부부의 힘으로 일구려니 고된 것은 당연지사. 농장 전체  
풀을 베고 나면 허리가 돌아갈 지경이었으나 일한 만큼의 열매를 딸  
수 있기에 즐거운 고행길이라 생각함.

## 2) 매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노력들

- 예부터 하동에서 생산된 매실은 단단하고 향이 뛰어나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매실재배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하동 지리산. 그가 매실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음. 작물선택은 했지만 문제는 재배기술. 초보농사꾼에게 재배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숙제였음.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서 땀방울을 흘렸음.
- “처음에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며 도 농업기술원을 시간만 나면 들러서 귀찮게 했어요. 병해충과 토양,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몇 년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웬만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죠.”
- 역대 조수입에 진입한 지금도 열정은 식지 않아, 묘목시장을 1년에 한번 씩은 가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친환경박람회 등 전국 어디든 공부할 만한 곳은 발 벗고 찾아다님.

## 3)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의 형제들, 고개 숙여 배우고 또 배우다

- 매실 재배기술을 익히는 데는 마을사람들의 도움도 컸음. 오랫동안 매실을 재배해온 마을사람들은 더없는 선생님이었음.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 마을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대하며 친해짐. 시골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생각함.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는 어른들의 단잠을 깨울까봐 동네어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다닐 정도임. 동네에서 드물게 트럭이 있었기에 동네일을 발 벗고 나서 도우며 마을의 굿은일을 도맡는 등 마을사람들과 벽을 허물었음.

## 4) 자연스럽게 자연을 일구고 싶은 마음이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아

- 산울농원에서는 매실나무, 돌배나무, 산수유나무가 자라고 있음. 이곳의 농산물과 제품은 모두 유기농법으로 생산하고 있음. 마당 앞 향아

리에도 유기농법으로 농사지은 청매실로 만드는 매실원액이 그득 담겨져 있음.

- “산에 오래 살아서 약치는 건 제 정서에 맞지 않죠. 우리 집에는 양약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음. 퇴비도 직접 만들어 완전히 발효시킨 후에 쓰고,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했음. 삶의 가치대로 매실과 돌배 등을 키웠고 그것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만드는 비법이 되었음. 웰빙 시대 유기농 인증은 가장 좋은 브랜드가 되었다. 판로의 길도 유기농이 정답이었음.
- 하지만 지금의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기전까지 애를 많이도 썼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서울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으며, 10군데 가서 1군데만 되도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치지도 않았음. 유기농 매장에서 거절당하면서 쏟았던 눈물과 그 먼 거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던 땀방울이 오늘의 산울농원을 만든 것임.
-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와 유기농 개인매장들 단독 판로가 탄탄하게 확보되어 있음. 수확한 매실은 선별기로 크기를 구분, 일일이 손으로 상처 있는 것은 골라내고 최상 품질의 매실만을 10kg단위로 포장하여 상품으로 배송함. 요즘은 선주문이 많아 판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 매일 생산량은 총 10톤. 생매실로 8톤 정도 판매되며 나머지는 매실 원액과 농축액 등의 가공품으로 나감. 식품 가공업을 하여 유기농 전문매장이나 생협 유통망도 형성되어 작년 재작년 조수입은 1억 정도임. 작년 대부분 부부들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기에 순이익도 높음.

## 5) 스스로 나선 귀농 도우미

-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박찬열 씨는 요즈음 예비 귀농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음. “귀농하겠다는 사람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귀농하고 싶은데 한번 가도 될

까요’라고 물으면 무조건 수락하죠.” 박찬열 씨는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 주기 위해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이자 도우미가 되고자 함. 하동의 빈집을 널리 알리고 외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건의하기도 여러 차례. 그러나 귀농자를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아쉬워하고 있음.

- “식품영업신고를 할 때 군청에 2번 가면 될 것을 5번 넘게 갔어요. 귀농자를 위한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니 불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죠.” 그는 귀농 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귀농생태학교도 절반이상을 수료했음. 가톨릭 농민회 활동과 유기농협회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귀농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음. 소나무와 황토 흙을 사용하여 부부의 땀방울로 지은 귀틀집은 하동군이 선정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기도 했음. 그러나 귀농자 후배를 위해 그 집을 내어 주고 그들은 최근에 지은 집에 입주함. 하동 두곡리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울농원 옆에 지은 또 하나의 보금자리. “이 동네 가장 높은 곳에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있어 좋고 산을 좋아하니 더 없이 좋아요.”



## 6) 큰 욕심 없다면 누구나 만족할 성공 얻는 귀농

- 좋아하는 산에서 좋아하는 농작물을 키우는 즐거움. 그래서 그는 힘든 줄 모르며, 욕심 없이 즐겁게 농사를 일구었기에 역대 조수입을 올릴 수 있었음.



- “농사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의 풍성한 수확하기도 하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귀농 하면 좋죠. 그리고 지자체와 모든 단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살면 마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건강해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요?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쉬러 내려오겠다는 생각만 없다면 분명 어려움 없이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 매실나무는 다른 과수나무보다 뿌리의 움직임이 빨라서 추운 겨울인데도 꽃망울을 맺는, 땅속의 봄기운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봄의 전령사. 1998년 일찍 귀농의 싹을 틔운 그의 삶은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를 닮았음. 자연친화적인 삶을 농사에 실현하니 유기농 비법이 되고 즐거운 자연과 더불어 일하니 저절로 신명이 나는 그의 성공 비결은 매우 평범한 진리임.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삶을 일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한 귀농이며, 귀농의 기본의미라 하겠음.

#### 라. 서귀포시 김영란·이성호 부부(고수익 욕심보다 행복한 삶 중요)<sup>12)</sup>

- “귀농은 우리 부부 인생의 제2막의 시작이죠. 아주 유연하게 제주로 발령 나면서 귀농을 시작한 지 7년째로 올해가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원년이 될 것 같아요. 고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인건비를 버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인데 보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 서귀포시 효돈동 세자매네 반디농장 김영란(51) 대표와 남편인 이성호(52) 씨는 즐거운 귀농일기를 써 내려 가고 있음. 부인이 먼저 귀농을 시작했고 남편은 3년 전 제주신라호텔에서 명예퇴직하고 ‘수제자’의 길을 함께 가고 있음.

12) 한라일보, 귀농이야기 4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 2011. 2.17일자



- 수필가이고 EM센터인증심사위원인 김 대표는, “사내 커플이에요. 서울 신라호텔에서 남편은 양식요리사, 저는 한식요리사였고 둘째를 임신한 지난 1994년 육아문제로 일을 그만뒀어요. 그 후 2004년 남편이 제주로 발령 나면서 제주에 정착하게 됐죠. 귀농은 다음해인 2005년 시작했고. 저농약을 시작으로 2006년 유기농으로 전환, 3년 후인 2008년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최상의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품질의 친환경 감귤을 재배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죠.”
- 동반자인 남편, “우리 부부가 요리사 출신이라서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왜 힘든 농사를 짓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흙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하는 농사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농장은 감귤나무 1그루씩 500그루 가량을 분양하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죠. 4월 개화시기에 나무마다 이름표를 달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블로그에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제주에 자신들의 나무가 있다는 데 회원들이 관심이 많아요. 판로는 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sezame.co.kr)을 통해 하고 있어요. 생산보다는 판로 확보가 더 문제죠.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저희처럼 귀농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 이들 부부는 효돈(4290㎡)과 호근(4290㎡·4950㎡)에 3개의 과수원을 갖고 있음. 2곳은 친환경, 호근동 소재 과수원 1곳은 유기농을 재배하고 있음. 특히 귤 수확을 하루 전에 하고 곧바로 택배로 보내 소비자들

이 가장 신선할 때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월 중순까지 수확하면서 해거리 현상도 심하지만 좋은 품질의 꿀을 보내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회원 맛이를 위해 과수원 창고를 개조해 2개동의 게스트하우스를 우수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요리사의 솜씨를 발휘해 최상의 요리도 대접하고 있음. 지난해산 꿀은 저온현상에다 폭설과 냉해까지를 입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농장으로 출근하고 있음.
- ‘고참 귀농인’인 이들 부부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평범하면 경쟁력은 안 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조언함. “최소한 준비기간인 3~4년은 버텨야 해요. 장밋빛 인생을 그리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실패하지 않죠. 귀농의 허상을 갖고 덤비면 안 되고 실상을 잘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 마. 서귀포시 김순홍(45년 만에 고향집 전입신고 천국생활)<sup>13)</sup>

- 고향 선후배 도움 받으며 감귤 농사 시작, 귀촌 후 잇단 시행착오는 삶의 든든한 밑거름. “200여 년간 선조와 아버지가 일궈던 땅이다. 버릴 수 없는 터다. 한라봉 묘목을 심으면서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일찍 고향에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 국내 대기업인 STX 주식회사 포스텍 상무 출신인 김순홍(58) 씨.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주시로 이사를 가면서 표선면 가시리를 떠난지 4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음. 제주서교와 오현중, 오현고를 나온 그는 한양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30여 년간 컴퓨터와 관련한 일을 했음.

13) 한라일보, 귀농이야기 4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 2011. 4.13일자.

- “촌놈이라서 그런지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 게 너무 좋다. 서울 동창인 제주출신 김창희 현대건설 대표나 LG이노텍 허영호 대표도 나를 부러워한다. 아침 5시30분부터 새벽 1~2시까지 쉴 새 없이 살았던 직장생활과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이다. 현재 소득이 없을 뿐이지 연봉 수역을 준데도 농부로서 만족한다. 어릴 적 이곳에는 아름답게 팽나무와 왕대밭이 있었다. 모든 게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 2009년 10월 귀촌한 그는 지난해 3,630㎡ 규모의 가온시설을 만들고 한라봉 묘목 420여 주를 심었음. 고향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간간히 선후배끼리 만나 막걸리 잔을 주고받으며 마음속 깊이 간직하던 고향의 의미를 되짚고 있음.
- “옛날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밭붙일 곳은 마련한 셈이다. 하우스 말고 40여 년 전 심은 노지감귤 6,600㎡ 가량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돌보지 못했다. 현재 가온시설을 해야 할 지 품종개량이나 피복재배를 해야 할 지 고민중이다. 지금으로선 고향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소를 키우는 선배에 부탁해 짚단 300단을 받았고 돈분도 아는 사람을 통해 구했다. 한라봉 묘목도 5~6곳에서 구할 수 있었다. 모든 게 고향이라 가능했다.”
- 귀촌 결심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그의 회고. “처음에 아내가 만류했다. 자식들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작고한 아버지 역시 고향

을 정리하라는 유언을 남겼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아내도 지금은 이해하고 나중에 이곳에 와서 함께 농사를 지을 생각이다. 귀촌 전에는 서울에서 말(馬) 관련 교육과 조경교육을 받았다. 나름대로 사전준비를 했지만 가시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농사가 맞을 것 같아 감귤을 선택했다. 차후 물려받은 땅 2~3만 평에 나무를 심어볼 생각이다. 수십 년이 흘러 나무가 자랄 때쯤에는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본다. 감귤뿐만 아니라 금송도 잘 되고 있다. 작년에 심은 노지 체리는 현재 지켜보는 중이다. 블루베리는 가시리 토양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내년 한라봉을 수확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그의 귀촌 도전기는 이제 시작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고향에서 누리고 있음.

## IV. 제주지역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 1. 귀농·귀촌 실태 분석

#### 가. 조사의 배경과 목적

##### 1) 조사 배경

- 농촌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탈농 등의 영향으로 농업노동력 감소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경제 위축으로 퇴출되거나 미취업 되는 등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것과 베이비부머 시대의 은퇴, 삶의 가치의 다양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귀농정책 추진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구의 증가는 농촌의 공동화와 농업부분의 생산참여 인력의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한 것임
- 따라서 농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사업은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의 귀농동기와 활동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때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귀농·귀촌 희망자 대부분이 농업이나 농촌생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과 농촌생활의 실상을 이해시킴과 함께 보다 빠

른 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시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2) 조사 목적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조사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교육 시행에 따른 속성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둘째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여 귀농·귀촌의 만족도,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주요한 것 등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 활성화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음.

## 나. 조사·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 1)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대상<sup>14)</sup>

#### ①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2011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한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의 각 문항에 대해 교육생들이 선택 또는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② 조사 내용

-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항목 수는 모두 19개이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우선 귀농자들의 특성과악을 위한 것으로 귀농·귀촌 동기, 준비기간과 준비정도, 정보습득 경로, 활동 계획 등을 조사하였음.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해서는 만족도, 프로그램별 운영 필요도, 개

1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림.

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응답자들에 대한 연령, 성별, 학력, 귀농 전 거주지역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조사하였음.

### ③ 분석 도구 및 방법

- 설문 조사된 내용은 SPSS/WIN 14.0 PC Statistic Program을 이용하여 집계 분석하였음. 조사내용은 조사된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각각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을 이용하여 속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 ④ 조사 및 분석 결과

####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교육 참여자는 총 102명이었으나, 이중 응답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통계처리를 위한 인적사항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13명이 집계과정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8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집계한 결과는 <표 III-6>과 같음.
-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78.7%로 많았지만 여성의 비중도 21.3%로 나타남.
- 교육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9.0세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5%로 가장 많았고, 40대 32.6%, 30대 18.0%, 60대 14.6% 순이었음.
-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86.5%가 기혼이었고, 귀농·귀촌 동반가족 수는 평균 2.42명으로 집계되었음. 귀농·귀촌 동반가족 수는 2인인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고, 1인 19.1%, 3인 18.0%, 4인 14.6% 순이었음.
- 최종학력 수준은 대졸이상(대학원 포함)의 고학력자가 79.7%를 차지하였음. 귀농 전 직업은 경영/전문직이 27.0%의 비중을 보여 가장 많았고, 사무/판매/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22.5%, 전업주부 10.1%와 생산기술직 5.6% 순으로 나타났음.
-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으로는 “제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에 그



친 반면, “제주 이외의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5%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제주지역 외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명, “부산” 10명 순이었음.

- 응답자들의 출생지역과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을 근거로 귀농·귀촌유형을 분류한 결과, U턴형과 I턴형으로 나뉘어졌고, 각각 12.4%와 87.7%의 비율을 보여 U턴형보다는 I턴형의 귀농·귀촌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IV-1&gt; 조사자 일반현황

(N=89)

속 성			빈도	%	구 분		빈도	%	
성별	남자		70	78.7	결혼 여부	기혼	77	86.5	
	여자		19	21.3		미혼	12	13.5	
연령	30대		16	18.0	귀농 전 직업	경영/전문직	24	27.0	
	40대		29	32.6		사무/판매/서비스업	20	22.5	
	50대		31	34.8		자영업	20	22.5	
	60대		13	14.6		전업주부	9	10.1	
귀농 가족수	1인		17	19.1		생산기술직	5	5.6	
	2인		39	43.8		공무원	4	4.5	
	3인		16	18.0		기타	4	4.5	
	4인		13	14.6		은퇴/무직	2	2.2	
	5인		4	4.5		학생	1	1.1	
최종 학력	중졸		3	3.4	귀농 전 거주지	제주		20	22.5
	고졸		15	16.9		제주 외	소계	69	77.5
	대졸		65	73.0			서울	34	38.2
	대학원졸		6	6.7			경기	15	16.9
귀농귀 촌유형	I 턴형	타 도시	58	65.2			부산	10	11.2
		지역 내	20	22.5			충북	2	2.2
		소계	78	87.7			기타	8	8.8
	U턴형		11	12.4					

#### ㉞ 귀농·귀촌 동기 및 과정

- 귀농·귀촌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인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귀농·귀촌 동기 등이 반영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귀농·귀촌 교육 등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응답자들의 귀농·귀촌 동기, 지역의 선정, 진행 정도와 준비연한, 정보습득 경로를 파악하여 보았음.
- 우선 응답자들의 귀농·귀촌 동기를 살펴보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가 32.6%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여생을 위하여”(23.6%),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와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가 각각 (10.1%),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하여”(7.9%) 순으로 나타남

<표 IV-2> 귀농 동기별 분포

(N=89)

귀농 동기	빈도	%
①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29	32.6
②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21	23.6
③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9	10.1
④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9	10.1
⑤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서	7	7.9
⑥ 농촌생활이 좋아서	5	5.6
⑦ 도시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	4	4.5
⑧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4	4.5
⑨ 기타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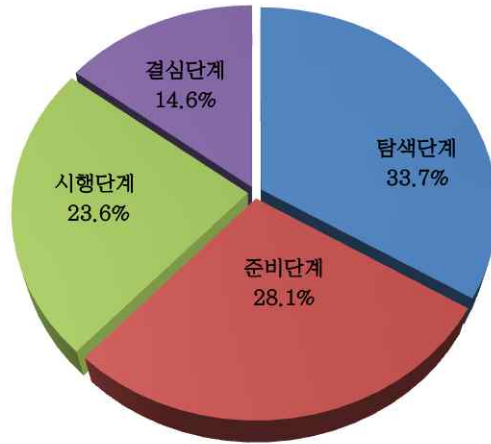
- 귀농·귀촌 지역으로서 제주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관광과 연계한 귀농·귀촌활동이 유리할 것 같아서”가 전체의 34.8%를 점유하여 가장 많았고, “자연환경이 좋아서”(25.8%), “고향이라서”(20.2%), “주변인 소개로”(6.7%) 순이었음.

<표 IV-3> 제주지역 선택 이유별 분포

(N=89)

제주지역 선택 이유	빈도	%
① 관광과 연계한 귀농·귀촌활동이 유리할 것 같아서	31	34.8
② 자연환경이 좋아서	23	25.8
③ 고향이라서	18	20.2
④ 주변인 소개로	6	6.7
⑤ 친환경농업생산에 유리할 것 같아서	5	5.6
⑥ 기타	5	5.6
⑦ 지자체의 홍보로	1	1.1

- 귀농·귀촌의 진행단계를 결심→탐색→준비→시행 단계로 각각 구분할 때,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단계별 분포는 “탐색단계”가 3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비단계”(28.1%), “시행단계”(23.6%), “귀농결심 단계”(14.6%)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IV-1> 귀농·귀촌 단계별 분포

-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가 39.3%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3년 미만” 25.8%, “1년 이상 2년 미만” 22.5% 순이었음. 한편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2.4%로 집계됨으로써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IV-4> 귀농·귀촌 준비 연한별 분포

(N=89)

귀농귀촌 준비 기간	빈도	%
① 1년 미만	35	39.3
② 1년 이상~2년 미만	20	22.5
③ 2년 이상~3년 미만	23	25.8
④ 3년 이상	11	12.4

-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습득처는 “농업전문기관”이 44.9%의 비중을 보여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하는 경우도 각각 30.3%와 19.1%의 비중을 보였음. 반면 일반 행정기관이나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습득 비율은 각각 3.4%, 1.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V-5> 귀농·귀촌 정보의 습득 경로

(N=89)

정보 습득 경로	빈도	%
① 농업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40	44.9
② 인터넷	27	30.3
③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지인	17	19.1
④ 일반행정(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3	3.4
⑤ 언론매체(방송 또는 신문)	1	1.1
⑥ 무응답	1	1.1

### ㉔ 소득만족 수준과 경제활동 계획

- 귀농·귀촌 후 안정된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유들 중 상당부분이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결과로서 기대되는 소득수준이나 이와 관련된 농업생산 및 농촌 사회활동 여건은 귀농·귀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우선 응답자들이 안정된 귀농·귀촌생활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농업생산과 농외활동에 대한 의사 등을 분석하여 보았음.

#### ㉔-1. 소득만족 수준

- 귀농·귀촌 후 농촌생활에 필요한 만족할 만한 연평균 소득수준을 물은 결과, 조사 응답자들의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은 전체 평균 4,074만원으로 집계되었음. 그러나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로 나타나 개인별 만족할 만한 소득 수준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기대소득 수준의 차이가 응답자들의 속성에 따라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비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았음. 분석 결과,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는 기대소득 수준에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귀농·귀촌 주체의 연령과 동반가족 수의 크기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응답자는 각각 연간 4,431만 원, 4,271만 원으로 높은 기대소득 수준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60대는 3,092만 원으로 가장 낮은 기대소득 수준을 보였음.
- 한편, 귀농·귀촌에 따른 동반가족 수 크기별로는 5인의 경우가 6,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기대소득 수준을 보였고, 3인 이하는 기대소득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

&lt;표 IV-6&gt;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

속성별		N	소득수준		
			M	SD	S <sup>↓</sup>
연령대별	30	16	3,844	926	ab
	40	29	4,431	1,287	b
	50	31	4,271	1,245	b
	60	13	3,092	1,358	a
	F(p)		4.049(0.010)		
가족 수	1	17	3,329	1,046	a
	2	39	3,987	1,325	a
	3	16	4,156	1,028	a
	4	13	4,615	982	ab
	5	4	6,000	1,414	b
	F(p)		5.082(0.001)		
성별	남	70	4,101	1,249	
	여자	19	3,974	1,457	
	T(p)		0.381(0.704)		
학력	고졸이하	18	3,872	1,491	
	대졸이상	71	4,125	1,239	
	T(p)		0.742(0.460)		

↓ : Scheffe 사후검정, a&lt;b

### ㉔-2. 농업생산 및 농외활동 계획

- 귀농·귀촌 생활에 요구되는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응답자들 대부분은 농업생산 및 농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농업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품목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노지작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40.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복합영농”(25.8%), “관광농업”(13.5%), “시설작물”(10.1%) 순임.

<표 IV-7> 영농계획 유형별 분포

(N=89)

영농계획 유형별 분포	빈도	%
① 노지작물	36	40.4
② 복합영농	23	25.8
③ 관광농업	12	13.5
④ 시설작물	9	10.1
⑤ 농산물 가공	3	3.4
⑥ 기타	1	1.1
⑦ 미정	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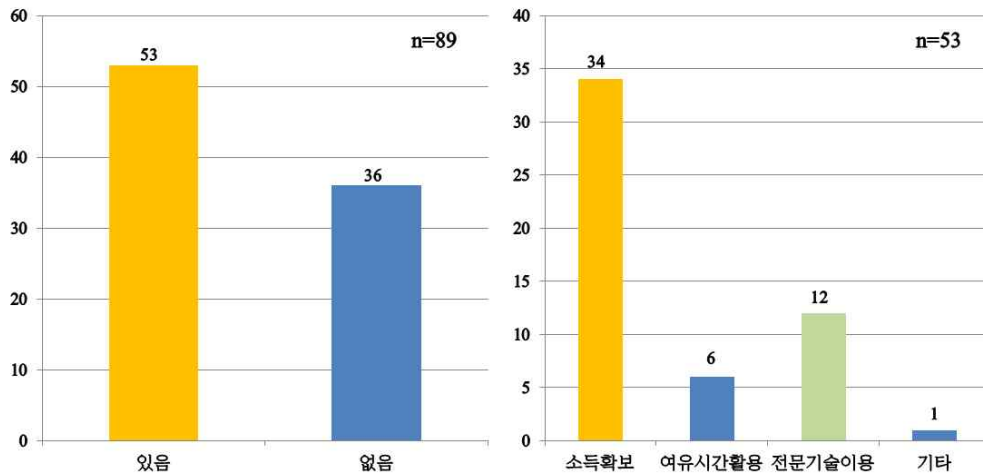
- 품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배 또는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0%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17%), “지인의 권고로”(13.5%), “여가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10.1%)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지도기관의 추천”에 의한 품목선택의 비율은 2.2%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V-8> 영농계획 품목의 선택 이유

(N=89)

품목선택 이유	빈도	퍼센트
① 재배 또는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	24	27.0
② 기타	20	22.5
③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17	19.1
④ 지인의 권고로	12	13.5
⑤ 여가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9	10.1
⑥ 지도기관의 추천으로	2	2.2
⑦ 시스템 결측 값	5	5.6

- 한편 귀농·귀촌 시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계획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40.4%가 “없다”라고 답한 반면, 59.6%는 “있다”라고 응답하여 농외활동 계획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로는 “소득확보”가 64.2%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 이용(22.6%), 여유시간 활용(11.3%) 순이었음.



<그림 IV-2> 농외활동 여부 및 이유

### ㉟-3. 귀농·귀촌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와 용도별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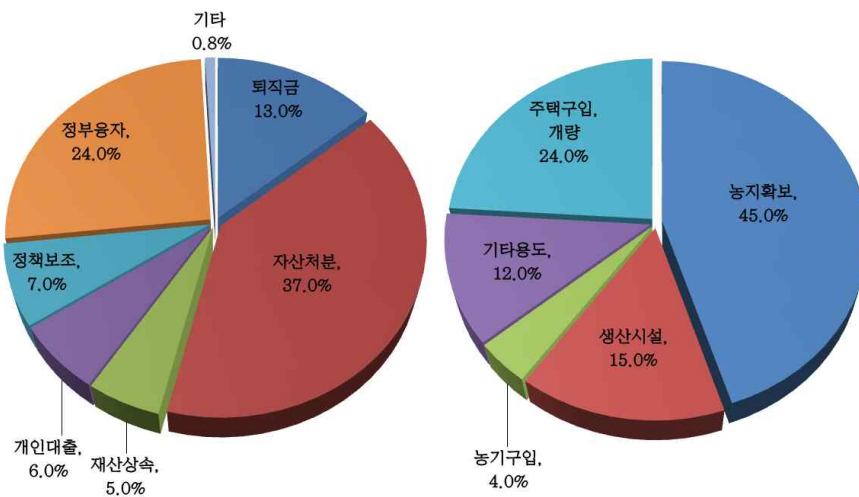
-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에 따른 예상 소요자금의 규모는 응답자 전체 평균 20,843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별로는 최소 10,000만 원에서 최대 40,000만 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음.
- 이러한 차이를 응답자들의 속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과 학력의 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과 귀농유형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가 각각 21,931만 원, 21,710만 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60대는 15,615만 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음. 귀농유형별로는 I턴형의 경우가 U턴형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IV-9> 응답자 속성별 투자 규모

속성별		N	투자규모		
			평균	표준편차	s
합계		89	20,843	6,849	
연령	30	16	21,438	6,811	ab
	40	29	21,931	7,061	b
	50	31	21,710	6,924	b
	60	13	15,615	3,863	a
	F(p)		3.197 (0.027)		
성별	남	70	20,900	7,143	
	여자	19	20,632	5,804	
	T(p)		0.151 (0.881)		
학력	1	18	22,778	9,428	
	2	71	20,352	6,015	
	T(p)		1.348(0.181)		
귀농유형	1	11	16,000	6,633	
	2	78	21,526	6,639	
	T(p)		2.585 (0.011)		

↓ : Scheffe 사후검정, a<b

- 한편, 귀농·귀촌 활동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로는 “자산처분”을 통하여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고, 정부융자(23.8%), 퇴직금(12.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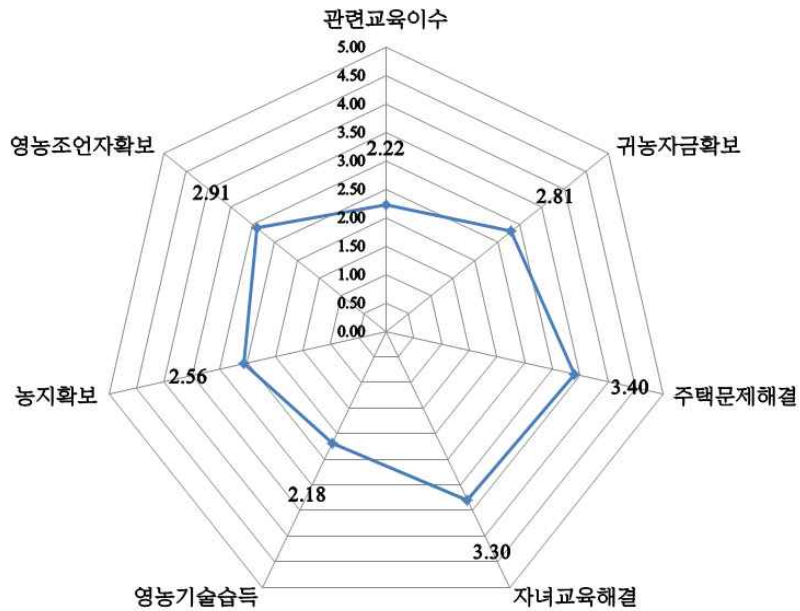
<그림 IV-3> 귀농·귀촌 자금의 출처 및 용도별 사용처



- 귀농·귀촌과 관련한 소요자금의 용도별 이용계획으로는 “농지확보”가 45.7%로 가장 많았고, “주택구입 및 개량”(23.8%), “생산시설”(15.0%), “농기계 구입”(3.7%)순으로 나타났다.

#### ㉔ 귀농·귀촌 준비 정도와 속성별 인식수준의 차이

- 귀농·귀촌은 결심에서 시행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이 과정에서 희망자들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여러 사항 등을 준비한다고 할 수 있음. 여기서는 본 조사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농조언자 확보 등 7개 분야에 대해 귀농·귀촌 준비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보고, 속성별로 비교하여 보았음.
- 먼저 각 분야별 응답자들의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면, 주택과 자녀교육만이 평균 이상 준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관련 교육 이수, 영농 자금 확보, 조언자 확보, 농지 확보 등은 준비 정도가 낮고, 특히 영농기술 습득은 2.18점 수준으로 준비 정도가 가장 덜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IV-4> 분야별 준비 정도

- 분야별 귀농·귀촌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응답자들의 속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귀농·귀촌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의 크기는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전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연령과 귀농유형별 비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IV-10> 연령별 각 분야별 준비정도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

분야별	연령별	N	분야별 준비정도			
			M	SD	F(p)	S <sup>↓</sup>
관련교육 이수	30	16	1.88	1.258	1.042 0.378	
	40	29	2.24	1.300		
	50	31	2.16	1.416		
	60	13	2.77	1.589		
귀농자금 확보	30	16	2.69	1.078	0.298 0.827	
	40	29	2.72	0.922		
	50	31	2.87	1.088		
	60	13	3.00	1.354		
주택문제 해결	30	16	3.81	1.223	0.678 0.568	
	40	29	3.14	1.575		
	50	31	3.45	1.609		
	60	13	3.38	1.609		
자녀교육 해결	30	14	2.43	1.222	5.675 0.001	a
	40	28	2.82	1.541		ab
	50	31	4.10	1.350		b
	60	13	3.38	1.805		ab
영농기술 습득	30	16	2.13	0.957	1.706 0.172	
	40	29	1.86	0.875		
	50	30	2.33	1.155		
	60	13	2.62	1.502		
농지 확보	30	16	2.25	1.571	0.812 0.491	
	40	29	2.45	1.429		
	50	31	2.61	1.453		
	60	13	3.08	1.656		
영농조언자 확보	30	16	2.94	1.569	2.363 0.077	
	40	29	2.38	1.293		
	50	31	3.35	1.355		
	60	13	3.00	1.683		

↓ : Scheffe 사후검정, a<b

- 먼저 연령별 귀농·귀촌에 따른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시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교육 해결 분야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음. 즉, 50대가 4.10점으로 자녀교육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30대는 2.43점으로 나타나 준비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귀농·귀촌 유형별로는 농지 확보와 영농조언자 확보 부분에서 준비정도에 서로 다른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즉 농지 확보 및 영농조언자 확보분야에서 U턴 형이 I턴 형의 응답자들과 비교 시 준비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IV-11&gt; 귀농·귀촌 유형별 준비정도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

구분	유형	N	준비정도 인식수준		
			M	SD	T(p)
관련교육 이수	U턴형	11	1.91	1.221	-0.898
	I턴형	78	2.27	1.402	(0.3842)
귀농자금 확보	U턴형	11	3.00	0.894	0.735
	I턴형	78	2.78	1.089	(0.4740)
주택문제 해결	U턴형	11	4.00	1.183	1.388
	I턴형	78	3.32	1.558	(0.1687)
자녀교육 해결	U턴형	10	3.80	1.033	1.055
	I턴형	76	3.24	1.640	(0.2942)
영농기술 습득	U턴형	11	2.18	1.079	-
	I턴형	77	2.18	1.121	(1.0000)
농지 확보	U턴형	11	3.36	1.286	2.163*
	I턴형	78	2.45	1.492	(0.0482)
영농조언자 확보	U턴형	11	3.73	0.905	2.019*
	I턴형	78	2.79	1.489	(0.0466)

\* 5% 수준에서 유의함

### ㉔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

- 지금까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귀농 동기와 과정, 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여 보았음. 이하에서는 응답자들의 준비과

정의 하나로서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교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함. 여기서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들의 속성(성별, 연령, 학력, 귀농·귀촌 유형)과 교육 참여 동기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였음.

#### ㉔-1.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

- 응답자들의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가 3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정책자금 확보 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36.4%),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18.2%), “귀농자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8.0%)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응답자들의 속성별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지만 유의적인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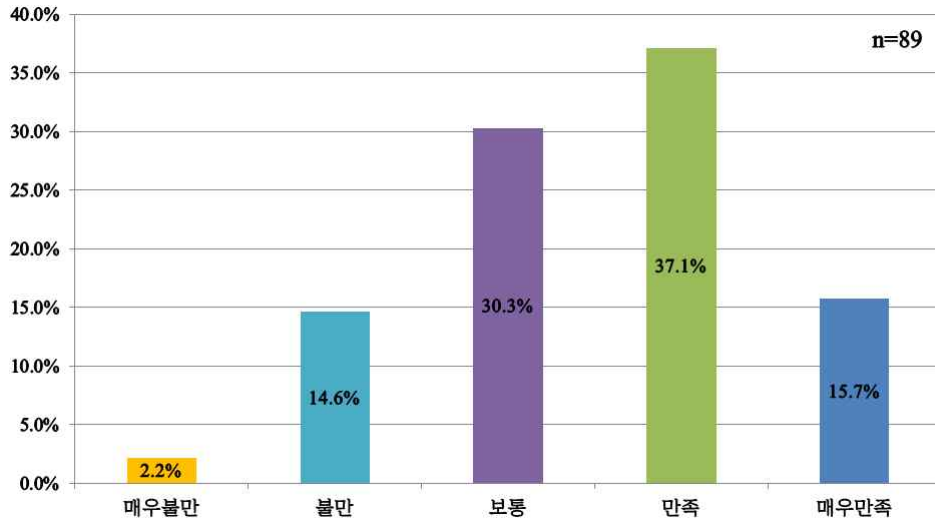
<표 IV-12>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별 분포

(N=88)

속성별		귀농·귀촌교육 참여 동기				x <sup>2</sup> (p)
		정책자금 확보 자격 확보	영농기술 습득	인적 네트워크 형성	귀농·귀촌 정보 습득	
전체		32 (36.4)	16 (18.2)	7 ( 8.0)	33 (37.5)	
연령	30	7 (43.8)	2 (12.5)	1 ( 6.3)	6 (37.5)	13.287(0.150)
	40	10 (34.5)	4 (13.8)	2 ( 6.9)	13 (44.8)	
	50	13 (41.9)	5 (16.1)	1 ( 3.2)	12 (38.7)	
	60	2 (16.7)	5 (41.7)	3 (25.0)	2 (16.7)	
성별	남	25 (35.7)	12 (17.1)	6 ( 8.6)	27 (38.6)	0.511(0.916)
	여	7 (38.9)	4 (22.2)	1 ( 5.6)	6 (33.3)	
학력	고졸	7 (38.9)	5 (27.8)	1 ( 5.6)	5 (27.8)	1.920(0.589)
	대졸	25 (35.7)	11 (15.7)	6 ( 8.6)	28 (40.0)	
귀농 유형	U턴형	7 (63.6)	2 (18.2)	0 ( 0.0)	2 (18.2)	4.823(0.185)
	I턴형	25 (32.5)	14 (18.2)	7 ( 9.1)	31 (40.3)	

### ㉔-2. 귀농·귀촌 교육 만족도

-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한 후 느끼는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한 결과, 전체평균은 3.49점으로 나타났다. 척도별 분포는 “만족한다” 이상이 52.8%로 나타난 반면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6.8%로 나타남.



<그림 IV-5> 만족수준의 분포

- 응답자 속성별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선 연령대별로는 50대 60대의 만족도가 3.903점, 3.769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2.813점으로 만족도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교육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들의 교육 참여 동기별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자들의 만족도가 3.871로 가장 높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 귀농·귀촌 정보 습득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반면에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자들의 교육 만족도 평균점수는 2.889점으로 여타 참여동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V-13> 응답자 속성별 만족도 차이

속성별		N	교육만족도		
			M	SD	S <sup>↓</sup>
연령대	30대	16	2.813	0.750	a
	40대	29	3.310	0.761	ab
	50대	31	3.903	1.012	b
	60대	13	3.769	1.235	b
	F(p)		5.610(0.001)		
성별	남	70	3.542	0.912	
	여	19	3.315	1.293	
	T(p)		0.875(0.384)		
학력	고졸이하	18	3.940	0.998	
	대졸이상	71	3.380	0.976	
	T(p)		2.151(0.041)		
교육 참여 동기	정책자금 신청자격 확보	31	3.871	0.885	b
	영농기술 습득	18	2.889	1.132	a
	인적 네트워크 형성	7	3.714	0.756	ab
	귀농·귀촌 정보 습득	33	3.424	0.936	ab
	F(p)		4.244(0.008)		

↓ : Scheffe 사후검정, a<b

### ㉔-3. 귀농·귀촌 교육 개선 요구 사항

- 귀농·귀촌 교육의 시행과 관련 참여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았음. 총 응답자 89명 중 3명만이 ‘개선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선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86명의 제시사항을 집계한 결과, 교육내용(39.5%), 교육방법(22.1%), 교육시간(15.1%)의 순으로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배기술교육 강화, 교육내용의 심화,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요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요구도가 절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음.

교육시기에 대해서는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해 줄 것에 대한 요구빈도가 많았음. 이 밖에 기타 사항으로는 거주지 중심교육, 교육인원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빈도수가 많게 나타남.

&lt;표 IV-14&gt; 분야별 요구개선 내용 분포

구 분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①거주지 중심교육									4	4.7	4	4.7
②교육자료 확충									1	1.2	1	1.2
③교육내용의 심화					7	8.1					7	8.1
④친화프로그램 마련									1	1.2	1	1.2
⑤교육스케줄 준수									1	1.2	1	1.2
⑥교육시간 연장			1	1.2							1	1.2
⑦교육시기 분산	1	1.2	1	1.2							2	2.3
⑧교육인원 제한					1	1.2			4	4.7	5	5.8
⑨기초교육 강화					2	2.3					2	2.3
⑩경영유통교육 강화					2	2.3					2	2.3
⑪농한기 교육	5	5.8									5	5.8
⑫멀티미디어 활용							1	1.2			1	1.2
⑬부류별 구분교육							1	1.2	3	3.5	4	4.7
⑭사례위주 교육					1	1.2					1	1.2
⑮야간교육			1	1.2							1	1.2
⑯재배기술 교육					10	11.6					10	11.6
⑰교육기간 단축			10	11.6							10	11.6
⑱참여형식 교육							1	1.2			1	1.2
⑲친환경교육 강화					1	1.2					1	1.2
⑳현장실습 교육					5	5.8	14	16.3			19	22.1
㉑무응답					5	5.8	2	2.3			7	8.1
계	6	7.0	13	15.1	34	39.5	19	22.1	14	16.3	86	100.0

#### ㉔-4. 귀농·귀촌 교육 운영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 귀농·귀촌 교육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별 응답자들이 느끼는 필요도 정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음.
- 세부적으로 제시한 과목별 응답자들의 필요도를 집계한 결과, 평균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낸 항목으로는 작물별 영농기술, 농업경영, 판매 및 마케팅, 소비시장에 대한 교육, 농업정보화와 전자상거래 등이었고, 특히 작물별 영농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4.27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분야, 지역문화의 이해, 세무 및 회계 관리, 농촌관광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 중요도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교육 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n=89)

구 분	MAX	MIN	M	SD
① 귀농·귀촌 정보교육	2	5	3.97	0.923
② 작물별 영농기술	1	5	4.27	0.889
③ 농업경영교육	2	5	4.13	0.882
④ 시설관리 및 농기계교육	1	5	3.85	0.899
⑤ 소비지시장에 대한 교육	1	5	4.03	0.859
⑥ 지역문화의 이해	2	5	3.54	0.604
⑦ 농촌관광 및 서비스교육	1	5	3.54	1.077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인지수준이 응답자들의 귀농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여 보았음. 농업경영 및 소비지 시장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의 정도는 귀농단계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귀농·귀촌 정보, 작물별 영농기술, 시설 및 농기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농촌관광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는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IV-16&gt; 교육 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교육프로그램	귀농단계	필요도 인식 수준				S <sup>↓</sup>
		N	M	SD	F(p)	
귀농·귀촌 정보교육	결심단계	13	4.31	0.855	3.981 (0.011)	b
	탐색단계	30	4.20	0.925		b
	준비단계	25	3.96	1.060		ab
	시행단계	21	3.43	0.507		a
작물별 영농기술	결심단계	13	3.62	0.650	4.549 (0.005)	a
	탐색단계	30	4.17	0.986		ab
	준비단계	25	4.40	0.957		b
	시행단계	21	4.67	0.483		b
농업경영교육	결심단계	13	4.15	0.801	0.454 (0.715)	
	탐색단계	30	4.00	0.910		
	준비단계	25	4.28	1.021		
	시행단계	21	4.14	0.727		
시설관리 및 농기계교육	결심단계	13	3.23	0.599	11.739 (0.000)	a
	탐색단계	30	3.43	0.817		a
	준비단계	25	4.16	0.850		b
	시행단계	21	4.48	0.680		b
소비지시장에 대한 교육	결심단계	13	4.15	0.801	0.111 (0.953)	
	탐색단계	30	4.00	0.830		
	준비단계	25	4.00	1.041		
	시행단계	21	4.05	0.740		
지역문화의 이해	결심단계	13	3.31	0.480	4.434 (0.006)	a
	탐색단계	30	3.33	0.606		a
	준비단계	25	3.64	0.638		ab
	시행단계	21	3.86	0.478		b
농촌관광 및 서비스교육	결심단계	13	4.23	0.832	8.689 (0.000)	b
	탐색단계	30	4.00	0.743		b
	준비단계	25	3.08	1.441		a
	시행단계	21	3.00	0.447		a

↓ : Scheffe 사후검정, a&lt;b

- 즉, 귀농·귀촌에 따른 정보와 농촌관광 및 서비스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는 결심과 탐색단계에 있는 응답자들이 준비나 시행단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작물별 영농기술, 시설관리 및 농기계 이용,

지역문화의 이해에 대해서는 준비나 시행단계의 응답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의 귀농·귀촌 동기와 활동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근거로 교육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귀농·귀촌교육 시행에 따른 속성 및 귀농 동기별 만족도 등을 파악한 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 교육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주로 남성이며, 50대가 많은 분포를 보였고, 동반 가족 수는 평균 2.42명으로 집계되었음. 학력 수준은 대졸이상(대학원 포함)의 고학력자 분포가 많았고, 귀농 전 직업은 경영/전문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귀농유형은 U턴 형 보다는 I턴 형이 많았고, 귀농·귀촌 전 거주 지역은 “서울”의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귀농·귀촌 동기로는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가 많았고, 귀농·귀촌 지역으로 제주를 선택한 이유는 “관광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동이 유리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귀농·귀촌 단계별로는 “탐색단계”가 가장 많았지만 단계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고, 준비기간도 개인별 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는 상당수가 “농업전문기관”을 통하여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안정된 귀농·귀촌생활에 필요한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4,074만원으로 제주지역 농가 평균소득과 비슷하였지만, 속성별로는 40대와 50대, 동반 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생산 활동으로는 “재배 또는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감귤을 중심으로 한 “노지작물” 선택 비율이 높았음. 또한 응답자들

의 59.6%가 “소득확보”를 위하여 농외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는 평균 20,843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40대, 50대와 I턴형의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자금의 출처로는 “자산처분”을 통하여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용도별로는 “농지확보”가 4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귀농·귀촌 준비정도로 주택마련과 자녀교육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 정도가 낮았고 특히 영농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준비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응답자 속성별로는 자녀교육 분야에서 30대, 농지와 영농조언자 확보 분야에서는 I턴 형이 준비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들의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교육 참여 결과
- 응답자들이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한 동기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의 습득과 정책자금 확보 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가 가장 많았음
  -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30대와 대졸 이상,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 응답자들은 교육내용(39.5%), 교육방법(22.1%), 교육시간(15.1%) 순으로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재배기술교육 강화, 교육내용의 심화,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요구빈도가 높았고,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빈도가 높았음.
- 교육 프로그램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작물별 영농기술, 농업경영, 판매 및 마케팅, 소비시장에 대한 교육, 농업정보화와 전자상거래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책, 지역문화의 이해, 회계관리, 농촌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 귀농단계별로는 초기단계인 결심과 탐색단계에 있는 응답자들이 귀

농·귀촌에 따른 정보와 농촌관광 및 서비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작물별 영농기술, 시설관리 및 농기계 이용, 지역문화의 이해에 대해서는 준비나 시행단계의 응답자들이 높게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귀농·귀촌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 교육실시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속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자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요구하는 바가 크게 다른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귀농·귀촌 동기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귀농·귀촌교육을 공통 및 전문 과정으로 구분할 경우, 교육 참여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희망분야에 대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교육시행이 가능해져 교육의 기대효과와 만족도를 보다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전담 부서 및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2) 귀농·귀촌자 대상

### ①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목적 : 평소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느낀 점과 농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1. 10. 11~10. 15
- 조사대상 : 귀농·귀촌인
- 조사부수 : 51부
-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② 조사내용

- 귀농·귀촌 동기 및 과정에 대한 사항
  -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된 이유, 대상지역을 제주인 이유, 귀농·귀촌 유형, 준비기간, 정보수집 경로 등
- 귀농·귀촌교육 관련 참여 동기와 관련한 사항
  - 교육이수 여부, 참여 동기, 도움 정도 등
- 귀농·귀촌 활동과 계획에 관한 사항
  - 계획 및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과 규모, 투자자금의 규모, 자금의 조달 방법, 만족할만한 소득 수준 등
  - 준비정도, 생활의 만족정도,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중요한 것, 가장 큰 애로사항, 앞으로의 계획, 향후 농촌 거주 계획 및 그 이유, 귀농·귀촌 전 농사 지으신 여부, 귀농·귀촌하신 연도 등.
-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 ③ 조사결과

###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귀농·귀촌 구분을 보면 귀농·귀촌 27명(52.9%), 귀농 19명(37.3%), 귀촌 5명(9.8%)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4명(86.3%), 여성 7명(13.7%)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49세 24명(47.1%), 50~59세 17명(33.3%), 60세 이상 6명(11.8%), 40세 미만 4명(7.8%)의 순으로 나타남.
  - 가족 수는 4명 20명(38.5%), 2명 13명(25.0%), 3명 10명(19.2%), 5명 이상 9명(17.3%)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 32명(62.7%), 고졸 19명(37.3%)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전 직업으로는 자영업 18명(35.3%), 사무/판매/서비스 14명(27.5%), 공무원, 경영/전문직 각각 7명(13.7%), 생산기술직 3명(5.9%), 학생, 전업주부 각각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전 연평균 소득별로는 3천만~4천만 원 미만 23명(45.1%), 2천만~3천만 원 미만 14명(27.5%), 4천만~5천만 원 미만 7명(13.7%), 5천만 원 이상 6명(11.8%), 1천만 원 미만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귀농	19	37.3
	귀촌	5	9.8
	귀농, 귀촌	27	52.9
성별	남자	44	86.3
	여자	7	13.7
연령	40세 미만	4	7.8
	40세 ~ 49세	24	47.1
	50세 ~ 59세	17	33.3
	60세 이상	6	11.8
가족수	2명	13	25.0
	3명	10	19.2
	4명	20	38.5
	5명 이상	9	17.3
학력	고졸	19	37.3
	대졸	32	62.7
귀농·귀촌 전 직업	사무/판매/서비스	14	27.5
	공무원	7	13.7
	자영업	18	35.3
	생산기술직	3	5.9
	학생	1	2.0
	전업주부	1	2.0
	경영/전문직	7	13.7
귀농·귀촌 전 소득	1천만 원 미만	1	2.0
	2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14	27.5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23	45.1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7	13.7
	5천만 원 이상	6	11.8
합계		51	100.0

- 출생지역별로는 제주 26명(51.0%), 서울 9명(17.6%), 경기 5명(9.8%), 강원 4명(7.8%), 전북, 경북 각각 2명(3.9%), 전남, 대구, 광주 각각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전 거주 지역은 서울 17명(33.3%), 경기 13명(25.5%), 제주 13명(25.5%), 광주, 부산 각각 2명(3.9%), 인천, 청주, 춘천, 충북 각각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18&gt; 출생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	26	51.0
서울	9	17.6
경기	5	9.8
강원	4	7.8
전북	2	3.9
경북	2	3.9
전남	1	2.0
대구	1	2.0
광주	1	2.0
합계	51	100.0

&lt;표 IV-19&gt;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17	33.3
경기	13	25.5
제주	13	25.5
광주	2	3.9
부산	2	3.9
인천	1	2.0
청주	1	2.0
춘천	1	2.0
충북	1	2.0
합계	51	100.0

- 귀농·귀촌 예정지역으로는 애월 11명(23.9%), 저지 4명(8.7%), 위미 3명(6.5%), 서귀, 조수, 청수, 한경, 한림, 2명(4.3%), 고산, 금악, 성읍, 세화, 안덕, 용수, 하례, 함덕, 1명(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읍면별이 아닌 제주라는 응답은 10명(21.7%)으로 나타남.

<표 IV-20> 귀농·귀촌 예정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애월	11	23.9
저지	4	8.7
위미	3	6.5
서귀	2	4.3
조수	2	4.3
칭수	2	4.3
한경	2	4.3
한림	2	4.3
고산	1	2.2
금악	1	2.2
성읍	1	2.2
세화	1	2.2
안덕	1	2.2
용수	1	2.2
하례	1	2.2
함덕	1	2.2
제주	10	21.7
합계	46	100.0

⑥ 귀농·귀촌 결정의 가장 큰 이유

- 귀농·귀촌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는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16명(31.4%),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생태, 환경, 소박한 삶 등) 9명(17.6%),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8명(15.7%),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4명(7.8%), 인간다운 삶을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기타가 각각 3명(5.9%),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2명(3.9%)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1> 귀농·귀촌 결정의 가장 큰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16	31.4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생태, 환경, 소박한 삶 등)	9	17.6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8	15.7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4	7.8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3	5.9
농촌생활이 좋아서	3	5.9
인간다운 삶을 위해	3	5.9
기타	3	5.9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2	3.9
합계	51	100.0



㉔ 제주지역을 귀농·귀촌 대상으로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 제주지역을 귀농·귀촌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고향이라서 15명(29.4%), 주변인 소개 14명(27.5%), 자연환경이 좋아서 9명(17.6%), 타 귀농인의 소개 6명(11.8%), 관광 등 농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동에 유리할 것 같아서 4명(7.8%), 친환경농업생산에 유리할 것 같아서 2명(3.9%), 기타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2> 제주지역을 귀농·귀촌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고향이라서	15	29.4
주변인 소개	14	27.5
자연환경이 좋아서	9	17.6
타 귀농인의 소개	6	11.8
관광 등 농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동에 유리할 것 같아서	4	7.8
친환경농업생산에 유리할 것 같아서	2	3.9
기 타	1	2.0
합 계	51	100.0

㉕ 귀농·귀촌 유형

- 귀농·귀촌 유형으로는 어릴 적 농촌거주 - 도시취업 - 고향농촌 귀농 26명(51.0%), 도시출생 - 도시취업 - 농촌으로 귀농 15명(29.4%), 어릴 적 농촌거주 - 도시취업 - 타 지역 농촌 귀농 9명(17.6%), 기타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3> 귀농·귀촌 유형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릴적 농촌거주 - 도시취업 - 고향농촌 귀농	26	51.0
도시출생-도시취업 - 농촌으로 귀농	15	29.4
어릴적 농촌거주 - 도시취업 - 타 지역 농촌 귀농	9	17.6
기 타	1	2.0
합 계	51	100.0

㉔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

-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으로는 2년 이상~3년 미만 18명(35.3%), 1년 이상~2년 미만 17명(33.3%), 1년 미만 7명(13.7%), 3년 이상~4년 미만 5명(9.8%), 5년 이상 3명(5.9%), 4년 이상~5년 미만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4>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7	13.7
1년 이상~2년 미만	17	33.3
2년 이상~3년 미만	18	35.3
3년 이상~4년 미만	5	9.8
4년 이상~5년 미만	1	2.0
5년 이상	3	5.9
합 계	51	100.0

㉕ 귀농·귀촌 관련정보 수집 경로

- 귀농·귀촌 관련정보 수집 경로로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지인 21명(41.2%), 농업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13명(25.5%), 인터넷 9명(17.6%), 일반 행정(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4명(7.8%), 기타 2명(3.9%), 언론매체(방송, 신문), 농업관련 전문책자, 잡지 각각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5> 귀농·귀촌 관련정보 수집 경로

구 분	빈도(명)	비율(%)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지인	21	41.2
농업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13	25.5
인터넷	9	17.6
일반행정(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4	7.8
언론매체(방송, 신문)	1	2.0
농업관련 전문책자, 잡지	1	2.0
기 타	2	3.9
합 계	51	100.0

## ㉔ 귀농·귀촌 교육 받은 경험

-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서는 받은 적 있다 30명(58.8%), 받은 적 없다 21명(41.2%)으로 나타남.

&lt;표 IV-26&gt; 귀농·귀촌 교육 받은 경험

구 분	빈도(명)	비율(%)
있 다	30	58.8
없 다	21	41.2
합 계	51	100.0

## ㉕ 귀농·귀촌 교육 참여동기

- 귀농·귀촌 교육 참여동기는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7명(56.7%),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습득 11명(36.7%), 귀농자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2명(6.7%)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27&gt;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

구 분	빈도(명)	비율(%)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7	56.7
귀농자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2	6.7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습득	11	36.7
합 계	30	100.0

## ㉖ 귀농교육의 영농정착에 도움 정도

- 귀농교육이 영농정책에 주는 도움의 정도는 ‘보통’ 11명(37.9%), ‘도움이 됨’ 10명(34.5%), ‘도움이 안 됨’ 및 ‘매우 도움이 됨’이 각각 4명(13.8%)의 순으로 나타났고, 귀농교육이 영농정책이 도움을 주는 편으로 나타남.

&lt;표 IV-28&gt; 귀농교육의 영농정착에 도움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도움이 안 됨	4	13.8
보통	11	37.9
도움이 됨	10	34.5
매우 도움이 됨	4	13.8
합 계	29	100.0

①-1. a.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노지작물)

- 노지작물의 계획 또는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으로는 감귤 28명(80.0%), 마늘 4명(11.4%), 감귤/당근 및 감귤/마늘, 블루베리 각각 1명(2.9%)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9>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노지작물)

구 분	빈도(명)	비율(%)
감귤	28	80.0
감귤/당근	1	2.9
감귤/마늘	1	2.9
마늘	4	11.4
블루베리	1	2.9
합 계	35	100.0

①-1. b.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노지작물)

- 노지작물의 계획 또는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는 1,000~2,000평 미만, 5,000평 이상 각각 12명(34.3%), 2,000~3,000평 미만 5명(14.3%), 1,000평 미만 4명(11.4%), 3,000~5,000평 미만 2명(5.7%)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0>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노지작물)

구 분	빈도(명)	비율(%)
1,000 미만	4	11.4
1,000 ~ 2,000 미만	12	34.3
2,000 ~ 3,000 미만	5	14.3
3,000 ~ 5,000 미만	2	5.7
5,000 이상	12	34.3
합 계	35	100.0

①-2. a.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시설작물)

- 시설작물의 계획 또는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으로는 감귤 8명(50.0%), 키위 5명(31.3%), 브로콜리, 블루베리, 표고버섯 각각 1명(6.3%)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31&gt;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시설작물)

구 분	빈도(명)	비율(%)
감귤	8	50.0
브로콜리	1	6.3
블루베리	1	6.3
키위	5	31.3
표고버섯	1	6.3
합 계	16	100.0

## ①-2. b.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시설작물)

- 시설작물의 계획 또는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는 6,600~9,900㎡ 미만 5명(31.3%), 3,300~6,600㎡ 미만 4명(25.0%), 16,500㎡ 이상 3명(18.8%), 3,300㎡ 미만, 9,900~16,500㎡ 미만 각각 2명(12.5%)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32&gt; 계획 중이거나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규모(시설작물)

구 분(㎡)	빈도(명)	비율(%)
3,300 미만	2	12.5
3,300 ~ 6,600 미만	4	25.0
6,600 ~ 9,900 미만	5	31.3
9,900 ~ 16,500 미만	2	12.5
16,500 이상	3	18.8
합 계	16	100.0

## ㉔ 귀농·귀촌을 위한 투자자금의 규모

- 귀농·귀촌을 위한 투자자금의 규모는 2억~3억 원 미만 13명(27.7%), 1억~2억 원 미만 11명(23.4%), 5억 원 미만 9명(19.1%), 3억~4억 원 미만 8명(17.0%), 1억 원 미만 5명(10.6%), 4억~5억 원 미만 1명(2.1%)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3> 귀농·귀촌을 위한 투자자금의 규모

구 분	빈도(명)	비율(%)
1억 원 미만	5	10.6
1억 원 ~ 2억 원 미만	11	23.4
2억 원 ~ 3억 원 미만	13	27.7
3억 원 ~ 4억 원 미만	8	17.0
4억 원 ~ 5억 원 미만	1	2.1
5억 원 미만	9	19.1
합 계	47	100.0

① 귀농·귀촌생활 관련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

- 귀농·귀촌생활관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으로는 4천만 원 미만, 5천만~7천만 원 미만 각각 15명(30.0%), 4천만~5천만 원 미만 13명(26.0%), 7천만~1억 원 미만 5명(10.0%), 1억 원 이상 2명(4.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4> 귀농·귀촌생활 관련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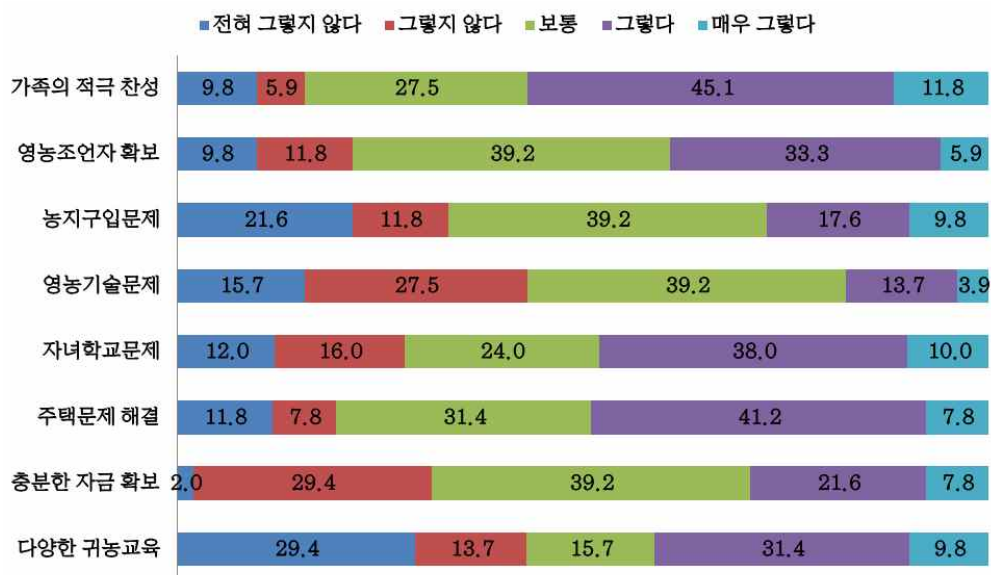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비율(%)
4천만 원 미만	15	30.0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13	26.0
5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15	30.0
7천만 원 ~ 1억 원 미만	5	10.0
1억 원 이상	2	4.0
합 계	50	100.0

㉞-1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다양한 귀농교육 받음)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다양한 귀농교육 받음)에 대해서는 그렇다 16명(31.4%),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29.4%), 보통 8명(15.7%), 그렇지 않다 7명(13.7%), 매우 그렇다 5명(9.8%)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귀농교육을 받은 편은 낮게 나타남.

&lt;표 IV-35&gt; 귀농·귀촌 준비정도

항 목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다양한 귀농교육	비율(%)	29.4	13.7	15.7	31.4	9.8	100.0
충분한 자금 확보	비율(%)	2.0	29.4	39.2	21.6	7.8	100.0
주택문제 해결	비율(%)	11.8	7.8	31.4	41.2	7.8	100.0
자녀학교문제	비율(%)	12.0	16.0	24.0	38.0	10.0	100.0
영농기술문제	비율(%)	15.7	27.5	39.2	13.7	3.9	100.0
농지구입문제	비율(%)	21.6	11.8	39.2	17.6	9.8	100.0
영농조언자 확보	비율(%)	9.8	11.8	39.2	33.3	5.9	100.0
가족의 적극 찬성	비율(%)	9.8	5.9	27.5	45.1	11.8	100.0



&lt;그림 IV-6&gt; 귀농·귀촌 준비정도

## ㉓-2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정도(충분한 자금 확보)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충분한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보통’ 20명(39.2%), ‘그렇지 않다’ 15명(29.4%), ‘그렇다’ 11명(21.6%), ‘매우 그렇다’ 4명(7.8%), ‘전혀 그렇지 않다’ 1명(2.0%)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충분한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㉓-3.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주택문제 해결)**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렇다’ 21명(41.2%), ‘보통’ 16명(31.4%),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1.8%),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 각각 4명(7.8%)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 전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㉓-4.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자녀학교문제 해결)**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자녀학교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렇다’ 19명(38.0%), ‘보통’ 12명(24.0%), ‘그렇지 않다’ 8명(16.0%),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2.0%), ‘매우 그렇다’ 5명(10.0%)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 전 자녀학교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㉓-5.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영농기술문제 해결)**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영농기술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보통’ 20명(39.2%), ‘그렇지 않다’ 14명(27.5%), ‘전혀 그렇지 않다’ 8명(15.7%), ‘그렇다’ 7명(13.7%), ‘매우 그렇다’ 2명(3.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 전 영농기술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㉓-6.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농지구입문제 해결)**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전 농지구입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보통’ 20명(39.2%),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21.6%), ‘그렇다’ 9명(17.6%), ‘그렇지 않다’ 6명(11.8%), ‘매우 그렇다’ 5명(9.8%)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 전 농지구입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㉓-7.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을 도와줄 영농조언자 확보)**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을 도와줄 영농조언자 확보)에 대해서는 ‘보통’ 20명(39.2%), ‘그렇다’ 17명(33.3%), ‘그렇지 않다’ 6명



(11.8%), '전혀 그렇지 않다' 5명(9.8%), '매우 그렇다' 3명(5.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을 도와줄 영농조언자 확보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 ㉞-8.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결심 시 가족이 적극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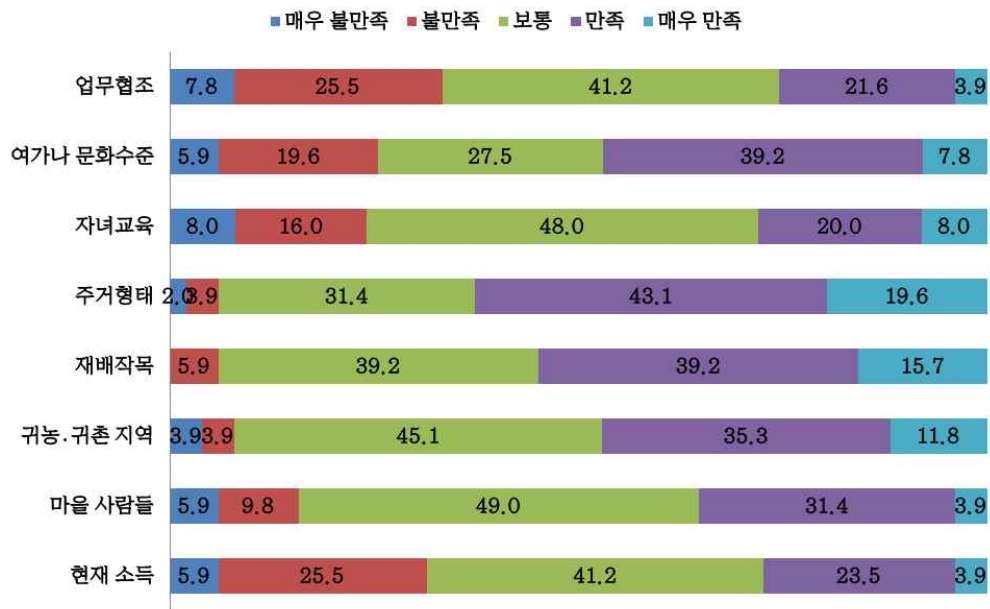
-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귀농 결심 시 가족이 적극 찬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23명(45.1%), '보통' 14명(27.5%), '매우 그렇다' 6명(11.8%), '전혀 그렇지 않다' 5명(9.8%), '그렇지 않다' 3명(5.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 결심 시 가족이 적극 찬성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표 IV-36>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

항 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현재 소득	%	5.9	25.5	41.2	23.5	3.9	100.0
마을 사람들	%	5.9	9.8	49.0	31.4	3.9	100.0
귀농·귀촌 지역	%	3.9	3.9	45.1	35.3	11.8	100.0
재배작목	%	-	5.9	39.2	39.2	15.7	100.0
주거형태	%	2.0	3.9	31.4	43.1	19.6	100.0
자녀교육	%	8.0	16.0	48.0	20.0	8.0	100.0
여가나 문화수준	%	5.9	19.6	27.5	39.2	7.8	100.0
업무협조	%	7.8	25.5	41.2	21.6	3.9	100.0
의료 및 복지수준	%	11.8	27.5	33.3	25.5	2.0	100.0

#### ㉞-1.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현재소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1명(41.2%), '불만족' 13명(25.5%), '만족' 12명(23.5%), '매우 불만족' 3명(5.9%), '매우 만족' 2명(3.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그림 IV-7>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

㉒-2.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마을 사람들과의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마을 사람들과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5명(49.0%), ‘만족’ 16명(31.4%), ‘불만족’ 5명(9.8%), ‘매우 불만족’ 3명(5.9%), ‘매우 만족’ 2명(3.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마을 사람들과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㉒-3.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귀농·귀촌 지역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귀농·귀촌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3명(45.1%), ‘만족’ 18명(35.3%), ‘매우 만족’ 6명(11.8%), ‘매우 불만족’ 및 ‘불만족’이 각각 2명(3.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 중 귀농·귀촌 지역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㉒-4.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재배작목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재배작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및 ‘만족’이 각각 20명(39.2%), ‘매우 만족’ 8명(15.7%), ‘불만족’ 3명(5.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재배작목에 대한 만족

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㉔-5.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주거형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주거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 22명(43.1%), ‘보통’ 16명(31.4%), ‘매우 만족’ 10명(19.6%), ‘불만족’ 2명(3.9%), ‘매우 불만족’ 1명(2.0%)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주거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㉔-6.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4명(48.0%), ‘만족’ 10명(20.0%), ‘불만족’ 8명(16.0%), ‘매우 불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각 7명(8.0%)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㉔-7.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여가나 문화수준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여가나 문화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 20명(39.2%), ‘보통’ 14명(27.5%), ‘불만족’ 10명(19.6%), ‘매우 만족’ 4명(7.8%), ‘매우 불만족’ 3명(5.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여가나 문화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㉔-8.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지역농업관련 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지역농업관련 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1명(41.2%), ‘불만족’ 13명(25.5%), ‘만족’ 11명(21.6%), ‘매우 불만족’ 4명(7.8%), ‘매우 만족’ 2명(3.9%)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지역농업관련 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㉔-9.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의료 및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의료 및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는 ‘보통’ 17명(33.3%), ‘불만족’ 14명(27.5%), ‘만족’ 13명(25.5%), ‘매우 불만족’ 6명(11.8%), ‘매우 만족’ 1명(2.0%)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의료 및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 ㉠-1.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1순위)

○ 귀농·귀촌 애로사항(1순위)으로는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문제’ 13명(25.5%),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8명(15.7%), ‘재배기술 문제’,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각각 5명(9.8%),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4명(7.8%),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각각 3명(5.9%),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각각 2명(3.9%), ‘판매기술의 습득문제’, ‘노동력 확보 문제’,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각각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7>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1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문제	13	25.5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8	15.7
재배기술 문제	5	9.8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5	9.8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4	7.8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	3	5.9
자녀 교육 문제	3	5.9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2	3.9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2	3.9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2	3.9
판매기술의 습득 문제	1	2
노동력 확보 문제	1	2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1	2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1	2
합 계	51	100.0

### ㉠-2.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2순위)

- 귀농·귀촌 애로사항(2순위)으로는 ‘재배기술 문제’ 8명(15.7%),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6명(11.8%),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각각 5명(9.8%),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 문제’,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 각각 4명(7.8%), ‘노동력 확보 문제’ 3명(5.9%), ‘판매기술의 습득문제’,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여가나 문화활동 문제’,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각각 2명(3.9%),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각각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8>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2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재배기술 문제	8	15.7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6	11.8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5	9.8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5	9.8
자녀 교육 문제	5	9.8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 문제	4	7.8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	4	7.8
노동력 확보 문제	3	5.9
판매기술의 습득 문제	2	3.9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2	3.9
여가나 문화활동 문제	2	3.9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2	3.9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1	2.0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1	2.0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1	2.0
합 계	51	100.0

### ㉔-3.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3순위)

- 귀농·귀촌 애로사항(3순위)으로는 ‘노동력 확보 문제’,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 문제’, ‘여가나 문화활동 문제’,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5명(9.8%), ‘재배기술 문제’, ‘판매기술의 습득 문제’,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4명(7.8%),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3명(5.9%),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생산자, 농민 단체 가입 문제’ 2명(3.9%),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9>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3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노동력 확보 문제	5	9.8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 문제	5	9.8
여가나 문화활동 문제	5	9.8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5	9.8
재배기술 문제	4	7.8
판매기술의 습득 문제	4	7.8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	4	7.8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4	7.8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3	5.9
자녀 교육 문제	3	5.9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2	3.9
생산자, 농민 단체 가입 문제	2	3.9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1	2.0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1	2.0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1	2.0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1	2.0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1	2.0
합 계	51	100.0

㉔-1.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1순위)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1순위)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소득’ 19명(37.3%), ‘토지확보’ 6명(11.8%), ‘농작물 재배기술’, ‘정부의 정책지원’ 5명(9.8%), ‘운영자금의 확보’,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3명(5.9%), ‘농외소득 기회’, ‘여가시간, 다양한 문화시설’, ‘교육여건’ 2명(3.9%), ‘생산물의 판매기술’, ‘지역주민과의 교류’,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40>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1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안정적인 농업소득	19	37.3
토지확보	6	11.8
농작물 재배기술	5	9.8
정부의 정책지원	5	9.8
운영자금의 확보	3	5.9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3	5.9
농외소득 기회	2	3.9
여가시간	2	3.9
다양한 문화시설	2	3.9
교육여건	2	3.9
생산물의 판매기술	1	2.0
지역주민과의 교류	1	2.0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1	2.0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1	2.0
합 계	51	100.0

㉔-2.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2순위)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2순위)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소득’ 10명(19.6%), ‘토지확보’, ‘운영자금의 확보’ 7명(13.7%), ‘교육여건’, ‘농작물 재배기술’ 6명(11.8%), ‘농외소득 기회’, ‘생산물의 판매기술’ 3명(5.9%), ‘다양한 문화시설’, ‘지역주민과의 교류’, ‘정부의 정책지원’ 2명(3.9%), ‘여가시간’, ‘마을 분위기’,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41>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2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안정적인 농업소득	10	19.6
토지확보	7	13.7
운영자금의 확보	7	13.7
교육여건	6	11.8
농작물 재배기술	6	11.8
농외소득 기회	3	5.9
생산물의 판매기술	3	5.9
다양한 문화시설	2	3.9
지역주민과의 교류	2	3.9
정부의 정책지원	2	3.9
여가시간	1	2.0
마을 분위기	1	2.0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1	2.0
합 계	51	100.0



## ㉔-3.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3순위)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3순위)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소득’, ‘정부의 정책지원’ 8명(15.7%), ‘농작물 재배기술’ 7명(13.7%), ‘운영자금의 확보’ 6명(11.8%), ‘의료여건’ 5명(9.8%), ‘생산물의 판매기술’ 4명(7.8%), ‘토지확보’ 3명(5.9%), ‘여가시간’, ‘마을 분위기’,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2명(3.9%), ‘농외소득 기회’, ‘다양한 문화시설’, ‘교육여건’, ‘지역주민과의 교류’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42&gt;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3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안정적인 농업소득	8	15.7
정부의 정책지원	8	15.7
농작물 재배기술	7	13.7
운영자금의 확보	6	11.8
의료여건	5	9.8
생산물의 판매기술	4	7.8
토지확보	3	5.9
여가시간	2	3.9
마을 분위기	2	3.9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2	3.9
농외소득 기회	1	2.0
다양한 문화시설	1	2.0
교육여건	1	2.0
지역주민과의 교류	1	2.0
합 계	51	100.0

## ㉔ 귀농·귀촌 활동 결과, 영농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 귀농·귀촌 활동 결과, 영농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규모, ‘작목을 확대하여 농업에 계속 종사’ 25명(49.0%), ‘규모, 작목을 현상유지하며, 농업에 계속 종사’ 16명(31.4%), ‘규모 현상유지, 작목전환 고려’

5명(9.8%),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고려', '타 직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사는 부업으로 고려' 2명(3.9%), '기타' 1명(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43> 귀농·귀촌 활동 결과, 영농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구 분	빈도(명)	비율(%)
규모, 작목을 확대하여 농업에 계속 종사	25	49.0
규모, 작목을 현상유지하며, 농업에 계속 종사	16	31.4
규모, 현상유지, 작목전환 고려	5	9.8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 고려	2	3.9
타 직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사는 부업으로 고려	2	3.9
기 타	1	2.0
합 계	51	100.0

㉠ 향후 농촌거주 계획

- 향후 농촌거주 계획으로는 '계속하여 농촌에 거주' 34명(66.7%), '가능하면 농촌에 계속 거주' 13명(25.5%),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다' 4명(7.8%)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44> 향후 농촌거주 계획

구 분	빈도(명)	비율(%)
계속하여 농촌에 거주	34	66.7
가능하면 농촌에 계속 거주	13	25.5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다	4	7.8
합 계	51	100.0

㉠-1.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이유

-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는 '농촌 환경이 좋아서' 20명(42.6%), '농사일이 좋아서' 10명(21.3%), '농업, 농촌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8명(17.0%), '적정한 소득 때문에', '기타' 4명(8.5%), '주변 이웃이나 주민들 때문에' 1명(2.1%)의 순으로 나타남.

&lt;표 IV-45&gt;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적정한 소득 때문에	4	8.5
농사일이 좋아서	10	21.3
농촌 환경이 좋아서	20	42.6
주변 이웃이나 주민들 때문에	1	2.1
농업, 농촌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8	17.0
기 타	4	8.5
합 계	47	100.0

## ⑤ 귀농·귀촌 전 농사 경험

- 귀농·귀촌 전 농사경험으로는 ‘없다’ 34명(66.7%), ‘있다’ 17명(33.3%)으로 나타남.

&lt;표 IV-46&gt; 귀농·귀촌 전 농사 경험

구 분	빈도(명)	비율(%)
적정한 소득 때문에	17	33.3
농사일이 좋아서	34	66.7
합 계	51	100.0

## 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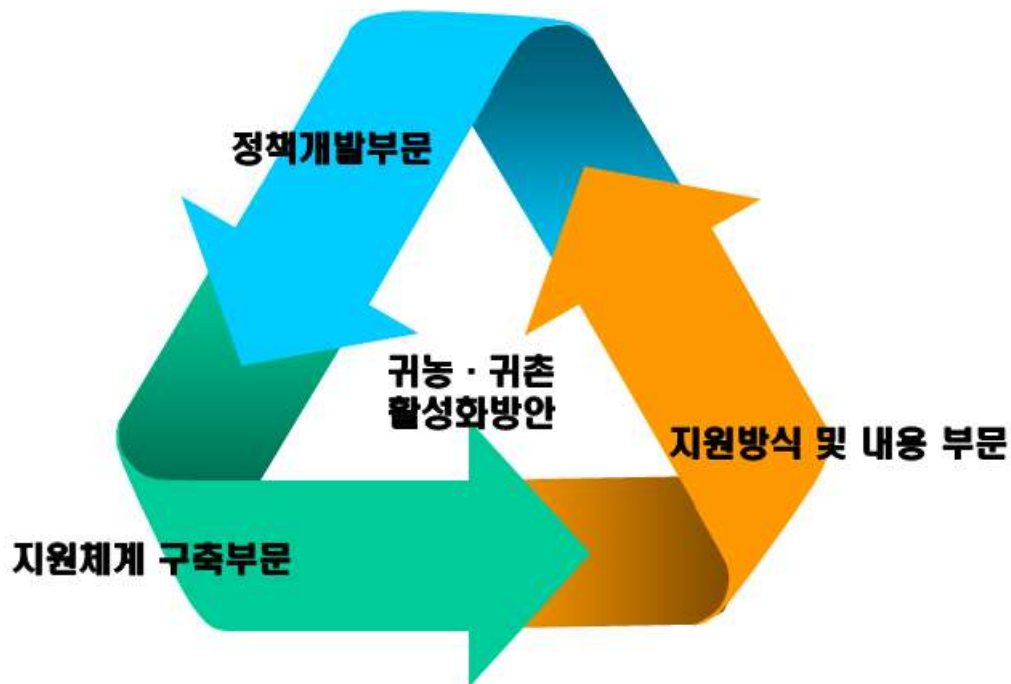
- 귀농·귀촌 구분을 보면 귀농·귀촌, 귀농, 귀촌 순으로, 남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음. 가족수는 4명, 학력은 대졸이 월등히 많았음. 귀농·귀촌 전 직업으로는 자영업, 연평균 소득별로는 3천만~4천만 원 미만, 출생지역별로는 제주, 서울 순이며, 귀농·귀촌 전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순으로, 예정지역으로는 애월읍이 가장 많음.
- 귀농·귀촌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는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제주지역 선택한 이유로는 고향이라서, 주변인 순임. 귀농·귀촌 유형으로는 어릴 적, U자 형, I자 형, J자 형 순으로, 준비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정보수집경로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지인과 농업전문기관 및 홈페이지로 조사됨. 58.8%가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으며, 동기는 영농기술을 습득을 위해서며, 귀농교육이 영농

정책에 도움을 주는 편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귀농교육을 단계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농교육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로 하겠음.

- 노지작물의 계획 또는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으로는 감귤로 3,300~6,600m<sup>2</sup> 미만 규모이며, 시설작물 또한 감귤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키위 순으로 규모는 6,600~9,900m<sup>2</sup>가 가장 많았음.
- 귀농·귀촌을 위한 투자자금의 규모는 2억~3억 원 미만으로,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으로는 4천만 원 미만이며,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정도(충분한 자금 확보)는 높게 나타났으며,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 전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남. 자녀 학교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였음.
- 그러나, 귀농 전 영농기술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준비단계가 낮았으며, 농지구입 또한 낮게 나타났음. 영농조언자 확보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았으며, 가족의 귀농에 대한 적극 찬성이 높게 나타남.
-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현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으며, 마을사람들과의 만족도가 높았음. 귀농·귀촌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았고, 재배작목과 주거형태, 자녀교육, 여가나 문화수준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 지역농업관련 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으며, 의료 및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또한 낮게 나타남.
- 귀농·귀촌 애로사항으로는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문제,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등이었으며, 다음으로 경영기술의 습득, 생산물 판로 문제와 자녀 교육문제,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순이었음.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 토지확보, 농작물 재배기술, 정부의 정책지원 순으로 조사됨.
- 영농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으로 규모, 작목을 확대하여 농업에 계속 종사하겠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였고, 향후 농촌 환경이 좋아서 계속해서 거주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음.

## 2. 귀농·귀촌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즉, △정책개발 부문, △지원체계 구축 부문,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으로 이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먼저 정책개발 부문은 여타 부문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책개발 방향에 대해서만 논함. 지원체계 구축 부문은 민·관 각각의 지원체계와 상호연계 방향을 논의함. 지원내용 부문은 설문조사 결과 및 귀농실태 등을 토대로 귀농·귀촌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함.



<그림 IV-8>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 가. 정책개발부문

### 1) 귀농·귀촌 수요예측과 정책 투입의 균형

- 그간 지속돼온 이농현상은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음. 따라서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 발전기반을 닦는 것은 농촌관련 정책에 있어 시급하며 긴요한 사안임. 따라서 귀농·귀촌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농촌관련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지자체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임. 수요측정이 선행돼야 그에 맞게 예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
- 귀농·귀촌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통계나 농림수산업 부문 취업자 통계가 있으나,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 전입자들을 모두 '의미 있는 귀농·귀촌 정책 대상자'로 단정할 수 없음. 그리고 신규 취업자들을 모두 '귀농자'라고 정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귀농' 또는 '귀촌' 인구 통계의 작성이 필요함.
- 한 예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귀농', '귀촌'을 가리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구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도록 한 것임. 25개 농촌 기초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대략 10~25개 정도의 세부사업들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음. 이 세부사업들은 중복되어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진 사례 중에 하나임.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귀농·귀촌 관련 지원시책 수요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전국 수준의 귀농·귀촌 관련 통계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음. 귀농·귀촌 현상이 지역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출현하지는 않기 때문임.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지역의 귀농·귀촌 수요 등 관련 통계를 시급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sup>15)</sup>.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2011(1) 제작성.

## 2) 도 차원의 귀농·귀촌 창업프로젝트 공모

- 귀농·귀촌 프로젝트의 성공과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응집성과 임계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즉, 프로젝트별 대상지역 범위가 고려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면적이 넓지 않은 만큼 프로젝트별 대상지역의 범위를 광역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나가야 함.
- 유럽의 농촌개발 사례를 보면, 단위 사업권역이 넓을수록 단위 사업권역 내에서 사업 주체들 간 경쟁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남. 따라서 좀 더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귀농·귀촌 창업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공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공모는 시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파일럿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진행함. 단, 사업의 혁신성과 시 연계사업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광역단위 귀농·귀촌 연구지원 확대

- 다음에 논의하게 될 귀농·귀촌 지원체계 가운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귀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수적임. 그러나 연구지원 사업을 개별 시 단위에서 수행하기에는 재정적, 인력 측면에서 한계가 따를 수 있음. 이와 함께 현재 민간 컨설팅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귀농 교육과 컨설팅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이들 민간 컨설팅 조직이 지역 내 업체가 아닐 경우 컨설팅이나 교육 경험의 지역 내 지속적 유·공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도내 대학이나 도 산하 연구기관 내에 농촌인구 변동 및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한 연구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내 귀농·귀촌 성공사례 발굴, 가이드북 및 매뉴얼 개발, 위원회와 시 지원센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 귀농·귀촌관련 세미나·포럼 조직 등의 기능을 도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장 활동가 육성과 민간 전문가 및 단체 육성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함.

- 이 같은 연구기능의 확대는 역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4)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세부 조건이나 변수들이 존재함. 예를 들어, 귀농·귀촌 희망자의 이주 농촌지역 선정문제, 이주 후 가계 영위 가능성 문제, 주거·토지 확보 및 영농기술 교육 후 성공적인 농촌 정착 가능성, 귀농 및 영농 정보를 찾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맺는 데 들어가는 ‘거래비용’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따름.
- 때문에 귀농·귀촌 희망자를 끌어들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일견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함.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 틀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채워야 할 공백이 많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더욱 섬세한 노력이 많이 필요함. 설문조사에서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익명적 다수의 귀농·귀촌 희망자 모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유치와 선택·집중적 관리’라는 관점에 기초한 홍보 전략과 프로그램임.
  - 둘째, 귀농·귀촌자들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촉진할 지역의 분위기



를 조성하는 일

- 셋째,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추진할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일임.

-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민간부문 주체들이 협력하여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실행조직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귀농·귀촌의 문제가 농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조치라 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을 촉진하려는 농촌 지역의 정책적 노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임. 그 가운데 몇몇 농촌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책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다양한 관련 정책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구성임. 지방자치단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것을 한데 모아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할 행정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둘째,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에는 지역의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함. 귀농·귀촌 담당 지자체 부서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사업 실행조직이라 할 수 있음. 그 사례로, 진안군의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서천군의 '귀농인 협회', 남원시의 '도시민 유치 협의회' 등과 같은 민간 활동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귀촌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소통기능을 확보해야 함. 귀농·귀촌자들의 경력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 어느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 나. 지원체계 구축부문<sup>16)</sup>

### 1) 민간주도 전담기구 구성

- 하드웨어적 정책사업은 예산 집행이 사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

16) 전북발전연구원, 도시민의 귀촌형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2009. pp.138~143. 제작성.

문에 지자체 담당자가 정책사업 과정에 크게 관여할 필요 없이 행정 작업만으로도 사업집행이 가능함. 그러나 네트워크와 주민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 중심의 귀농·귀촌사업에서는 공무원이 귀농자 및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과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이와 같은 연성적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도 이 같은 한계를 경험하고 연성적 정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였음.
- 따라서 귀농·귀촌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는 독립된 민간조직 중심의 전담기구 구축이 필요함. 귀농·귀촌 전담기구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와 귀농·귀촌 활동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이 필요함.
- 귀농·귀촌 전담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sup>17)</sup>와 실제 귀촌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위원회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전문 자문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사업수행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단체가 계획서를 제안하도록 함.
- 각 기구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위원회 : 귀농·귀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적권한을 가진 귀농·귀촌위원회를 설치
  - 귀농·귀촌자 recruit 심사(자격 및 사업계획)

---

17) 지난해 4월 김완근 전 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를 발의했지만, 현재 까지 조례상에 남아 있는 위원회 구성이 안됨.

- 귀농·귀촌자 지원사항의 결정 및 지원기능의 조정
- 사후관리·감독사항의 결정
- 귀농·귀촌지원센터
  - 실질적 사업수행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
- 귀농·귀촌 지원 자문그룹
  - 귀농·귀촌위원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
  - 귀농·귀촌 관련 세미나·포럼 조직
  - 귀농·귀촌 관련 체계적 연구 지원



<그림 IV-9> 귀농·귀촌 전담기구(예시)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도시민의 귀촌형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2009, p139, 재작성.

## 2)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협의회 구성

-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가진 귀농·귀촌 사업을 위해서는 시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와 도 간의 협력체제 구축도 필수적임. 시 지자체간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시 지자체와 도 간의 역할분담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도 협의회는 귀농·귀촌관련 전문가, 도 및 시 담당공무원, 시의 귀농 협의회 대표로 구성함. 협의회를 통해 도 차원의 주요 귀농·귀촌 정책

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함. 도 협의회는 앞서 제시한 귀농·귀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초기 작업을 수행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인 행정·입법 지원업무를 수행함. 또한, 귀농·귀촌 지역 정책 틀의 작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3) 체계적인 귀농·귀촌 전담창구 및 전담부서 개설

- 도 귀농·귀촌협의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제주지역으로의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 차원에서 상담하여 교육기관이나 지역을 사전에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함. 도와 시는 상이한 지역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초점도 차이가 날 수 있음. 시 단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상담체계는 지역과 귀촌인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됨. 따라서 도 차원의 귀농·귀촌 전담창구나 전담부서를 개설하여 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해야 함.
- 도의 귀농·귀촌 전담창구는 도청이나 농업기술원 내에 전담공무원 1인과 계약직 2~3인 정도로 구성하여 귀농·귀촌인 상담, 시 단위 네트워크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다.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sup>18)</sup>

### 1) 귀농·귀촌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실행

- 기존의 연구나 정부 귀농·귀촌 정책은 주로 영농후계인력 양성이나 은퇴 후 전원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한편, 귀촌 동기에 따라 귀촌인은 4개의 집단, 즉 기업가형, 소규모 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는 영농 외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진 귀촌인이 존재하며, 전원생활을 원하는 유형의 경우도 외국과는 달리 은퇴계층이 아닌 3~40대가 다수 존재함.

18) 전북발전연구원, 도시민의 귀촌형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2009. pp.140~144. 제작성.

- 따라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영농승계형’의 경우, 기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타 유형에서는 각각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요구됨. 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가형’은 농촌에서 주로 영농을 통해 고소득을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임. 이들에게는 주로 자금과 토지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보다는 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창업형’의 경우는 귀농·귀촌의 목적이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짐. 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지역 내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상담,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이들은 고학력의 전문직·판매직에 종사한 계층으로 창업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전원형’은 전원적 삶을 추구하며, 주로 농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태어나 전문직 종사 경험이 있는 집단임. 따라서 지역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지역외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내 역량 강화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2) 귀촌자 창업 활성화 위한 창업교육 우선 지원

- 지역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지역인구의 유지와 고용창출임. 이를 위해서는 영농 외 분야에서의 창업활동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함. 이는 향후 농촌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이 외부에서 온 귀농·귀촌자의 창업활동에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것임.

- 귀촌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창업을 원하는 많은 귀농·귀촌자들이 예상 외로 매우 허술하고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창업 전에 이들이 자신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창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 3) 귀촌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 귀촌자의 지역 내 성공적인 정착은 대부분 6개월~1년 내에 결정됨.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경우는 대부분 2~3년 이내임. 귀농자가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과 지역적응이 가장 큰 이유임. 많은 경우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귀농 초기에 기본적인 소득 확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귀촌 초기에 지역 내 연착륙을 통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마을사무장, 보육교사, 특기생 교육, 마을 행사 및 발전사업 기획·집행 참여 등)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신규 귀촌자에게 1~2년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내 정착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독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1~2년 후에 이들이 사회적 일자리를 졸업하게 되면 신규 귀촌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함.

### 4) 선도적 귀농·귀촌 프로젝트 실행

- 귀농·귀촌 사업이 귀촌인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귀농·귀촌 사업을 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임. 또한,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의 성공이 동기부여나 주민참여에 매우 중요함. 즉, 지역 내 실천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이 향후 프로젝트 수행의 밑거름이 됨.

- 사례연구에서 보았듯이, 귀농인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농산물 가공, 유통분야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선도 프로젝트 선정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향후 귀농·귀촌 창업을 촉발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사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체험·교육과 관련된 분야
- 창업으로 인해 귀농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 등

## 5) 귀농 단계별 지원방안

- 귀농자를 귀농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귀농 인식단계, 귀농 탐색 및 결심단계, 귀농 준비단계, 귀농 실행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더 구체적으로는 귀농 결심단계, 가족 동의단계, 작목 선택단계, 영농기술 습득단계, 정착지 물색단계, 주택 및 농지 구입단계, 영농계획 수립단계, 귀농 및 영농단계로 구분 가능함.
- 사례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이들 단계 가운데 귀농을 준비한 집단이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귀농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고 귀농을 탐색하게 한 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즉, 귀농·귀촌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귀농자의 의사결정구조 및 준비·실행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위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됨.
- 귀농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과제를 도출하고 지원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농업 인력의 수급’이며, 귀농자 개인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귀농 정착 및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임.

-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대책의 유형은 <그림 IV-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문제영역별 세부 지원항목은 <표 IV-47>과 같음.



<그림 IV-10>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 대책 유형<sup>19)</sup>

19) 강대구, 귀농·귀촌대책방안, 순천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2006, p.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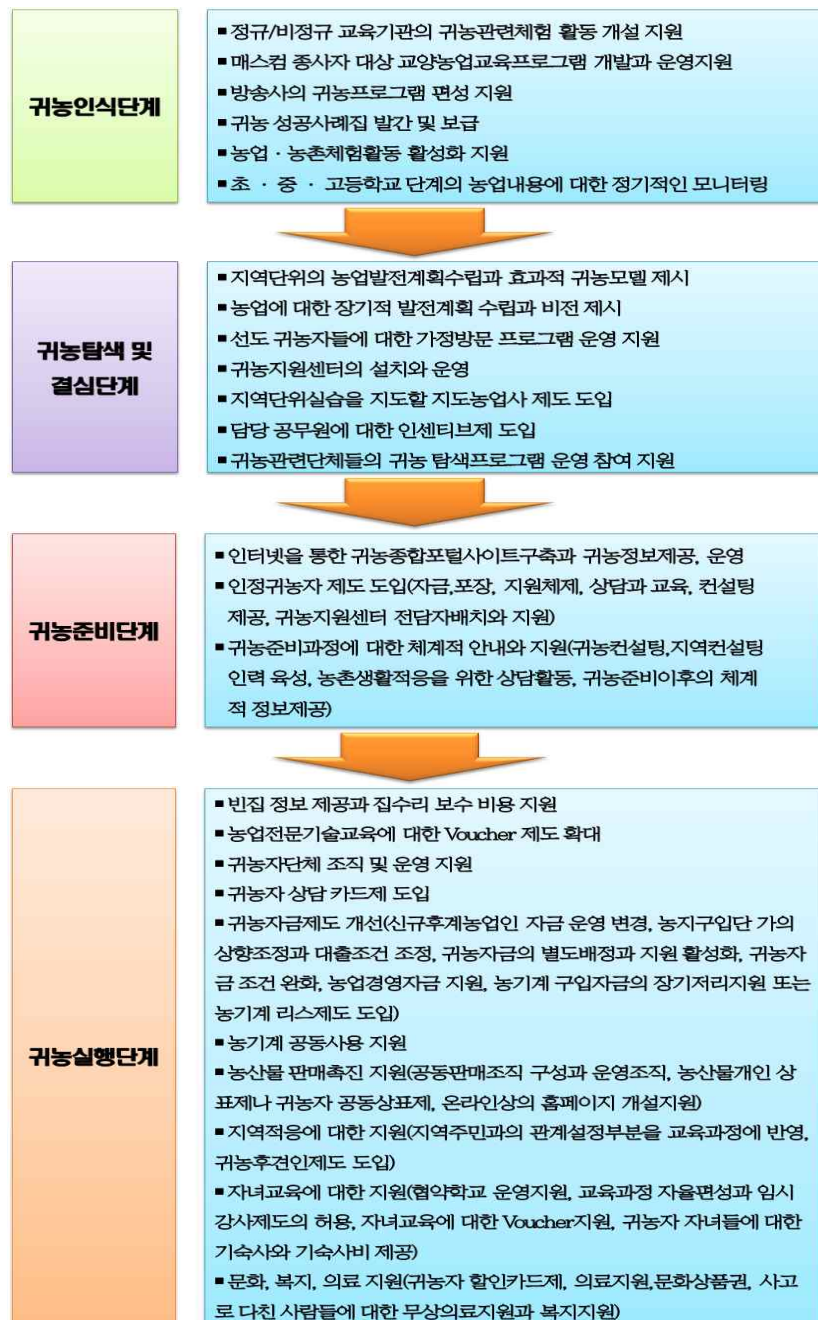


&lt;표 IV-47&gt;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대책 유형

귀농단계	생산 기반 영역			
	농 지	농기계/생산시설	경영자금	
귀농인식			견 학 비	
귀농탐색·결심	농지특성 안내	기계조작, 기술관찰 생산시설, 활용관찰	생산기술의 체험, 실습체험	
귀농준비	실습지 확보 농지정보제공	기계조작, 기술습득 생산시설, 활용기술 습득	연수비 지급, 과제자금 지급	
귀농실행	농지 확보(임대, 구입)	부족한 능력의 보충	생산기반 구입 /임대자금, 운영자금	
귀농단계	기술적 영역			
	생산기술	경영기술	마케팅	
귀농인식	기술체험	체험	판매체험	
귀농탐색·결심	생산기술의 체험, 실습체험	시기별 적절한 경영활동 관찰	시장가격 조사	
귀농준비	희망 작목의 결정, 희망 작목별 필요한 생산기술 습득실습	적정생산 시기 파악, 생산요소 배분방식 체험, 연중 계획표 작성과 실습, 예비 컨설팅	시장조사, 농산물수요 조사, 판매방식 장단점 비교와 결정	
귀농실행	희망생산 기술교육 제공, 품목별 단체 (연구회, 작목반 등) 구성 지원	작목별 적정경영 방식 보급, 상담, 컨설팅	적절한 출하시기 결정, 작목별 판매방식 결정, 공동판매망 구축	
귀농단계	사회 적응 영역			
	주거	자녀교육	의료	지역적응
귀농인식	농촌주거체험			
귀농탐색·결심	농가주택체험	일일교사체험	의료체계 관찰·견학	농촌생활 실습
귀농준비	주거지 결정, 주거방식결정, 주거방식에 따른 건축과 수리능력 확보	대안학교 운영 체험, 교사체험	의료지원상황 파악, 전통의학검토, 건강유지법 습득	지역주민과 얼굴 익히기, 귀농지 알기, 귀농방식에 따른 적응
귀농실행	주거방식의 실천, 부족부분 개선	대안학교 운영진이나 후원자 구성/ 참여	의료지원체계 형성, 의료보험/건강보험 확보	이질적 농업생산 방식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해소

자료 : 강대구, 2006, 귀농·귀촌대책방안, 순천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p.162.

○ 귀농단계별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그림 IV-11>과 같음.



<그림 IV-11> 귀농단계별 귀농지원방안

자료 : 강대구, 2006, 귀농·귀촌대책방안, 순천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p 163.

## V.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최근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임.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 2의 인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행태의 변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9년 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고 준비·실천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귀농·귀촌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현실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과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실태조사·분석해 봄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자와 현재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함.
- 귀농·귀촌관련 주요 실태조사 내용은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이후 애로사항,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중요한 것, 향후계획 등을 조사·분석함.

- 조사·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정책개발 부문, △지원체계 구축 부문,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정책개발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수요예측과 정책 투입의 균형,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귀촌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단위 귀농·귀촌 연구지원 확대, △도 차원의 귀농·귀촌 창업프로그램 공모 등을 제시함.
- 지원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프로그램 특성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행정조직과 독립된 민간주도 전담기구 구성, △시 지자체와 도 간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전담창구 개설 등을 제안함.
- 지원방식 및 내용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실행(안정적인 소득, 토지 확보, 운영자금, 영농기술 등), △귀촌자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지역 내에서 실천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와 같은 선도적 귀농·귀촌 프로젝트 실행, △귀농 단계별 지원 방안 세분화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사안들이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부문 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바탕에는 귀농·귀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 지역농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함. 즉, 귀농·귀촌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농업 인력의 수급방법이면서 새로운 인적 자원의 유입을 통한 다각적인 농촌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긴요한 농촌발전 정책수단이라 하겠음.

## 2. 정책 제언

- 인구 유입 및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 귀농·귀촌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큼. 하지만 귀농·귀촌은 귀농 초기 정착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겪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은 귀촌자의 준비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귀농·귀촌의 지역 내 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지원이 미흡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귀농·귀촌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 이외에 주목할 만한 사안들을 살펴봄.

### 가. 폐교 등을 귀농·귀촌마을 및 연수원으로 조성

-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가장인 30~50대의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재에 직면함. 폐교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이 이들을 위한 조기정착 및 노동력 문제 해소를 도울 수 있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 마을에 거주하면서 품앗이가 가능하고, 고가의 농기계도 공동구입함으로써 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원-원' 할 수 있음. 영농 초보자인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시행착오와 해결방법을 정보교환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임. 또한, 낯선 땅에 정착하려는 데서 오는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작물생산을 통한 브랜드화 등 경영 문제에도 공동대처할 수 있으며, 공동생산·공동분배에 의한 노동력 결집과 기계화를 농업현장에 직접 접목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생산과 유통 등의 분업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하나의 회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1인 위주의 귀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
- 귀농 반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여성들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자녀 교육과 양육문제를 비롯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해결, 귀농초기 문화적 이질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폐교 자

체에서 EM교육, 천연염색,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제조업 등을 여성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음.

- 이처럼 폐교를 이용한 귀농·귀촌마을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명분도 갖추게 되며, 이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폐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습형과 숙박형을 혼합한 '귀농·귀촌 연수원' 설립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미국 썬-시티'의 중·장년층(i턴형) 농촌정착 지원모델

- 썬-시티는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되는 은퇴자(실버인력) 4만 명이 휴양을 위해 조성되었음. 제주가 관광지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공무원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의 정착을 도움으로써 이들을 찾는 자녀와 가족 등을 유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새로운 관광패턴을 창출할 수 있음.
- 도시생활을 접고 전원생활 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경제적 이득보다는 농촌생활의 편안함을 영위하고자 함. 따라서 친환경 농법 등을 통한 농산물을 생산해 자급자족하고 이를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에게 보낼 수 있는 장점 등을 갖추고 있음. 제주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명목도 존재하는 만큼 농촌지역의 새로운 경제활동 구조를 유발시킬 수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적은 수의 가족단위 귀농·귀촌의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농촌체험활동과 함께 휴양형 관광을 접목하는 방안도 있음.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현재 운영중임. 여기에 더하여 감귤나무를 분양하고 이를 농장주가 관리하며 향후 수확철이나 휴가를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농장으로 유인하는 사례임. 최근 관광패턴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만큼 제주에서의 농가생활을 체험하고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농장주와 소비자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임.
- 예를 들어 감귤나무 지주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감귤 꽃이 피는 시기부터 열매가 맺히고 적과하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 등을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사진 등을 업데이트해 온라인상에서 농사를 짓는 재미를 유발할 수 있음. 수확한 농산물은 소비자의 주변으로 확대되고 홍보도 극대화해 새로운 소비자가 형성돼 귀농인의 경제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나. 멘토(mentor)와 멘티(mentee)를 연계한 육성방안

- 지역에서 농학을 전공한 대학생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와 귀농·귀촌인들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임. 특히 이들 대학생을 자신의 고향에 배치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음.
-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힘든 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문제이며, 평생 쌓아온 농사 노하우를 초보자에게 전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제주의 언어가 타 지역 출신들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그 중심에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가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인간적 친밀감은 곧 정착과 직결되며, 토지 구매와 대여 등도 도울 수 있음.
- 이들 대학졸업자들이 현장에서의 풍토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의 농사 특성에 따른 노하우 등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귀농·귀촌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현지의 농부들의 현장 점검과 지도가 뒤따라야 함.
- 2~3년간 중장기적 멘토 육성사업은 향후 귀농·귀촌정책 집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음. 귀농·귀촌인 출신으로 정착에 성공한 멘토는 새롭게 귀농·귀촌을 원하는 멘티에게 보다 손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멘토 1명이 멘티 2명을, 2명이 4명을, 4명이 8명의 멘티를 교육할 수 있고 정착단계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음. 이 같은 방법은, 정착하는 데 최소한 3~4년이 소요된다는 제주지역 귀농·귀촌의 현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귀농·귀촌 성공자들을 활용한 유급제 귀농·귀촌 길라잡이제도의 도입과 귀농·귀촌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이나 일정 기간 농사를 배울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세

- 귀농·귀촌 성공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정착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행정지원이 절대적임.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식어가는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음.
- 제주시가 1차산업 분야에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농어업인 100인을 선정해 100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서귀포시는 지난 8월 도내 최초로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정보지원팀을 신설했음. 이는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귀농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례 및 자금 알선을 비롯한 주택지원 등 관련 예산 반영을 담당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각 실과에서 추진중인 귀농인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또한, 귀농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과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해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귀농정착인 DB화와 귀농인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한다는 자세로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임. 행정의 이 같은 노력은 귀농·귀촌자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귀농·귀촌관련 담당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 이에 따른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일례로, 지난해 4월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가 발의됐지만 조례에 제시된 위원회 구성이 현재까지 답보상태임.
-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의 주문사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제주를 ‘귀농·귀촌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4가지 정책의 조기실행을 주문했는데, 그 내용은 △기존 귀농·귀촌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향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조례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지원위원회 조기 구성 및 내실 운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귀농·귀촌센터’를 별도 기구로 설립·운영, △농업기술원



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학교’ 확대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 등임.

- 그러나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정책이 최소화 되고 있음. 현재 지원사업인 농업창업 지원, 주택구입 지원 등 융자부분을 제외한 직접적인 보조사업인 빈집수리 지원과 농업인턴사업은 올해부터 일몰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전반적으로 행정지원은 퇴보하고 있는 데다 업무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효력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따른 지원규모도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정책지원의 축소로 인해 귀농·귀촌인의 귀농에 대한 관심도 비례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특별법상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필요하며, 제주가 안고 있는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와 관련한 귀농인에 의한 소득작물 수확은 직결돼 있음. 기후변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귀농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다. 이주민 귀농교육과 원주민 귀농교육 분리 및 give & take 마인드

-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귀농·귀촌 유형, 농업 초보자, 출신지역별 문화나 관습 등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원주민 귀농교육이 서로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마을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해 마을 소일거리나 경조사 등에 먼저 참여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이나 특기를 마을에 먼저 제공 또는 기부하는 give & take 마인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멘토링제도나 마을주민과의 결연안내 등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라.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 공론화

- 제주출신이어서 오히려 당하는 역차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함.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도시화된 신제주나 노형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였을 때 귀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 반면에 서울 강남에서 살던 이가 이들 지역으로 이사 와서 귀농인으로 인정해 달라 요구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 할 근거 없음. 이 같은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귀농 희망자들이 제도적 지원 하에서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민에 적합한 조례개정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함.

## 참 고 문 헌

- 강대구(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 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농림부.
- 강대구(2006a),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 강대구(2006b),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과천: 농림부.
- 강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 강대구(2009), 귀농, 귀촌의 현황과 과제, 귀농·귀촌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 경남발전연구원(2010), 귀농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정책방향.
- 구본석(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수 외(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성원(2009.4), 귀농·귀촌종합대책,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대응 방안 토론회, 전라북도청.
- 김정섭(2009), 귀농, 귀촌에 대응한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역할, 귀농·귀촌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 김주현(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 남정덕(2000), 귀농형 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농림수산식품부(2009), 귀농·귀촌 종합대책.
-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 농업경영정보관실(1999), 1998연구사업보고서, 농촌진흥청.
- 서규선·박병덕(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송미령·박석두·성주인·박경철(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2006), 귀농·귀촌이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학열(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이동하(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

장동현(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전북발전연구원(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정대영(2001),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삼철(2011), 충북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2막 땅에서 꽃피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농업전망 2011, 제11장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미국 USDA, Farm Service Agency, Retrieved 2006,1.3.

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01). 新規就農ガイド事業.

<http://www.ihalla.com>

<http://www.nca.or.jp/Be-farmer/>

<http://www.fsa.usda.gov/pas/publication/facts>

<http://www.google.co.kr/>

<http://www.naver.com/>

## 부록 1 ;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지 - 1

(ID NO : )

#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서

본 설문은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에 대한 영농활동과 계획 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귀농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소기의 결과 도출을 통하여 귀농·귀촌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자 :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고 상 환  
농촌지도사 김 동 현

☐ 귀농·귀촌 동기 및 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 하시거나  
( ) 또는 빈칸에 적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농촌생활이 좋아서                      ②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③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④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⑤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⑥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⑦ 사업실패나 실직                        ⑧ 인간다운 삶을 위해  
⑨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생태, 환경, 소박한 삶 등)  
⑩ 기타( )

2. 귀하가 제주지역을 귀농·귀촌 대상지역으로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이라서            ② 주변인 소개            ③ 타 귀농인의 소개  
④ 지자체의 홍보        ⑤ 언론매체의 소개        ⑥ 자연환경이 좋아서  
⑦ 관광 등 농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동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⑧ 친환경 농업생산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⑨ 기타(            )





10.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1) 안정적 농업소득	①	②	③ ④ ⑤
2) 농외소득 확보 여건	①	②	③ ④ ⑤
3) 여가시간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문화시설	①	②	③ ④ ⑤
5) 의료여건	①	②	③ ④ ⑤
6) 교육여건	①	②	③ ④ ⑤
7) 토지확보	①	②	③ ④ ⑤
9) 농작물 재배기술	①	②	③ ④ ⑤
10) 생산물의 판매 기술	①	②	③ ④ ⑤
11) 운영자금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12) 마을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13)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주민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15) 정부의 정책지원	①	②	③ ④ ⑤

☐ 귀농교육 참여 동기와 의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 하시거나  
( ) 또는 빈칸에 적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

- ① 귀농 정책자금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②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③ 귀농자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④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습득  
⑤ 기타( )





15. 귀농·귀촌에 대한 귀하의 준비정도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귀농·귀촌 전 다양한 귀농교육 받음	① ② ③ ④ ⑤		
2) 귀농자금은 충분히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귀농 전 주택문제를 해결함	① ② ③ ④ ⑤		
4) 귀농 전 자녀 학교 문제를 해결함	① ② ③ ④ ⑤		
5) 귀농 전 영농기술 문제를 충분히 해결	① ② ③ ④ ⑤		
6) 귀농 전 농지구입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7) 귀농을 도와줄 영농 조언자 확보	① ② ③ ④ ⑤		

☐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별	①남 ②여	연령	세	전체 가족원	명	귀농 가족원	명
결혼여부	①기혼 ②미혼	출생 지역		귀농 전 거주지역		귀농 귀촌지역	
최종학력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대학원재학)						
귀농 전 직업	① 사무/판매/서비스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생산기술직 ⑤ 학생 ⑥ 전업주부 ⑦ 경영/전문직 ⑧ 은퇴/무직 ⑨기타( )						
귀농 전 연간 소득							

감사합니다.

##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ID □□□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래비전 제시 및 각종 현안 해결방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평소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느낀 점과 농촌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제주지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 승 진 연구위원(☎ 726-6147, FAX : 751-216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고 상 환 박사(☎ 760-7215, FAX : 760-7299)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박사(☎ 726-7403, FAX : 751-2168)

☐ 귀농·귀촌 동기 및 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귀농·귀촌교육 관련 참여 동기와 의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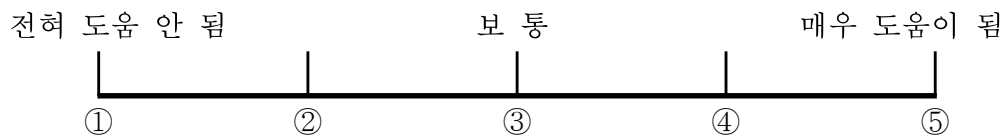
6. 귀하께서는 귀농·귀촌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6번 항목에서 ①번 응답자) 귀하가 귀농교육에 참여 동기(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귀농 정책자금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②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③ 귀농자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④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습득  
⑤ 기타(                      )

8. (6번 항목에서 ①번 응답자) 귀하의 귀농교육이 영농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농·귀촌 활동과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9. 귀하가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중인 귀농·귀촌 활동의 유형과 규모는?

구분	노지작물 재배	시설작물 재배	축산	농산물 가공	관광농업	기타 (      )	미정
품목							
규모	평	평	두				

※ 품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온주밀감, 콩, 맥주보리, 백합, 양돈, 된장가공, 펜션 등

10. 귀농·귀촌을 위해 귀하께서 **계획** 또는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금의 규모**는?  
(                      만 원)

10-1. 귀농·귀촌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였거나 마련하셨습니까?

구분	퇴직금	자산 처분	재산 상속	개인 대출	사채	정책 보조	정부 융자	기타 (     )
비율	%	%	%	%	%	%	%	%

11. 귀농·귀촌생활과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 원/년)

12. 귀농·귀촌에 대한 귀하의 **준비 정도**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귀농·귀촌 전 다양한 귀농교육 받음	① ————— ⑤		
2) 귀농자금은 충분히 확보	① ————— ⑤		
3) 귀농 전 주택문제를 해결함	① ————— ⑤		
4) 귀농 전 자녀 학교 문제를 해결함	① ————— ⑤		
5) 귀농 전 영농기술 문제를 충분히 해결	① ————— ⑤		
6) 귀농 전 농지구입 문제 해결	① ————— ⑤		
7) 귀농을 도와줄 영농조언자 확보	① ————— ⑤		
8) 귀농 결심시 가족이 적극 찬성	① ————— ⑤		

13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는?

항 목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1)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2) 마을사람들과의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3) 귀농·귀촌지역에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4) 재배 작목에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5)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6)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7) 여가나 문화활동 수준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8) 지역농업관련기관의 업무협조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⑤</div>		
9) 의료 및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①②③④</div>		


14. 귀농·귀촌 이후 다음의 각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복수응답> ⇒ 아래 “예시”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3개를 표시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재배기술 문제            | ② 경영기술의 습득 문제        |
| ③ 판매기술의 습득 문제        | ④ 영농 운영자금의 조달 문제     |
| ⑤ 토지 구입자금의 확보 문제     | ⑥ 농기계(시설) 구입 및 수리 문제 |
| ⑦ 노동력 확보 문제          | ⑧ 생산물의 판매처(판로) 확보 문제 |
| ⑨ 영농기술에 대한 조언자 확보 문제 | ⑩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
| ⑪ 작목 및 품종 선택 문제      | ⑫ 자녀 교육 문제           |
| ⑬ 여가나 문화활동 문제        | ⑭ 의료 및 복지시설 문제       |
| ⑮ 농업·농촌정책 및 제반환경 문제  | ⑯ 농업관련 기관과의 형성 문제    |
| ⑰ 생산자·농민 단체 가입 문제    |                      |

15.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다음의 각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아래 “예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개를 표시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안정적인 농업소득      ② 농외소득 기회      ③ 여가시간  
④ 다양한 문화시설      ⑤ 의료여건      ⑥ 교육여건  
⑦ 토지확보      ⑧ 농작물 재배기술      ⑨ 생산물의 판매기술  
⑩ 운영자금의 확보      ⑪ 마을 분위기      ⑫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자  
⑬ 지역주민과의 교류      ⑭ 정부의 정책지원

16 귀농·귀촌 활동 결과, 영농과 관련한 귀하의 앞으로 계획은?

- ① 규모, 작목을 확대하여 농업에 계속 종사
- ② 규모, 작목을 현상유지하며, 농업에 계속 종사
- ③ 규모 현상유지, 작목전환 고려
- ④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부업고려
- ⑤ 타 직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사는 부업으로 고려
- ⑥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 고려
- ⑦ 기타( )

17. 귀하의 향후 농촌거주 계획은?

- ① 계속하여 농촌에 거주                      ② 가능하면 농촌에 계속 거주  
③ 가능하면 도시로 이주할 계획              ④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다

17-1. (17번 문항의 ①과 ②번 응답자) 귀하께서 농촌에 거주하신다면, 그 이유는?

- ① 적절한 소득 때문에
- ② 농사일이 좋아서
- ③ 농촌환경이 좋아서
- ④ 특별히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서
- ⑤ 주변 이웃이나 주민들 때문에
- ⑥ 농업·농촌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 ⑦ 기타( )



① 낮은 소득 때문에                      ② 자녀교육이 불편·불리하기 때문에

③ 교통·문화가 불편하기 때문에        ④ 열악한 의료·복지 여건 때문에

⑤ 고된 농사일 때문에                      ⑥ 농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⑦ 기타(    )

① 있음                      ② 없음

(                      년도에 귀농 /                      년도에 귀촌)

구 분	귀농( ) 귀촌( )	성 별	①남 ②여	연 령	세	가족 구성원 수	명
출생 지역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			귀농귀촌(예정) 지역		
최종학력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대학원 재학)						
귀농·귀촌 전 직업	① 사무/판매/서비스                  ② 공무원                  ③ 자영업 ④ 생산기술직                  ⑤ 학생                  ⑥ 전업주부 ⑦ 경영/전문직                  ⑧ 은퇴/무직                  ⑨ 기타( )						
귀농·귀촌 전 연평균 소득수준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3천만원 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 미만 ⑤ 4천만원~5천만원 미만                  ⑥ 5천만원 이상						

- 157 -

## 부록 2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 정) 2010-04-21 조례 제 630호

(일부개정) 2011-01-18 조례 제 683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 3. “농어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4.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5.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인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등 각종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농어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
  5.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
  6. 자녀학자금 지원
  7. 귀농인의 집 지원
  8.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9.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 ② 귀농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1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2. 위촉직 위원 :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농어업관련 단체의 장, 농어업생산자 단체장,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어가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귀농인이 보조나 용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
  -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5.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6.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83호, 2011.1.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ABSTRACT>**

**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s of  
Return-Farm · Return-Rural in Jeju**

Kang, Seung-Jin · Ko, Sang-Hwan

Recent phenomenon in rural areas to watch one that is moved to the rural citizens,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Return-Farm · Return-Rural, is a reality.

Simply Return-Farm · Return-Rural, as opposed to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and rural citizens' awareness about constant change and after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s return to rural areas and find new jobs for the rest of your life to enjoy the second is showing Return Farm · Return Rural behavior

However, such a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demand of the Return Farm · Return Rural measures to establish, but it still lacks practical reality is Return Farm · Return Rural-citizens

Therefore, this study Return Farm · Return Rural-citizens difficult to know the reality, Return Farm · Return Rural-citizens for successful settlement in rural areas who came to understand actual conditions found Return Farm · Return Rural-citizens

For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ways centered on the activation of Return-Farm · Return-Rural △ Policy Development Division, △ Support System Division, △Support and Information Sector Approach etc has been presented, separated by three divisions.

keywords : Return-Farm · Return-Rural, moved to the rural citizens, successful settlement

## 연구진

---

연구책임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고 상 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자문위원	백 금 탁	한라일보 기자
	양 진 철	미래리서치 대표
	이 지 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설문조사	최 영 근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초빙연구위원

---

기본연구 2011-18

##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

발행인 || 양 영 오

발행일 || 2011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청사로1길 18-4번지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http://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ISBN : 978-89-6010-215-6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